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책임자: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 연구부장)

공동연구자: 이민규 (경상대학교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교수)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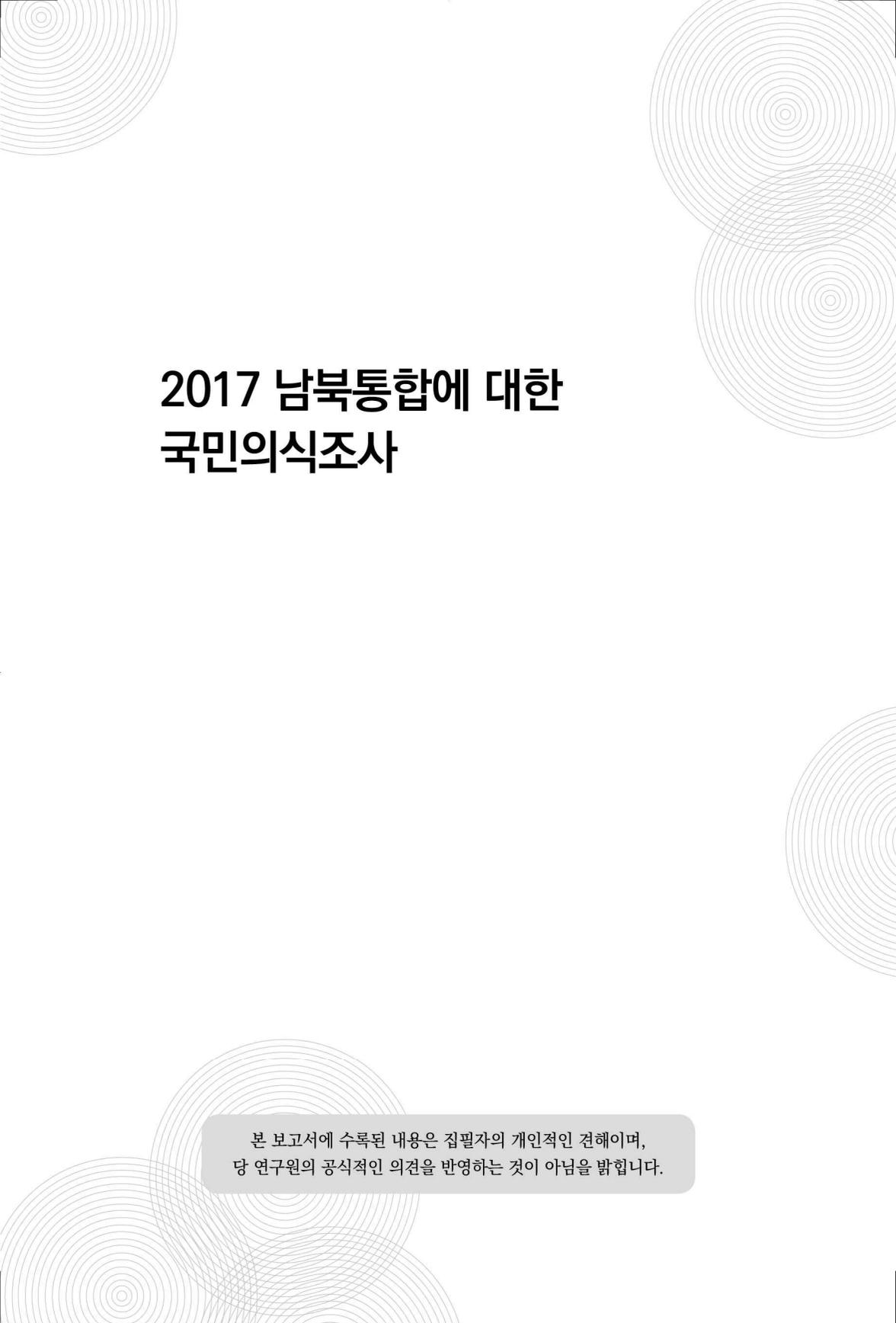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3/3년차)

KINU 연구총서 17-03

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저자	박주화, 이민규, 조원빈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두일디자인(02-2285-0936)
I S B N	978-89-8479-893-9 9334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남북 통일[南北統一]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7034326
가격	12,0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 약	13
I. 서론	21
1. 연구 목적	23
2. 조사 내용	27
3. 조사의 기본설계	31
II. 한국 사회의 통합인식	33
1. 통합의지	35
2. 통합역량	66
3.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105
III.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7
1. 통일·대북정책	119
2. 핵위협 평가	124
3. 대통령 리더십	126
4.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	127
IV. 심층분석	131
1.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	133
2. 사회통합 역량 결정요인	158
3.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 탐색	190
4.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211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V.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합의	229
참고문헌	243
부록: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4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71

표 차례

표 II-1	통일인식의 4가지 유형	37
표 II-2	연령별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태도	41
표 II-3	통일한국의 목표	63
표 II-4	연령별 북한에 대한 인식	109
표 III-1	통일·대북정책 요인분석 결과	119
표 IV-1	통일·대북정책의 4요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145
표 IV-2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측정한 16개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145
표 IV-3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군집별 4영역에 대한 평균 (표준오차)	150
표 IV-4	다섯 가지 사회갈등 상관관계 분석	170
표 IV-5	사회통합 역량 척도 기술통계	178
표 IV-6	국가기관 신뢰도 결정요인 회귀분석	179
표 IV-7	사회갈등 수준 결정요인 회귀분석	184
표 IV-8	성별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3
표 IV-9	연령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4
표 IV-10	학력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5
표 IV-11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5
표 IV-12	가정 소득 수준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6
표 IV-13	남북통일 이유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7
표 IV-14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시되는 것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8

표 차례

표 IV-15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199
표 IV-16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일 이익에 대한 ANOVA 결과	202
표 IV-17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다양성 공존에 대한 태도의 ANOVA 결과	203
표 IV-18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북한에 대한 태도와 핵위협 걱정의 ANOVA 결과	204
표 IV-19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들의 ANOVA 결과	205
표 IV-20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정치이념성향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의 ANOVA 결과	207
표 IV-21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일 후 갈등에 대한 ANOVA 결과	207
표 IV-22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합 장애요인에 대한 ANOVA 결과	208
표 IV-23	의사결정나무분석 목표변인과 독립변인	214
표 IV-24	의사결정나무분석 노드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215
표 IV-25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한 정도 분류 및 유형화	219

그림 차례

그림 II-1	통일의 필요성	35
그림 II-2	남북 평화적 공존 조건 하에서 통일의 필요성	36
그림 II-3	평화적 남북관계 없는 통일의 가능성	38
그림 II-4	'남북통일이 진정한 소망이다'에 대한 응답	39
그림 II-5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 지지 여부	40
그림 II-6	통일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감내할 용의	42
그림 II-7	통일을 위해 약간의 부담을 감내할 용의	43
그림 II-8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 찬성 여부	44
그림 II-9	한국 사회의 당면 목표로서의 통일에 대한 동의 여부	45
그림 II-10	경제문제의 통일문제에 대한 시급성 동의 여부	45
그림 II-11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	46
그림 II-12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	47
그림 II-13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민감성 비교	48
그림 II-14	통일의 삶에 대한 영향력 평가	49
그림 II-15	통일에 관한 헌법 인지 여부	50
그림 II-16	통일의 이유	51
그림 II-17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일의 이유 비교	52
그림 II-18	통일의 국가에 대한 편익	53
그림 II-19	통일의 개인에 대한 편익	54
그림 II-20	통일의 북한 주민에 대한 편익	55
그림 II-21	통일의 시기	56
그림 II-22	통일의 방식	56
그림 II-23	통일을 위한 국내적 조건	57
그림 II-24	통일을 위해 필요한 환경	58

그림 차례

그림 II-25 한국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59
그림 II-26 발전과 안정 부문에서의 목표	60
그림 II-27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60
그림 II-28 물질적/탈물질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61
그림 II-29 통일 이후 부문별 갈등 양상 예측	62
그림 II-30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가치	64
그림 II-31 통일 이후 통합 장애요인	65
그림 II-32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이주 의향	66
그림 II-3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67
그림 II-34 국가에 대한 영역별 자긍심	68
그림 II-35 애국심 평가	69
그림 II-36 한민족에 대한 인식 평가	70
그림 II-37 삶의 만족도	71
그림 II-38 기관별 신뢰도	73
그림 II-39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의 세부 응답	75
그림 II-40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의 세부 응답	75
그림 II-41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은 상대방을 신뢰한다'의 세부 응답	76
그림 II-42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의 세부 응답	76
그림 II-4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의 세부 응답	76
그림 II-44 대인 신뢰도 5문항 종합	77

그림 차례

그림 II-45 한국 사회 부패 수준 평가	79
그림 II-46 직업별 부패 수준 평가	80
그림 II-47 직업별 부패 연루 정도 평가	81
그림 II-48 사회단체 활동	84
그림 II-49 주요 기관에 대한 기부	85
그림 II-50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	86
그림 II-51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88
그림 II-52 한국 사회의 분야별 갈등 정도	88
그림 II-53 계층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89
그림 II-54 남남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90
그림 II-55 이념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91
그림 II-56 세대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91
그림 II-57 지역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92
그림 II-58 한국 사회 갈등의 장기적 영향력	93
그림 II-59 한국 사회의 민주성 평가	94
그림 II-60 사적 시민성 평가	96
그림 II-61 공적 시민성 평가	97
그림 II-62 권위주의에 대한 공감도(태도)	100
그림 II-63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102
그림 II-64 귀화자 증가가 국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103
그림 II-65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105
그림 II-66 북한에 대한 관심도	106
그림 II-67 북한 정보 획득 경로	107
그림 II-68 북한에 대한 인식	108

그림 차례

그림 II-69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	109
그림 II-70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추구 필요성 인식	110
그림 II-71	북한에 대한 항목별 인식	111
그림 II-7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13
그림 II-7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113
그림 II-7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 ..	115
그림 III-1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	120
그림 III-2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	121
그림 III-3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123
그림 III-4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지지도	123
그림 III-5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평가	124
그림 III-6	북핵 위협에 대한 관심도 및 북핵 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	125
그림 III-7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 덕목	126
그림 III-8	한국 정치구조에 대한 평가	128
그림 IV-1	통일·대북정책의 4영역의 지지도 평균	147
그림 IV-2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비율	149
그림 IV-3	북한 인식에 대한 4군집과 비율	152
그림 IV-4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별 북한 인식 4군집의 비율 ..	153
그림 IV-5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 ..	154
그림 IV-6	연령별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	155
그림 IV-7	이념 및 북한이탈주민 접촉 경험에 따른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	155

그림 차례

그림 IV-8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164
그림 IV-9	주요 사회갈등의 심각성	168
그림 IV-10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의사결정나무	216

요 약

본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이다. 본 연구는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일과 남북통합의 준비 정도를 가늠하며 통일과 남북통합을 추구하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모두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나라’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통일과 남북통합,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띤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압도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갈등이었으며, 이러한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현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 문항의 응답에 대한 단순 기술을 넘어 개별 문항의 조합, 그리고 그 조합에 대한 응답이 국민들의 어떤 믿음과 욕구를 표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마무리하는 3년 차 연구는 네 가지 문제의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지속성이다. 2년 차 연구에서는 남북통합의식을 크게 3가지 영역-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장기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년 차 연구에서는 2년 차 연구에서 확립된 남북통합의식의 3영역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경향, 배경 변수의 영향, 국민 인식의 변화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 및 남북통합과 관련된 갈등, 남북갈등의 현상과 그 원인에

요 약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북통합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집단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을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본다면 통일·대북정책에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남북통합과 관련한 현재 진행형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본 조사는 남북통합과 관련한 갈등 완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통일·대북정책은 분단 이후 정부가 주도하였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를 활용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일·대북정책 거버넌스를 강조하지만 결국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통합역량의 다양한 측면 중 사회 응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20~30대의 통일 의지가 50대 이상의 통일 의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소위 '통일 의지'의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당위적 통일을 기준으로 통일을 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유형화하였다.

요 약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의 남북통합의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서 통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역량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의 비율이 작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권위적인 성향 역시 작년 대비 상승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16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2016년 대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남남갈등과 관련한 심층분석에서 16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통일·대북정책을 압박정책의 관점, 관여정책의 관점, 인도적 지원의 관점, 대북사업의 관점 등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높은 집단인 압박-관여 병행집단(39.3%), 압박정책에는 긍정적이지만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 재개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압박중심 집단(17.8%),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 재개에는 긍정적이지만 압박정책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관여중심 집단(11.7%), 통일·대북정책 4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응답을 보인 무관심 집단(31.2%)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은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2년 차 연구에서 밝힌

요 약

대북인식의 4군집과 정확하게 대응되었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대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실용주의는 압박-관여 동시집단에 대응되었고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이며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주의는 압박중심 집단에 대응되었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대결에 대해 부정적인 자유주의는 관여중심 집단에 대응되었고 북한을 협력의 대상도, 대결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고립주의는 무관심 집단에 대응되었다.

남북통합과 관련한 갈등 완화를 모색한 심층분석에서는 법치와 사회경제구조, 대통령의 리더십, 대북정책 등에 대한 태도가 두 개의 종속변수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갈등 심각 수준 모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태도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변인들의 숨은 관계를 찾아내는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도,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정도, 그리고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조합하여 통일 필요성 인식 유형을 13개(합리적 통일지향형, 개인적 실리주의형, 국가실리주의-필요형, 국가우선형(애국주의형), 국가우선 중간형, 합리적 향수형, 향수형, 애매모호형, 개인우선형, 이기주의형, 국가실리주의-불필요형, 부담형, 국수주의형)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요 약

생각하는지 입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책은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우리 국민들의 통일·대북정책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통일·대북정책은 일반적으로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의 틀에서 이해됐다. 반면 본 조사의 연구 결과 우리 국민은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을 압박정책 또는 관여정책의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분화는 정책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는 압박 일변도 또는 관여 일변도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갈등적·대립적 양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의 병행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국민의 눈높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본 조사 결과는 통일·대북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외부에서 압박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나 관여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 경우 정책 선호가 개인 내에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치권이 통일·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 또는 통일·대북정책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정책 홍보나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수준이 아닌 대북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요 약

4군집의 대응은 통일·대북정책 선호의 근원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와 사회갈등 수준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규칙에 따른 국정운영,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준, 지도자의 갈등조정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 지점들을 밝히고 있다. 통일에 대한 13개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인 통일인식 교육 또는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예: 군사력, 경제력, 지정학적 이점, 무역)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일자리 창출, 징병제 폐지·모병제 전환 가능 등 통일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오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

주제어: 남북통합, 남남갈등, 통일인식, 대북인식, 통일·대북정책, 통합역량

Abstract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 et al.

This project surveye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integration assumed to consist of three constructs, the integration willingness, the integration capability, and attitude toward a subject for integration. We also surveyed the public opinion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residential leadership as relevant factors of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integ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illingness for integration has been worsening and that the integration capability remains the same compared to the last year.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has changed negatively but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has changed posi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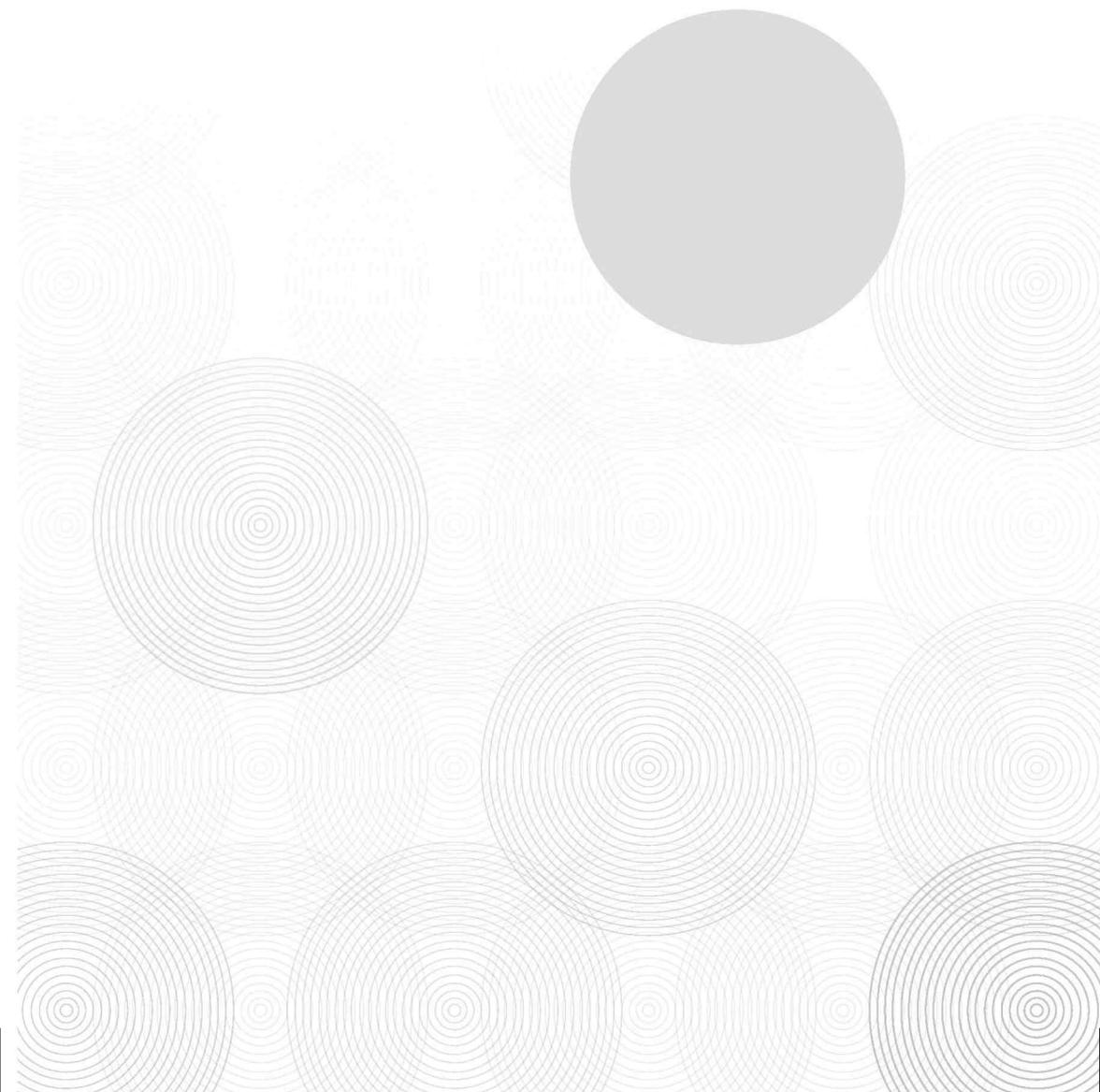
A more in-depth study found that the public preference for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policy regarding inter-Korean integration is classified into the four types. In addition, the decision-making tree analysis revealed that the attitude of unification necessity was divided into 13 different types. The result sharply contrasts to the traditional view of South-South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credibility level of the public

Abstract

toward the Korean government is very low. It also discussed influences affecting the level of credibility for the national institutions.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Inter-Korean Integration, South-South Conflicts, Attitude on Unification, Attitude on North Korea, Polici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tegration Competence

I. 서론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연구 목적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2017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응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져만 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차분한 반응에 대해 국내·외에서 ‘안보 불감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반응에 대한 피상적 분석에 불과하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년 차 연구에서 밝혔듯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일종의 ‘안보 무력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프로이트의 방어기제를 빌려 표현한다면 내면의 불안감을 ‘억제(suppression)’하거나 ‘부정(denial)’하는 심리가 한국 국민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생존배낭’ 구매 열풍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는 국민들에게서는 관찰하기 힘든 결과이다.

우리 국민이 표면적으로는 ‘안보 불감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안보 불안감을 억제 또는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국민들의 한반도 안보 상황, 더 나아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개별 문항의 응답이 아닌 개별 문항의 조합과 그 조합에 대한 응답이 국민들의 어떤 믿음과 욕구를 표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욕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과 남북통합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진보 10년, 보수 9년’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20년의 정부를 평가함에

있어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경제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지향성이 아닌 통일·대북정책의 지향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압도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갈등이다.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갈등의 현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안보 불감증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상정할 때의 정책 목표와 수단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차분한 반응이 무기력(helplessness)에 근거한 것이라고 상정할 때의 정책 목표와 수단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통일·대북정책에도 적용된다.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과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에서 통일·대북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이다. 본 연구는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일과 남북통합의 준비 정도를 가늠하며 통일과 남북통합을 추구하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마무리하는 3년 차 연구의 문제의식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지속성이다. 1년 차 연구에서는 통일을 넘어 남북한의 통합을 고려한 국민의식조사, 즉 남북한의 제도통합과 사회·심리적 통합을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년 차 연구에서는 남북통합의식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장기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년 차 연구에서는 2년 차 연구에서 확립된 남북통

합의식의 3영역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 경향, 배경 변수의 영향, 국민 인식의 변화 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및 2015년, 2016년 남북통합 국민의식조사와의 연속선 상에서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다양한 교차분석 및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통일 및 남북통합과 관련된 갈등, 남남갈등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북통합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집단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을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 간 갈등이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완화될지 악화될지는 미지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과 8·15 경축사, 그리고 UN 총회 연설 등에서 한국은 인위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통일은 평화적 과정의 결과라고 역설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는 사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초와 일치한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다. 통일이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본다면 통일·대북정책에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남북통합과 관련한 현재 진행형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정파적 조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대북정책에 따른 집단의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갈등의 현상을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 선호 유형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조사는 남북통합과 관련한 갈등 완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통일·대북정책은 분단 이후 정부가 주도하였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일·대북정책 거버넌스를 강조하지만 결국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통합역량의 다양한 측면 중 사회 응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통합역량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에 대한 평가, 중요한 대통령 리더십, 현재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평가, 정치제도 개혁 방향,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20~30대의 통일의지가 50대 이상의 통일의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소위 '통일의지'의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다. 1~2년 차 연구에서는 민족동질성에 입각한 통일당위론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통일당위론에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세대의 반응이 과연 남북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2년 차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가 통일을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남북관계를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젊은 세대는 통일을 남북의 제도적 통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통일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존 단계 역시 통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당위적 통일을 기준으로 통일을 원한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유형화하였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는 여섯 개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먼저 남북통합의식을 통합 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남북통합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새로운 리더십과 정치구조에 대한 의견, 그리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첫 번째 영역인 통합의지는 다시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구분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는 남북통합의 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 민족담론의 약화 등 현재 우리 사회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통합은 우리 사회의 잠재적 문제이지만, 통일 이후 남북통합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남북통합의 촉발점인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은 남북통합의 역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통일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한 공유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일, 그리고 통일국가의 비전에 대한 여론의 다양성과 통일성 수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통일의 필요성), 분단고착에 대한 견해, 통일과 관련된 정서, 통일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통일의 헌법적 가치, 통일의 이유, 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일을 위한 우호적 여건,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행동의도(통일 관련 세금)를 측정하였다.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에서는 통일국가의 방향성과 목표, 통일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견해, 통일 후 통합의 장애물 등을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두 번째 영역은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이다. 남북통합은 미래 진행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남북통합은 현재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통합이 남한과 북한 주민

의 심리·문화·사회적 통합에 초점이 있지만 통일로 발생할 갈등은 남북한 주민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 경제적 소수자, 교육 소수자, 에너지 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역량과 북한 주민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역량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통일로 인한 갈등은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통일로 인한 갈등의 해소는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에 달려 있다. 통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남북통합은 현재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 측정은 OECD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의 세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만족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 사회적 참여를 통해 개념화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종합적 인식과 부분별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부 영역 주제는 민주주의 발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경제성장, 사회보장, 과학기술의 발전, 스포츠, 예술과 문화, 군사력, 역사,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 10개로 구성되었다.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민족정체성은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5개 문항, 경제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대표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치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별로는 군대, 시민단체, 대통령, 노동조합, 종교단체, 대기업, 행정부, 언론, 사법부, 정당,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5개 문항(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마지막 개념인 사회적 참여는 정당 등 정치단체, 시민단체, 노조, 경영자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 친목단체, 교양교육단체, 기타 단체 등 9개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정도, 그리고 기부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리 사회 통합역량의 두 번째 영역인 사회적 포용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를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파악한다면,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통합을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미리 파악한다면, 남북한 통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갈등 정도를 질문하고 그 원인을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 개인 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 부족과 오해,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장기적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분야별 우리 사회의 갈등은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등 5개 분야에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역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 권위주의 의식의 정도, 다양한 인종·종교·문화의 공존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이 국가적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 통합역량의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 이동이다. 사회적 이동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지속될 것인지(사회구조의 안정성),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사회구조의 합법성), 사회구조의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지(사회구조의 삼투성)에 대해 7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세 번째 영역은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이다. 먼저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 정보 획득 경로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지원, 협력대상 그리고 경제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추상성이 높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추상성을 낮춘 구체적인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측정하였다(예: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등). 그리고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와 별개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 주민과 직접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첫 번째 영역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교류협력의 지속 여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도입 여부, 제재 지속에 대한 견해, 금강산 및 개성공단 문제 등 16개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북통합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마지막 영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북한의 핵위협이 걱정스러운지, 북한의 핵위협이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외 인구학적 특성은 개인적 변수, 정치 및 정책 관련 태도 변수, 경제적 변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변수는 결혼 여부, 학력, 종교, 신앙 활동 수준 등이다. 정치적 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 정당 선호도, 국회의원 투표 여부,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었다. 경제적 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 직업, 계층에 대한 자기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인구학적 특성은 설문 항목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된 것으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코딩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조사의 기본설계

이 설문조사는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포함시켰다. 표본의 수는 1,000명이며 2017년 3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현장실사는 포인트택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이용하였다. 현장실사에 앞서 포인트택에서 조사원 교육을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는 현장 면접원에 의한 검증, 지역 감독원에 의한 검증, 본사 감독원에 의한 검증, 전산검증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마다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자들 중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 참가 여부와 면접 내용을 검증하였다. 원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산자료의 공개는 통일연구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조사 결과의 분석은 문항별 기초통계분석과 심층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기초통계분석은 주요 문항별 조사 내용을 성, 연령, 지역, 결혼, 학력, 국정운영 평가, 월평균 소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차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제 I 장 서론과 제 V 장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박주화가 집필

하였다. 제Ⅱ장 한국사회의 통합인식 및 제Ⅲ장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인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제Ⅳ장 심층분석 중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은 박주화가, ‘사회통합 역량 결정요인’은 조원빈, ‘남북한 통일필요성 인식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탐색,’ 및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은 이민규가 집필하였다.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김현민 연구원의 연구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불평 없이 과제를 지원해준 김현민 연구원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II. 한국 사회의 통합인식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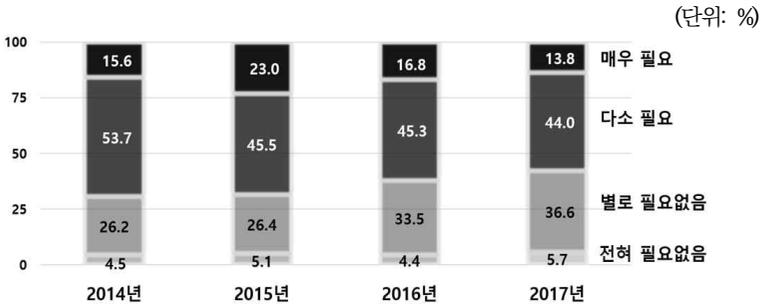
1. 통합의지

가. 통일외지

(1) 통일의 도덕적 의무감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7.8%(매우: 13.8% + 다소: 44.0%)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였으며 42.2%(전혀: 5.7% + 별로: 36.5%)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필요하다'의 응답은 2016년(62.1%) 대비 4.3%p, 2014년(69.3%) 대비 11.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4년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의 응답 비율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20대를 제외한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8%로 2014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였다. 40대의 경우 2016년 대비 6.3%p, 50대의 경우 2016년 대비 6.9%p, 60대 이상의 경우 2016년 대비 6.0%p가 감소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보수: 68.2% vs. 중도: 53.7% vs. 진보: 55.0%)

월평균 소득과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탈북자와 1회 이상 접촉한 사람이 느끼는 통일 필요성(187명, 66.3%)이 탈북자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통일 필요성(813명, 55.8%)보다 10%p 이상 높은 것은 탈북자를 통한 통일 경험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통일에 대한 구체적 태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3개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의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점: 매우 동의함)로 조사하였다.

(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그림 11-2 남북 평화적 공존 조건 하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 즉 평화적 분단고착을 선호하는 비율이 46.1%(매우: 9.7% + 다소: 36.4%)로 2016년 대비 2.9%p 상승하였다. 통일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20대에서 평화적 분단고착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9.4%), 60대에서 평화적 분단고착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44.6%).

표 II-1 통일인식의 4가지 유형

구분		통일의 필요성	
		불필요	필요
분단고착	명시적 반대	통일무관심 집단 4.4%(2016년) 2.4%(2017년)	단일체제 선호집단 32.9%(2016년) 29.3%(2017년)
	묵시적 찬성	분단체제 선호집단 33.5%(2016년) 39.8%(2017년)	분단체제 가능집단 29.2%(2016년) 28.5%(2017년)

통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통일의 필요성(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과 분단고착에 대한 동의(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5점 척도)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의 필요성과 분단고착에 동의하는 응답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통일의 필요성을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 + 별로 필요없음)과 필요함(다소 필요 + 매우 필요)으로 분류하고 분단고착은 명시적 반대(전혀 동의안함 + 별로 동의안함)와 묵시적 찬성(보통 + 다소 동의 + 매우 동의)으로 분류하여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분단고착에 묵시적으로 찬성하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비율이 39.8%로 전년 대비 6.3%p 상승한 것이다. 반면 분단고착에 명시적으로 찬성하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단일체제 선호집단의 비율이 전년 대비 3.6%p 감소한 29.3%로 나타났다. 분단고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며 통일의 필요성 역시 느끼지 못하는 통일 무관심 집단의 비율은 2.4%로 전년 대비 2%p가 감소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고착에도 찬성한 분단체제 가능집단은 28.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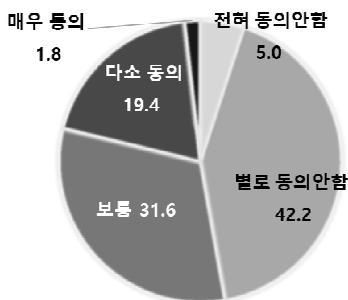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지속된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단기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위기 상황을 통일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분단의 고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평화적 남북관계 관리의 단기적 목표가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으며 분단고착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설정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국내 통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평화적 남북관계 없이도 통일은 가능하다

그림 11-3 평화적 남북관계 없는 통일의 가능성

(단위: %)



평화적 남북관계가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 즉 평화적 남북관계 없이도 통일은 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7.2% (전혀: 5.0% + 별로: 42.2%)였으며, 평화적 남북관계 없이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1.2%(매우: 1.8% + 다소: 19.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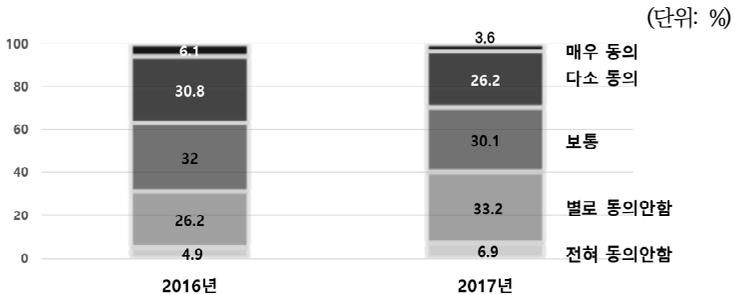
통일을 위한 평화적 남북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30대 이상은(30대:

46.9%, 40대: 48.6%, 50대: 41.3%, 60대: 49.8%)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20대의 37.5%가 평화적 남북관계가 통일을 위해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응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대가 그리는 통일의 시나리오가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인지 아니면 통일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평화적 남북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보수(46.3%), 중도(45.7%), 진보(49.0%)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평화적 남북관계를 통한 통일'이라는 통일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통일이 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서 평화적 분단관리를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인식과 부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림 11-4 '남북통일이 진정한 소망이다'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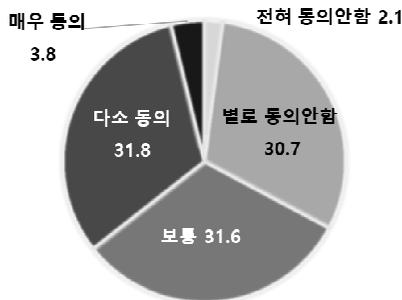
지난 1년간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남북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8%로 2016년 대비 7.1%p 감소하였다. 20대의 경우 17.1%, 30대의 경우 19.7%만이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47.5%가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보수(41.1%)에 비해 중도(27.8%)와 진보(25.0%)의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탈북자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9.9%가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한 반면 탈북자 접촉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29.2%만이 통일이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하여 탈북자 접촉 경험이 통일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라)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그림 11-5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 지지 여부

(단위: %)



선행 연구들에서 대부분 명명척도를 사용하여 통일의 명분을 물어보았다. 즉 '민족정체성', '전쟁위협 제거' 등과 같은 다양한 명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질문의 가장 큰 문제는 응답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응답자는 통일의 명분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에 동의하는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물어보았다.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과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진술에 동의한 비율)은 비슷하였다. 한민족이라고 해서 단일국가를 이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32.9%보다 다소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6%이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20대, 30대, 40대의 경우 단일민족-단일국가 논리에 긍정하는 비율이 단일민족-단일국가 논리에 부정하는 비율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30대와 40대의 경우도 단일민족-단일국가 논리에 부정하는 비율이 단일민족-단일국가 논리에 긍정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 통일의 이유로 여전히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40대가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 논리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본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특히 20~40대가 단일민족-단일국가 논리에 명시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통일의 명분에 대해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과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명분, 통일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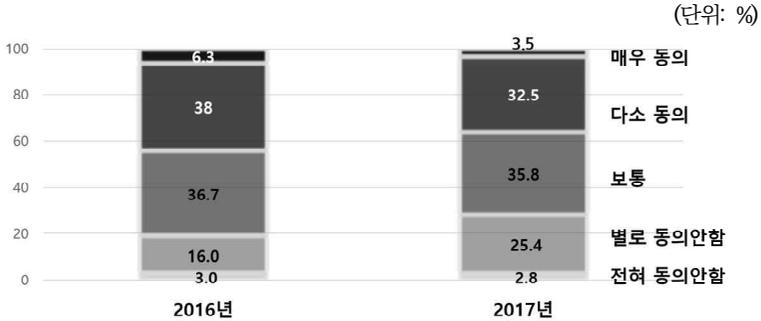
표 II-2 연령별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태도

(단위: %)

연령	단일민족국가 긍정	보통	단일민족국가 부정
만 19~29세	20.5	32.4	47.2
만 30~39세	25.1	30.7	44.1
만 40~49세	29.8	35.1	35.1
만 50~59세	36.2	34.7	29.1
만 60세 이상	47.3	26.1	26.6

(마)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 11-6 통일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감내할 용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지, 즉 우리 사회가 많은 희생을 해서라도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6%만이 동의하였다. 이는 2016년 대비 8.3%p 감소한 것이다. 광주/호남 지역(52.9%)을 제외하고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서 50% 미만의 응답자가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0대(24.4%)와 30대(28.5%)는 30% 미만의 동의율을 보였다. 탈북자와 1회 이상 접촉한 사람이 느끼는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46.3%이며 탈북자 접촉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35.7%가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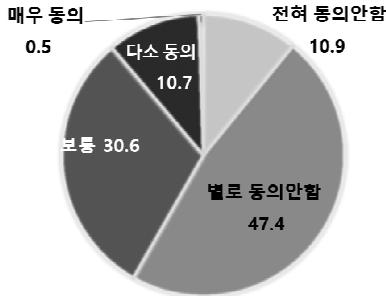
(바)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된다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다소 부담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다소 못살게 되면서까지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응답자의 11.2%만이 동의하였다. 통일을 위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부담에 대해 36%가 동의하였지만 통일 부담이 개인 수준으로 낮아지면 11.2%만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동의하는 것이다. 20대(9.0%), 30대(9.5%), 40대(8.2%)는 10% 이하의 동의 비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미래의 통일비용,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적 고통 분담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필요성, 평화적 분단고착 등 통일 지향성에 있어서 이념적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개인 차원의 통일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이념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수의 11.2%, 중도의 11.3%, 그리고 진보의 11.1%가 통일로 인한 개인적 부담에 긍정적이었다.

그림 11-7 통일을 위해 약간의 부담을 감내할 용의

(단위: %)



(사)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

그림 11-8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 찬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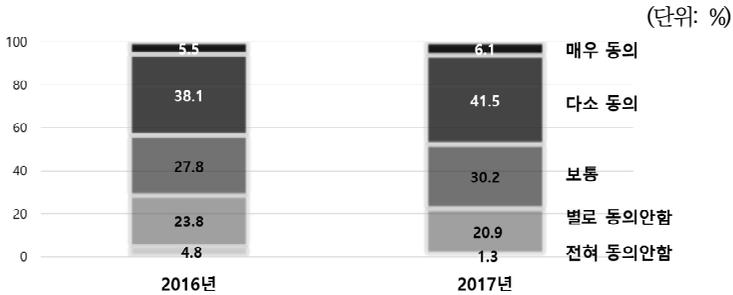


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 및 개인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구체적 행동 수준에도 반영되었다. 통일비용과 관련한 세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였다. 응답자의 16.5%만이 찬성하였으며, 2016년 대비 2.8%p 감소하였다.

(아)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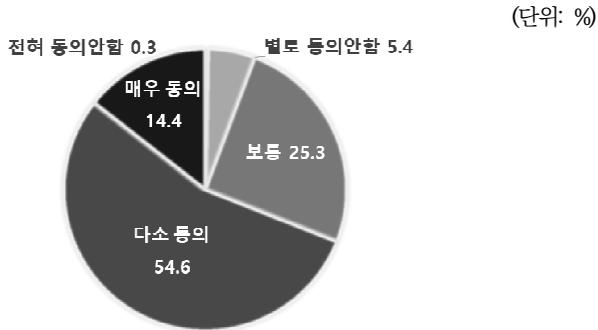
통일이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47.6% (매우: 6.1% + 다소: 41.5%)로 전년 대비 4%p가 감소하였다. 20대의 동의 비율이 61.9%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동의 비율이 36.9%로 가장 낮았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40.7%였으며, 자신을 중도(50.1%)와 진보(49.2%)라고 규정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11-9 한국 사회의 당면 목표로서의 통일에 대한 동의 여부



(자)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그림 11-10 경제문제의 통일문제에 대한 시급성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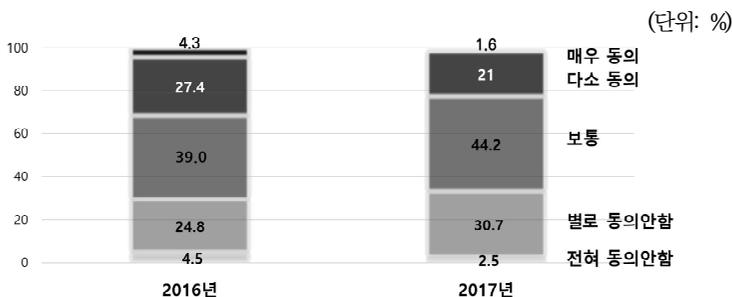
통일문제는 우리의 당면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현안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되었다.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데 2016년 대비 2.9%p 증가한 69%가 동의하였다.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모든 변수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북핵 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일부는 경제 중심의 국민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 문제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또한 한반도의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위기의 습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북한의 도발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점에서 경제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 문제를 경제적 문제의 차원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민족주의 통일담론이 젊은 세대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을 경제적 프레임으로 재조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차) 좌우시간 통일을 떠올리면 나의 기분은 편안하다

그림 11-11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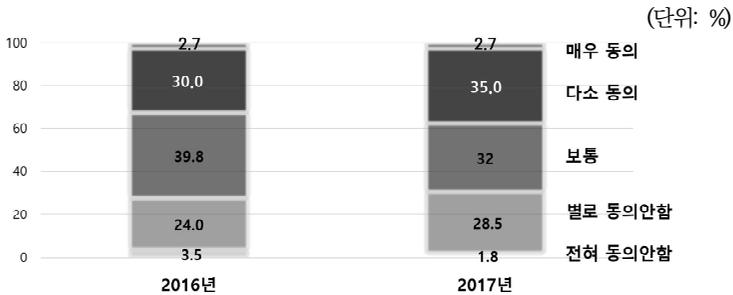


응답자의 22.6%만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 즉 통일을 떠올리면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2016년 대비 9.1%p 감소하였다. 통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평안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 (전혀: 2.5% + 별로: 30.7%)로 2016년 대비 3.9%p 증가하였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정서에 20대(13.1%), 30대(14.6%), 40대(16.9%) 모두 10%대의 동의율을 보였다. 20대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일반적 시각은 본 연구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이 우리의 소망인지, 통일을 위해 개인의 사소한 희생이 가능한지, 평화적 분단고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질문에서 20대의 응답은 30대 이상의 응답보다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정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이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통일에 대한 정서적 이미지는 연령과 관계없이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가) 미래의 통일 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림 11-12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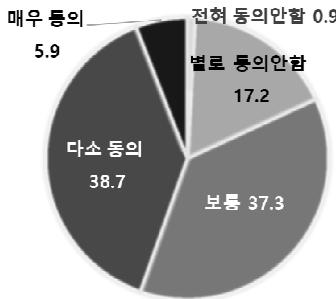
선행 질문에서 통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평안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였다. 통일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7%로 소폭 상승하였다. 2016년과 비교할 때 5%p 증가한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더 강하며, 2016년에 비해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타)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크다 (분단손해 > 통일비용)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1945년 이래 분단은 70년 이상 지속되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은 더 이상 현상이 변경된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현상유지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지속은 비정상의 학습화로 인한 학습된 비평화 상태를 낳았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과 손실, 소위 분단비용을 더 이상 개선해야 할 손실이 아닌 고정비용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분단으로 인한 손실에 민감할수록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은 분단비용, 즉 분단으로 인한 손실이 통일을 위한 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림 11-13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민감성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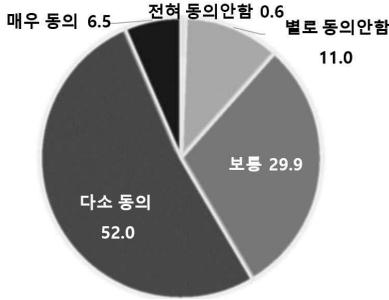
분단으로 인한 손실이 통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매우: 5.9% + 다소:38.7%)로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크다고 응답한 비율인 18.1%(전혀: 0.9% + 별로: 17.2%)보다 높았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 수준에서 분단손실에 대한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통일의 당위성에서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분단손실에 대한 민감성에서 연령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적어도 분단손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많다는 점은 통일문제가 경제적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며, 특히 세대와 관계없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파)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림 11-14 통일의 삶에 대한 영향력 평가

(단위: %)



통일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58.5%가 통일이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통일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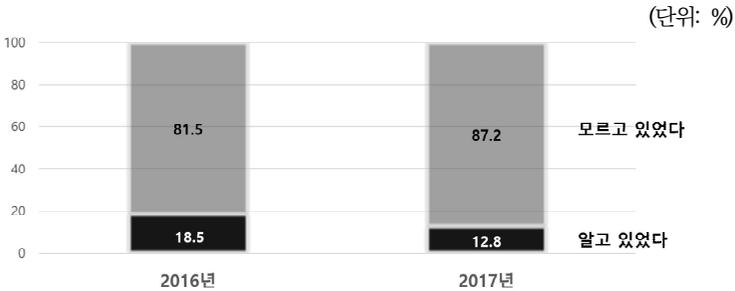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통일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소위 ‘통일 준비’는 통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통일의 당사자인 국민은 통일로 인한 사회 변화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통일이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는 기대가 사회의 일반적 기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비용 과소평가의 원인으로 통일 경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통일과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 경험을 제시하는 것에 인색하였다. 다시 말해 통일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다. ‘백두산 관광’과 같은 진부한 경험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통일이 불러올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할 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

(3) 통일의 헌법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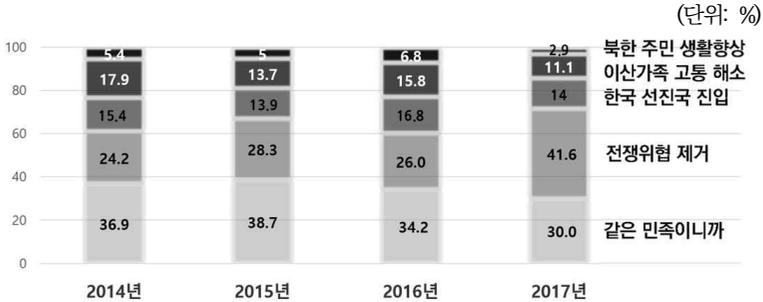
그림 11-15 통일에 관한 헌법 인지 여부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2.8%로 2016년 대비 5.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정책 관련 헌법 내용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이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통일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합의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에 대한 기본적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4) 통일의 이유

그림 11-16 통일의 이유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41.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같은 민족이니까'(30.0%),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4.0%),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11.1%),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2.9%)가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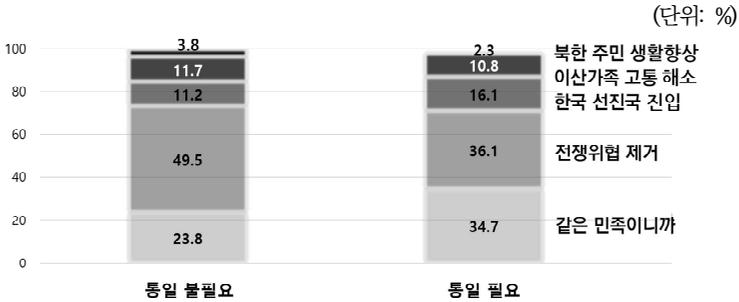
대부분의 응답자의 특성에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 지역이 71.0%의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2014년 조사를 시작한 후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이유, 즉 '같은 민족이니까'가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만 2017년에는 '전쟁위협 제거'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4.2%p 하락한 반면,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15.6%p 상승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통일의 이유를 묻는 질문은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통일의 이유를 선택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현재 한반도

문제의 현안을 선택했거나 타인이 통일을 원하는 이유를 추정해서 응답했을 가능성, 또는 자신이 통일을 원한다는 가정에 기반해서 통일의 이유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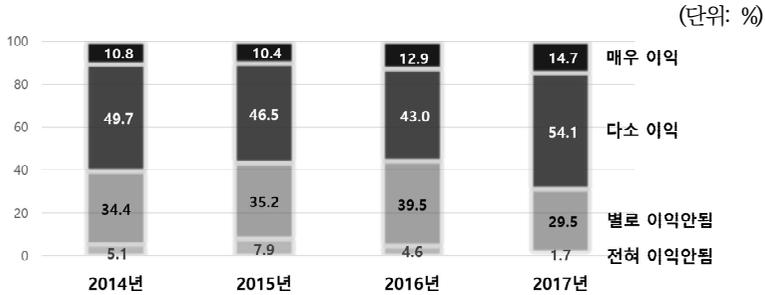
그림 11-17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일의 이유 비교



실제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절반 정도(49.5%)가 통일의 이유로 ‘전쟁위협 제거’를 선택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전쟁위협 제거’(36.1%)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지만 ‘같은 민족이니까’(34.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통일의 명분, 통일의 이유가 과거 조사와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 명분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 위기 상황에 기인한 단기적 변화인지 통일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5) 통일의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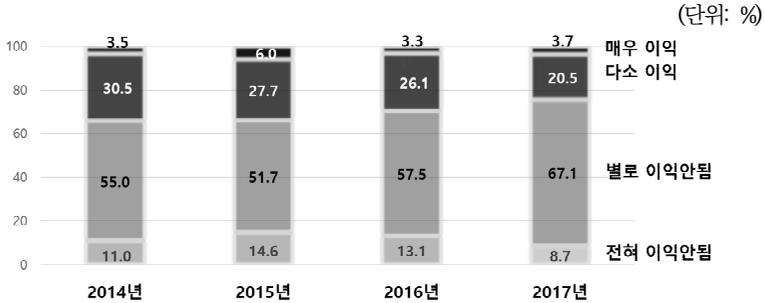
그림 11-18 통일의 국가에 대한 편익



통일이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68.8%(매우: 14.6% + 다소: 54.2%)로 2016년(55.9%) 대비 12.9%p 상승하였다.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31.2%(전혀: 1.7% + 별로: 29.5%)였다. 20대의 경우 61.9%가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하여 30대 이상이 70% 내외로 국가에의 이익에 동의한 것과 대조된다. 통일이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4년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2014년: 60.5%, 2015년: 56.9%, 2016년: 55.9%).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24.3%(매우: 3.7% + 다소: 20.6%)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75.7%(전혀: 8.6% + 별로: 67.1%)보다 낮아 통일이 본인의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17%만이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9 통일의 개인에 대한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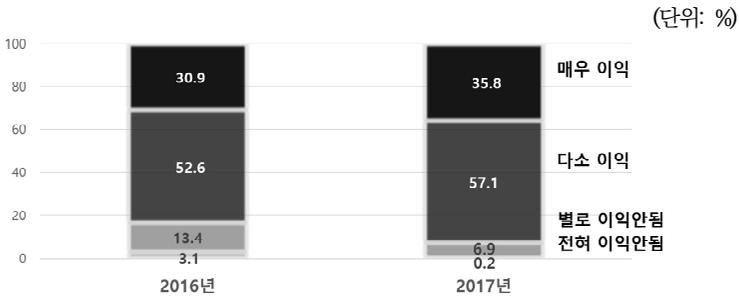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4년 조사 시작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는 34%, 2015년 조사에서는 33.7%, 2016년 조사에서는 29.4%가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이지만 국민 개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한 가지 원인으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들 수 있다. 그간 통일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북핵문제, 남북문제에 있어 주변 국가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관련국의 국익, 대외정책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국민들이 통일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반면 국민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통일문제는 조명되지 않았다. 통일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통일문제의 국제화가 부른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통일문제의 국내화, 통일문제의 개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92.9%(매우: 35.9% + 다소: 57.0%)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7.1%(전혀: 0.2% + 별로: 6.9%)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로 인한 남북한 주민의 이익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83.5%) 대비 9.4%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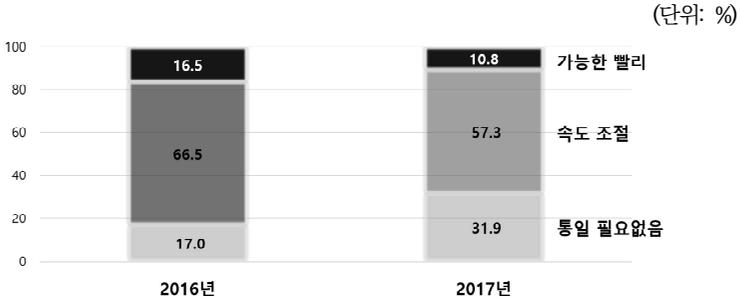
그림 11-20 통일의 북한 주민에 대한 편익



(6) 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가 57.4%로 가장 높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도 31.8%로 나타났다.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2016년(66.5%) 보다 9.1%p 하락한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2016년(17.0%) 보다 14.8%p 상승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21 통일의 시기



거의 모든 계층에서 통일은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특히 20대는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48.6%)라는 의견이 높아 다른 그룹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 방식은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 84.6%로 2016년(74.6%)보다 10.0%p 상승하였다. 모든 인구학적 변수의 수준에서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에 대한 선호가 급진적 통일에 대한 선호보다 높았다.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은 15.4%로 나타났다.

그림 II-22 통일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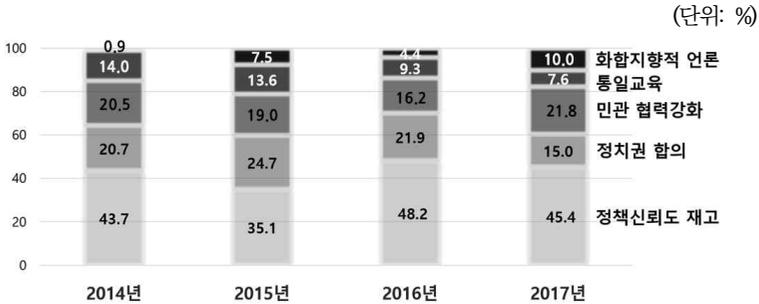


(7)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조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21.8%),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15.0%), ‘언론의 민족 화합 지향적 보도’(10.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 응답은 2014년 이후로 1순위를 유지하나, 2016년(48.2%)보다 2.8%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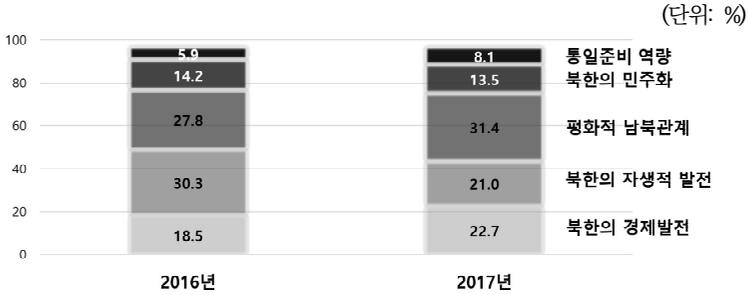
광주/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광주/호남 지역의 응답자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 보다 여야 정치권의 대북 정책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23 통일을 위한 국내적 조건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조건으로 ‘화합 지향적 언론보도’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년 대비 5.6%p 증가한 것은 응답자들이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며, 현재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다소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4 통일을 위해 필요한 환경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가 31.4%로 가장 높으며, '북한의 경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22.7%),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21.0%),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통일을 위해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33.4%),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35.7%)과 인천/경기(35.4%)에서 통일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를 1순위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읍/면 지역(34.2%)과 대구/경북(44.6%)은 통일을 위한 우선 과제로 '북한의 경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를 1순위로 평가하여 다른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나.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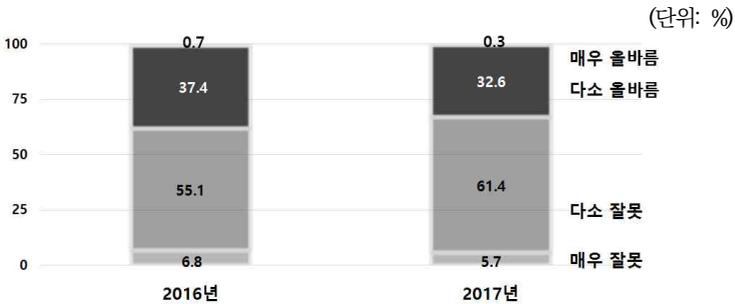
(1) 국가의 방향성

한국의 발전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가 32.9%(매우: 0.3% + 다소: 32.6%)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67.1%(매우: 5.7% + 다소: 61.4%)보다 낮게 나타났다. 4점 척도 상에서 평균 2.28점

으로 '한국이 대체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평균 2.32점)과 비교하여 한국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43.0점), 주관적 가계상황 호전(46.0점),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상(48.3점)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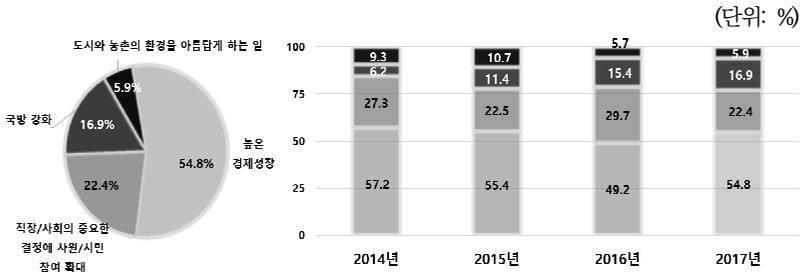
그림 11-25 한국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2)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 - 그룹1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높은 경제성장'이 54.8%로 가장 높았고, '직장/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사원/시민 참여확대'(22.4%), '국방 강화'(16.9%), '도시와 농촌의 환경 보호/미화'(5.9%)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제성장'이 54.8%로 2016년(49.2%) 대비 5.6%p 상승하였으며 평가 항목별 순위 및 비중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림 II-26 발전과 안정 부문에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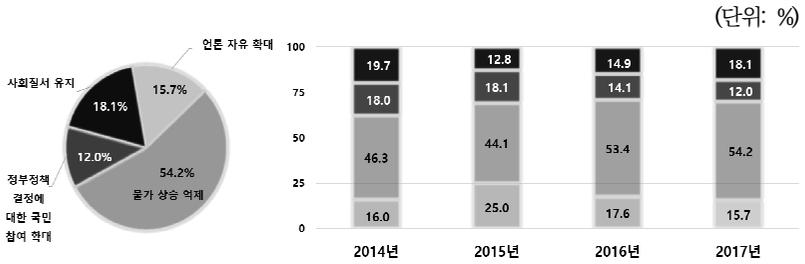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높은 경제성장 유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만 50~59세(58.8%), 지역 크기별로는 대도시(61.0%), 권역별로는 강원(64.5%), 학력별로는 고졸(57.2%),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상(57.1%)에서 가장 높았다.

(3)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 - 그룹2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물가상승 억제'가 54.2%로 가장 높았고, '사회질서 유지'(18.1%), '언론 자유 확대'(15.7%), '정부 정책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12.0%) 순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 억제'라는 응답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림 II-27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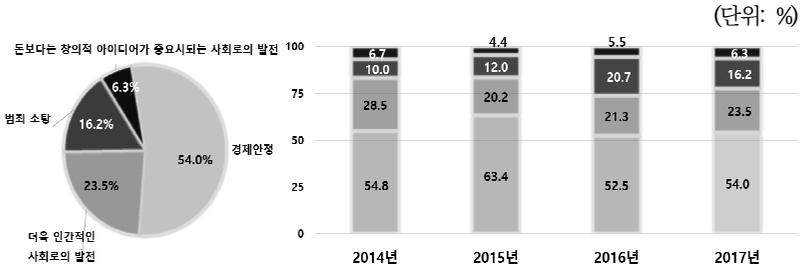


광주/호남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물가상승 억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호남은 '사회질서 유지'(38.2%)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4)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 - 그룹3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안정'이 54.0%로 가장 높았고, '더욱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23.5%), '범죄 소탕'(16.2%), '돈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6.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안정'이라는 응답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림 11-28 물질적/탈물질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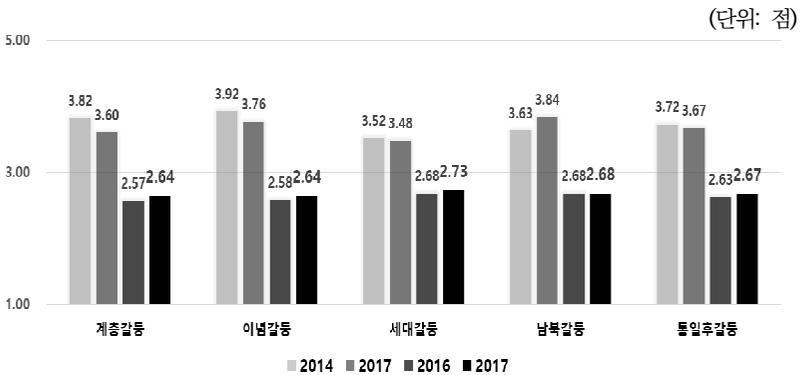
광주/호남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안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호남은 '범죄 소탕'(46.1%)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5) 통일 이후 사회 갈등 예측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각 영역별 사회적 갈등 심각 수준에 대해 '세대갈등'이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북 지역 간 갈등'(41.9점), '계층갈등'(41.0점), '이념갈등'(4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영역의 전체 평균이 41.8점으로 통일 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4년을 비교해 보면 2016년(평균 59.65점)에 비해서, 통일 후 전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2016년에는 ‘계층갈등’(60.8점)이 1순위로 조사되었다.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의 점수는 2016년보다 낮아졌으나, ‘남북 지역 간 갈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11-29 통일 이후 부문별 갈등 양상 예측²⁾



‘계층갈등’은 만 40~49세(42.1점), 대도시(43.4점), 서울(44.7점)과 대전/충청(44.7점), 국정운영 평가 긍정(44.1점), 이념성향 보수(42.7점), 주관적 가계 상황 호전(44.0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이념갈등’은 대도시(43.4점), 부산/울산/경남(46.3점), 주관적 가계 상황 비슷(42.2점) 그룹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세대갈등’은 국정운영 긍정(45.7점), 월평균 소득 200~400만 원(45.3점),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상(50.5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¹⁾ 2014년, 2015년 조사에서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²⁾ 그래프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모든 표와 그래프는 집필자가 작성하였다.

(6) 통일한국의 우선 목표

통일한국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목표들 중 1순위는 '경제성장'이 36.4%로 가장 높았고, '사회안정'(22.3%), '안보'(15.4%), '국민 화합'(12.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한국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목표 가운데 '경제성장'이라는 응답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서도 1순위로 조사되었다. 반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과거 청산은 통일한국의 중요한 정책 목표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다.

표 II-3 통일한국의 목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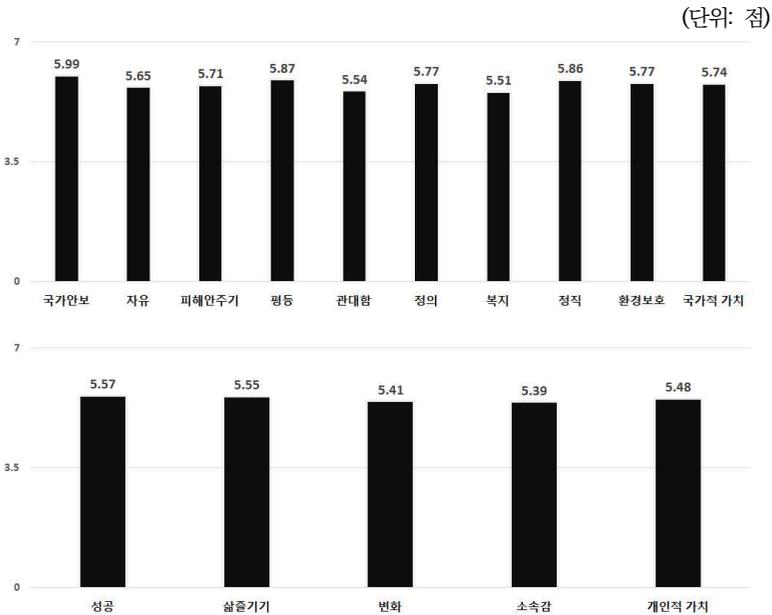
연도	경제 성장	사회 안정	안보	국민 화합	복지	균형 발전	민주주의 발전	과거 청산
2014	38.2	15	19.2	7.8	5.3	11.7	2.1	0.7
2015	36.1	13.6	20.2	8.3	6.8	10.8	2.3	1.9
2016	33.4	17.7	18.5	7.8	13.7	5.5	2.6	0.8
2017	36.4	22.3	15.4	12.8	4.8	4.1	2.4	1.8

광주/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경제성장'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호남 지역의 응답자는 '사회안정'(29.4%), 제주 지역 응답자는 '국민화합'(27.3%)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통일 후 국가/국민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지침이 되는 가치는 ‘국가안보’가 8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등’(81.2점), ‘정직’(81.0점), ‘환경보호’(79.5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감’(73.1점), ‘변화 있는 생활’(73.4점)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11-30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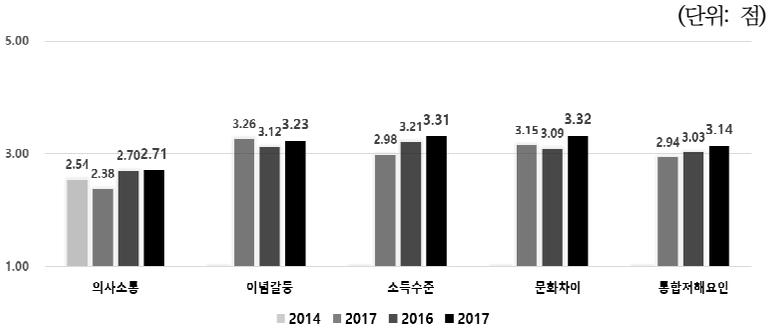


(8) 통일 이후 통합 장애요인

각 항목별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해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가 7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 수준의 차이’(77.1점),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74.3점), ‘의사소통의 어려움’(56.9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75.4점으로 1순위, 2016년은 ‘소득 수준 차이’가 73.6점으로

1순위, 2017년은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가 77.4점으로 1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북한 통합장애와 관련된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가 2015년 64.9점, 2016년 67.7점, 2017년 71.4점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림 II-31 통일 이후 통합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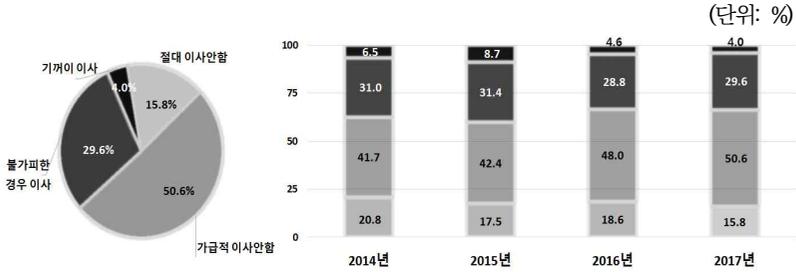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는 이념성향 진보(80.3점)에서 높게 응답되었고, ‘의사소통 어려움’은 지역 크기 대도시(57.5점), 이념성향 진보(58.5점)에서 높게 응답되었다.

(9)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이주 의향

통일 후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이주해야 될 경우 ‘이사한다’라는 응답이 33.6%(기꺼이: 4.0% + 불가피한 경우: 29.6%)로 ‘이사하지 않는다’ 66.4%(절대: 15.8% + 가급적이면: 50.6%)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근 4년을 비교하면, 4점 척도 상 평균 2014년 2.23점, 2015년 2.31점, 2016년 2.19점, 2017년 2.22점으로 4년 모두 ‘가급적이사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림 II-32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이주 의향



거의 모든 계층에서 통일 후 북한 지역 이주에 대한 의견으로 '이사하지 않는다'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주/호남(95.1%), 중졸 이하(78.9%), 국정운영 부정 평가(69.7%) 그룹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사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2. 통합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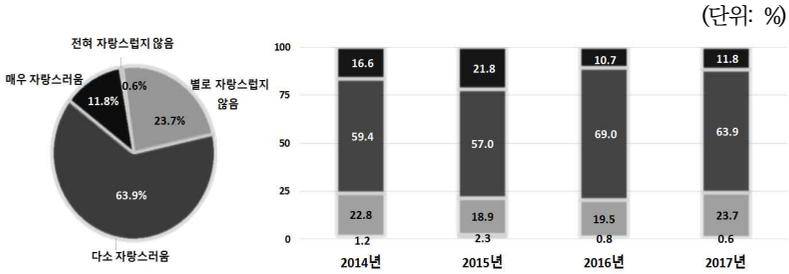
가. 사회적 자본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가 75.7%(매우: 11.8% + 다소: 63.9%)로 '자랑스럽지 않다' 24.3%(전혀: 0.6% + 별로: 2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랑스럽다'는 2016년(79.7%) 대비 4.0%p 하락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4점 척도 상의 평균으로 살펴보면, 2.87점으로 2014년(2.91점), 2015년(2.98점), 2016년(2.90점)보다 낮은 점수다.

전 계층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68.3점),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69.0점), 국정운영 평가별로 긍정(65.8점), 주관적 가계 상황별로 비슷(63.2점)과 호전(63.5점)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림 II-3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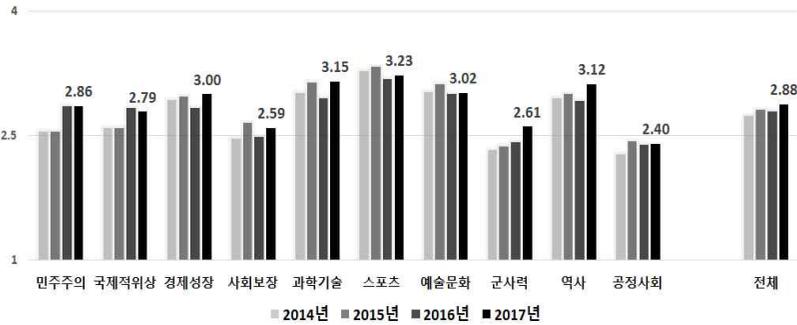


(2) 영역별 자부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10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스포츠’가 7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학기술의 발전’(71.6점), ‘역사’(70.7점), ‘예술과 문화’(67.4점), ‘경제성장’(6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한 사회적 대우’(46.7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52.9점)이 낮았다. 최근 4년을 비교해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모두 ‘스포츠’ 영역의 자긍심이 가장 높았고, ‘공정한 사회적 대우’ 영역의 자긍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34 국가에 대한 영역별 자긍심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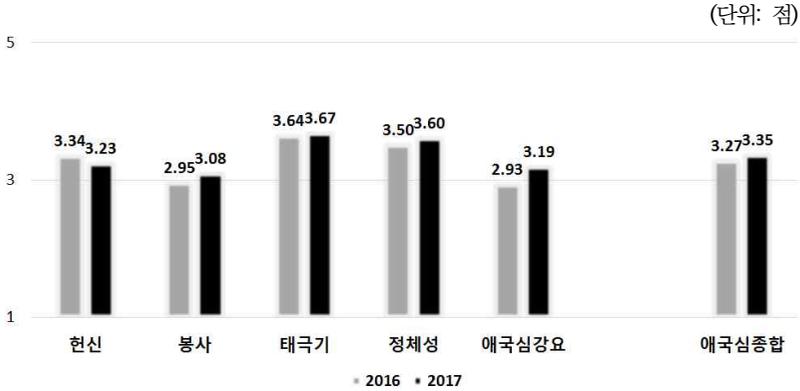
가장 자긍심이 높은 ‘스포츠’ 영역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74.3점)와 중소도시(75.1점), 권역별로 대전/충청(84.0점)과 부산/울산/경남(79.4점), 주관적 가계 상황별로 호전(81.0점),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상(78.9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장 자긍심이 낮은 ‘공정한 사회적 대우’는 만 30~39세(41.8점), 중소도시(44.3점), 제주(39.4점)와 인천/경기(39.8점), 대졸 이상(44.5점), 국정운영 부정 평가(45.2점), 월소득 400만 원 이상(44.7점),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하(43.4점) 그룹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3) 애국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정체성 및 애국심과 관련된 항목 평가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가 6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다’(65.0점)가 그 다음으로 높은 순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47.9점,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강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가 45.2점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 정체성 및 애국심과 관련된 5개 문항

의 평균(4, 5번 문항은 역채점하여 평균함)은 58.8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과 애국심이 낮은 편이었다. 2016년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II-35 애국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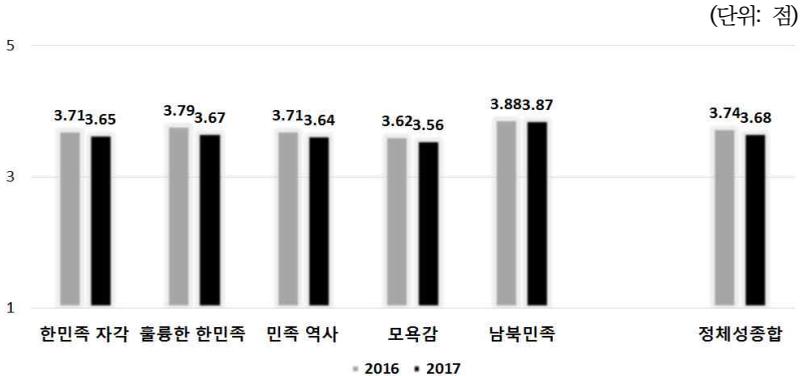


동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인 ‘나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는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71.7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았으며, 권역별로 제주(70.5점), 국정운영 평가별로 긍정(70.4점)에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인 ‘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강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41.3점), 권역별로 대전/충청(38.2점), 학력별로 중졸 이하(42.1점), 월평균 소득별로 200만 원 미만(41.0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4) 민족정체성

한민족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가 71.7점으로 가장 높으며, ‘나는 훌륭한 한민족이 되고 싶다’(66.9점), ‘나는 내가 한민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66.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민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2016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11-36 한민족에 대한 인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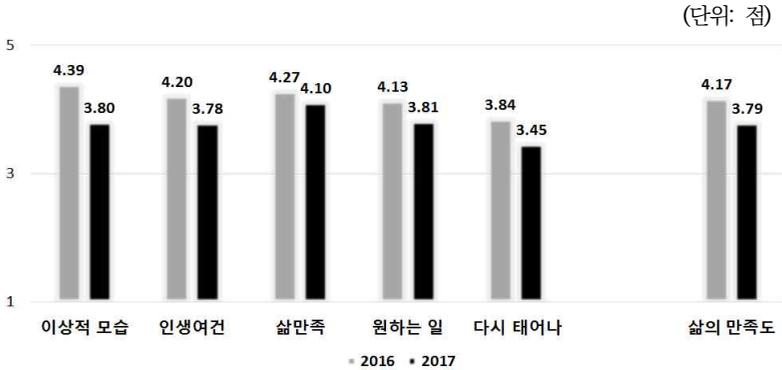
동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인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는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75.9점),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74.3점), 권역별로 서울(74.7점), 소득별로 200만 원 미만(76.3점)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동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인 ‘누군가 한민족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는 권역별로 제주(50.0점), 진보 성향(62.1점)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5) 삶의 만족도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가 5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46.9점),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46.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과 관련된

5개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46.5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았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 52.8점보다 떨어진 것이다.

그림 11-37 삶의 만족도



동의를율이 가장 높은 항목인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대도시(53.2점), 주관적 가계 상황 호전(60.3점), 소득 수준이 평균 이상(60.2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인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는 국정운영 부정 평가(40.0점), 가계 상황 악화(39.0점),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하(36.8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경제 상황이 본인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11점 척도(0점: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0점: 매우 신뢰할 수 있다) 기준으로 평균 4.84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5.94점), 2015년(5.97점), 2016년(4.93점) 대비 계속 하락한 것이다. 이는 조사 기간 중 전반적인 신뢰도 수준이 가장 높았던 2015년에 비해 1.13점 하락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30.5%가 '5점'이라 대답했다. 즉,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16년 조사에서도 '5점'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1.6%로 가장 많았지만, 2014년과 2015년 조사에서는 '7점'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각각 24.9%와 26.4%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본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국민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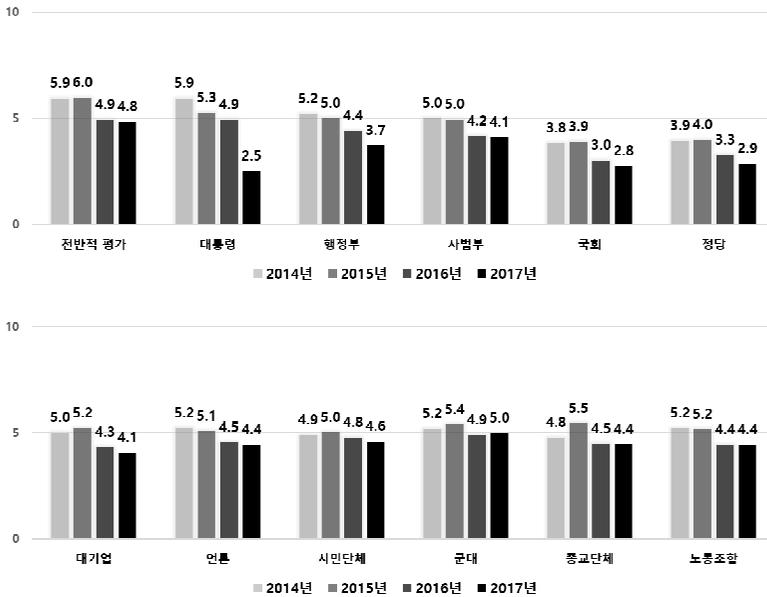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대해 여성(4.92점)이 남성(4.75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신뢰도 차이도 만 60세 이상(5.01점)이 가장 높았으며 30대(4.57점)와 20대(4.78점)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령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학력별 신뢰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수와 중도, 진보로 스스로 규정한 이념성향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4.95점과 4.74점, 4.85점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소득별 차이도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신뢰도는 4.87점이며 200~400만 원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집단의 평균 신뢰도는 4.82점,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집단의 평균 신뢰도는 4.86점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주관적인 소득 수준별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 평균점수는 4.60점이며 '평균'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4.98점,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5.14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주거 지역의 크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 평균점수는 5.01점으로 가장 높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4.78점, 읍/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4.16점이다. 국민들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그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 기관별 신뢰도

그림 II-38 기관별 신뢰도

(단위: 점)



기관별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모두 5점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대’에 대한 신뢰도가 4.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민단체’(4.59점), ‘종교단체’(4.44점), ‘노동조합’(4.42점), ‘언론’(4.4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4.06점으로 11개 기관 중 일곱 번째로 조사되었다.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73점이며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2.85점,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75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51점으로 11개 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4.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5.25점으로 ‘군대’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행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반대로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결 과정에 국회 내에서 각 정당들이 보여준 갈등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부’와 ‘정당’,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지난 3년의 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일관되게 응답자 거주지역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이 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이 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점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이들 세 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일관되게 자신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주관적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들 중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소득 수준이 낮다고 느끼는 이일 수록 행정부나 정당, 국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들 세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이나 주관적 소득이 낮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대인 신뢰도

신뢰와 관련된 인식 평가는 지난해 평가 대비 주요 항목에 대한 동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9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의 세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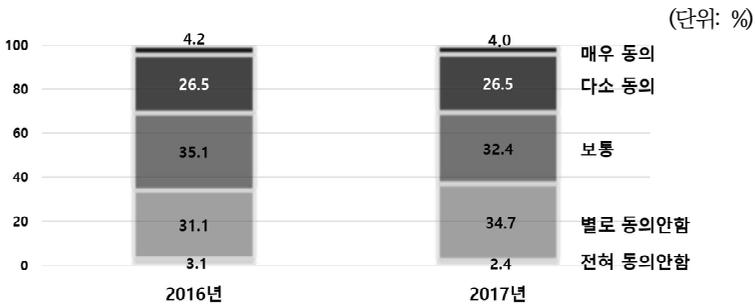


그림 II-40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의 세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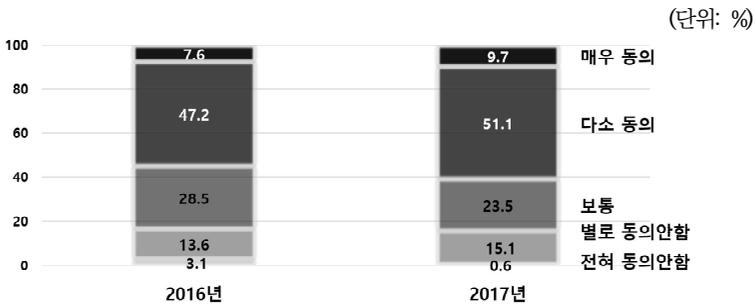


그림 II-41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은 상대방을 신뢰한다'의 세부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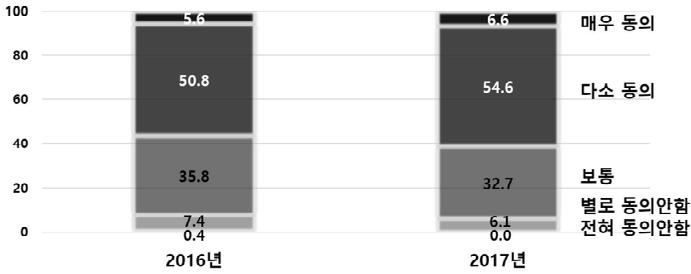


그림 II-42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의 세부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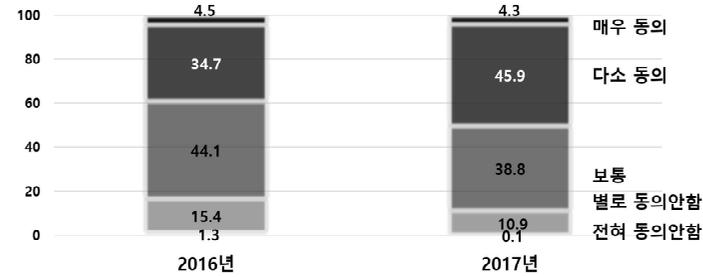


그림 II-4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의 세부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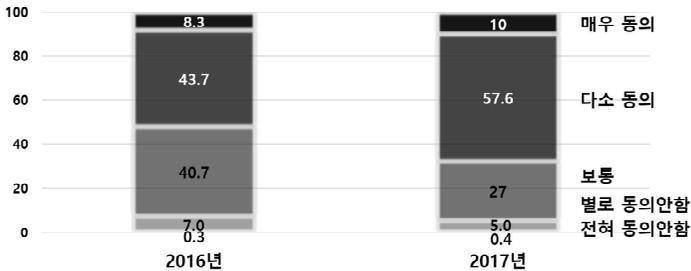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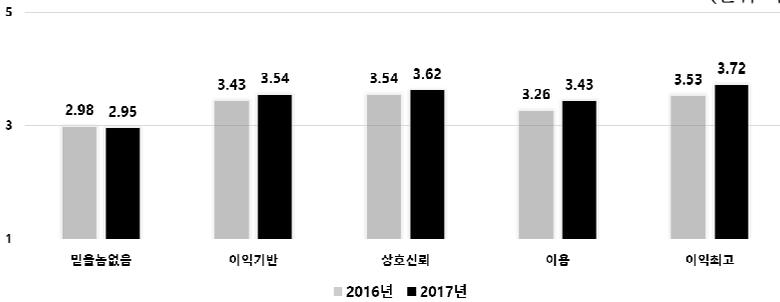


그림 II-44 대인 신뢰도 5문항 종합

(단위: 점)



다섯 가지 세부 항목 중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가 3.72점(5점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3.62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3.54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타주의, 즉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가 3.43점으로 나타났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가 2.9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는 항목은 2016년 대비 0.19점 상승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 중 유일하게 2016년 대비 0.3점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를 측정한 5문항에 대한 응답에 있어 연령과 이념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 문항이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월평균 소득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평균값이 3.78점으로 가장 높고 200만 원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평균값이 3.70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실질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응답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도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질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주의, 즉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도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만, 다른 항목들에 대한 동의와 달리 이 항목에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실질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3.48점)이며 이 항목에 동의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실질소득 수준이 중간인 월평균 소득 200~400만 원 집단(3.39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와 관련된 인식 평가에는 개인의 실질소득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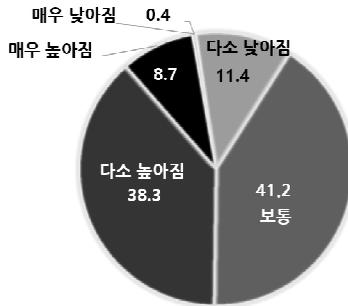
(9)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지난 한 해 동안 ‘높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매우: 8.7% + 다소: 38.3%)로 ‘낮아졌다’ 11.8%(매우: 0.4% + 다소: 11.4%)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변화 없이 그대로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2%였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이 낮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단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까지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패 수

준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기대와는 반대로 부패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대답했다.

그림 11-45 한국 사회 부패 수준 평가

(단위: %)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부패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부패 수준 평가는 이 두 집단의 평가 사이에 위치한다. 응답자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수준 차이는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직업별 부패 수준 평가

한국 사회의 직업 종사자별 부정부패 연루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국회의원’이 6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58.3%가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으며, 23.0%는 심지어 ‘모든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두 번째로 높은 사업가(54.3점)와도 13.7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 결과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스스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검찰/경찰’(46.6점), ‘행정공무원’(46.1점), ‘언론인’(45.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직업 종사자 중 ‘판사’가 36.0점으로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이 ‘시민단체’(40.6점)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다른 행정부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신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II-46 직업별 부패 수준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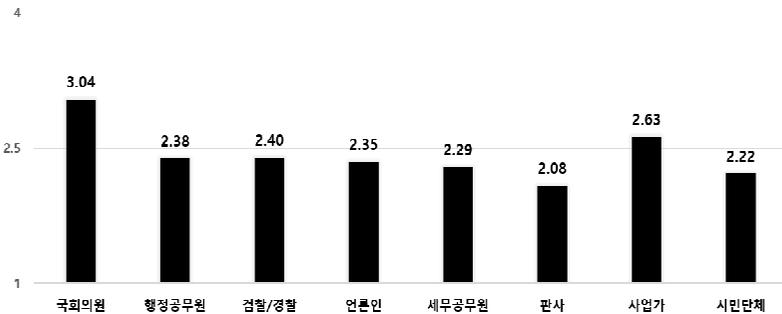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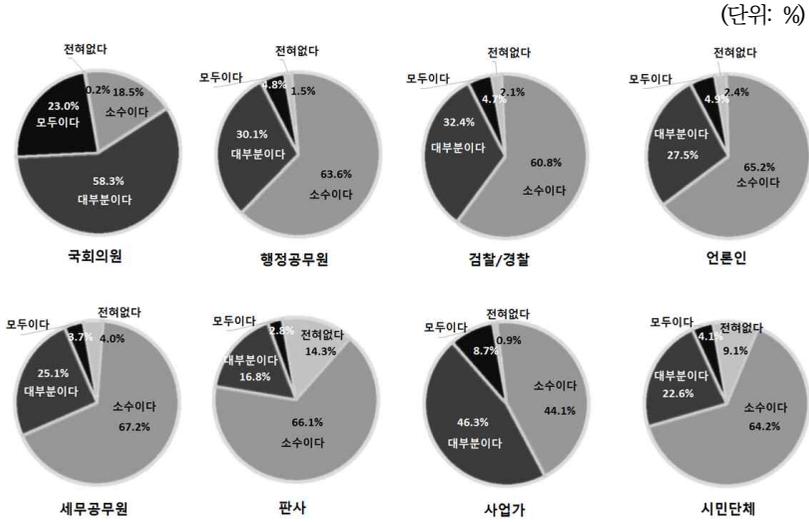


그림 II-47 직업별 부패 연루 정도 평가



다수의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별이나 학력 수준별, 소득 수준별,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3%가 대부분 혹은 모든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행정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행정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가장 높다고 대답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행정공무원에 비해 읍/면 지역의 행정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부패 감사활동이 대도시나 중앙부처보다 소규모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행정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행정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검찰/경찰’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는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검찰이나 경찰이 부정부패에 가담하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했다. 또한, ‘행정공무원’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검찰이나 경찰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높다고 생각했다.

‘언론인’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 크기와 실질소득 수준, 이념성향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에 비해 ‘언론인’의 부정부패 가담 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읍/면 지역의 소규모 영세 언론사에 소속된 언론인들이 ‘언론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결과이다. 실질소득 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언론인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중도나 진보적 응답자에 비해 언론인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는 응답자의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정공무원’이나 ‘검찰/경찰’에 대한 부정부패 연루 정도에 대해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로, 응답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판사’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의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재판이라는 사법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로 초래된 갈등을 해결 혹은 중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판사들을 직접 접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판사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적 포용

(1) 사회단체 활동과 기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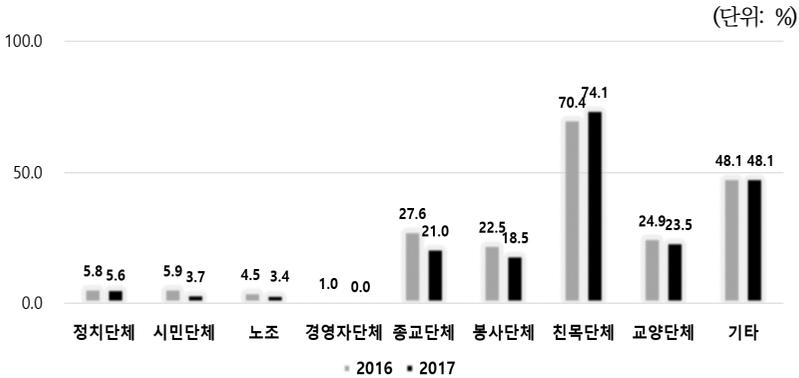
주요 단체별 소속 현황은 2016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1%로 가장 높으며, ‘기타 모임이나 단체’, ‘예술, 스포츠 또는 교양·교육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 순으로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단체의 소속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단체 소속 현황은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친목단체’와 ‘예술, 스포츠 또는 교양·교육단체’, ‘기타 모임이나 단체’, ‘노조’, ‘시민단체’, ‘정당 등 정치단체’ 등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속되어서 활동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종교단체’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속되어서 활동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봉사단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활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에서는 연령과 실질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소속되어 활동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어린 응답자에 비해 고령인 응답자들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200~400만 원인 응답자들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단체’에서는 연령과 학력 수준의 차이에 따라 ‘소속되어 활동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 중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속되어 활동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친목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8 사회단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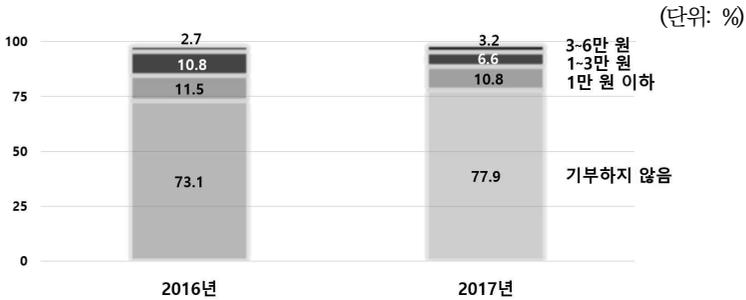


‘예술, 스포츠 또는 교양교육단체’에서는 학력 수준과 이념성향, 실질 소득 수준에 따라 ‘소속되어 활동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학력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예술, 스포츠 또는 교양 교육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보수’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에 비해 ‘예술, 스포츠 또는 교양교육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 스포츠 또는 교양교육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관에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2016년(26.9%) 대비 4.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액은 ‘1만 원 이하’가 10.8%로 가장 많으며, ‘1만 원 초과~3만 원 이하’(6.6%)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이 '기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다만, 응답자 중 학력 수준과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기부에 대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정기적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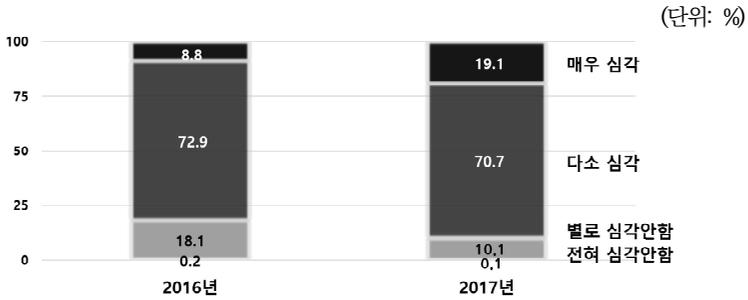
그림 II-49 주요 기관에 대한 기부



(2)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

우리 국민들은 현재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수준에 대하여 응답자의 89.8%(매우 심각하다: 19.1% + 다소 심각하다: 70.7%)가 '심각하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심각하다'(81.7%) 대비 8.1%p가 증가한 것이다.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림 11-50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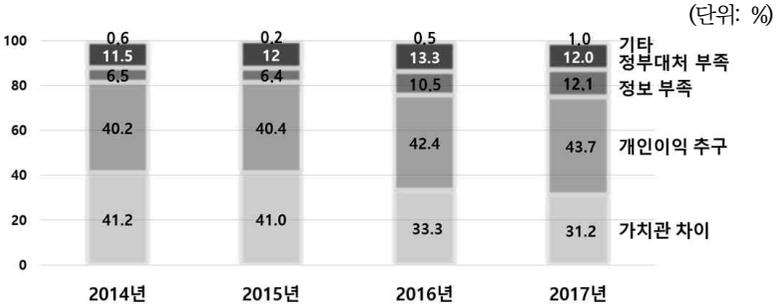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가계 상황과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관적 가계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일수록 사회 갈등의 심각 수준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일수록 평균이나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이나 교육 수준, 이념성향은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심각성 차이를 인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층이 낮고 높음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다수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이념성향이 진보나 중도, 보수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 이익 추구’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31.2%), ‘정보 부족과 오해’(12.1%), ‘정부의 대처 부족’(12.0%)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 이익 추구’가 1순위 원인으로 응답되었으며 2014년, 2015년 조사에서는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이익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41.9%)에 비해 여성(45.4%) 응답자들이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 연령대 중에서는 만 30~39세 응답자(46.6%)들이 ‘개인 이익 추구’를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이념성향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중 과반에 가까운 49.6%의 응답자들이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 이 비율은 정치이념성향이 보수(40.2%)이거나 진보(40.4%)인 집단 내 응답자들보다 높은 것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른 세 집단(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 모두에서도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선택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 추구’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주관적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평균 이하’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47.1%이며, ‘평균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낮은 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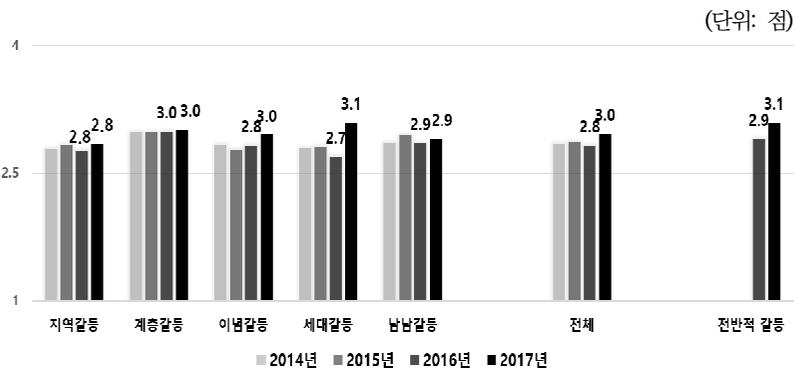
그림 II-51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4) 한국 사회의 분야별 갈등 정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섯 가지 주요 사회적 갈등이 2016년 대비 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이하 남남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사회적 갈등 항목 모두에서 2017년 갈등 심각 수준이 2014년, 2015년, 2016년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된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이 2016년 대비 더 심각해졌다는 것과 일치된 결과로, 현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상황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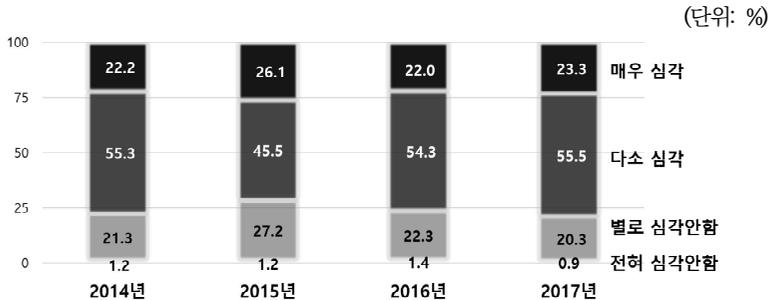
그림 II-52 한국 사회의 분야별 갈등 정도



한국 사회 내 분야별 사회 갈등 심각 수준에서는 ‘계층갈등’이 6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념갈등’(64.9점), ‘세대갈등’(64.6점), ‘남남갈등’(63.4점), ‘지역갈등’(61.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계층갈등’의 심각 수준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는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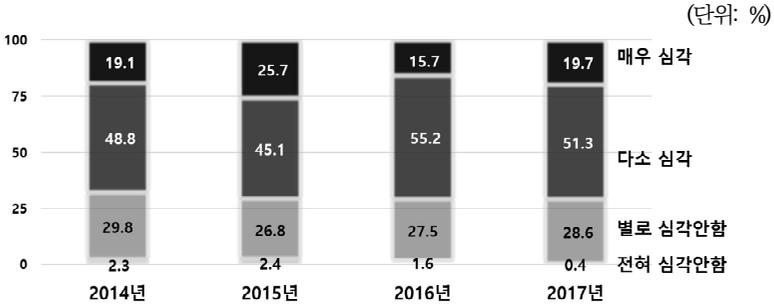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 ‘세대갈등’과 ‘이념갈등’의 심각 수준이 다른 갈등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세대갈등의 심각 수준은 2016년 59.6점에서 64.6점으로 5.0점 높아졌으며, 이념갈등의 심각 수준은 2016년 61.1점에서 64.9점으로 3.8점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최근 들어 세대갈등과 이념갈등 현상이 확연하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53 계층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계층갈등의 심각 수준은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거주 지역 크기, 학력, 정치이념성향, 실질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 차이는 계층갈등의 심각 수준을 느끼는 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현재 계층갈등 심각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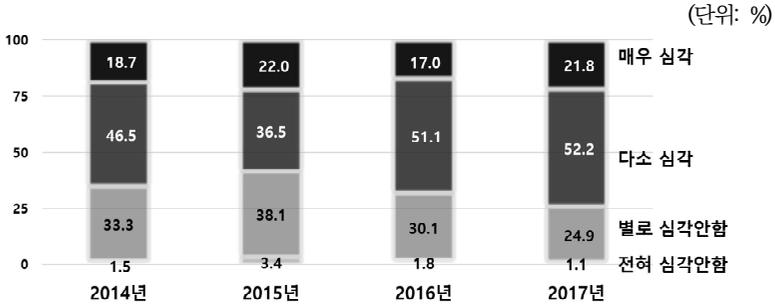
그림 II-54 남남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남남갈등의 심각 수준도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학력, 정치이념성향,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남갈등의 심각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응답자의 거주 지역의 크기가 유일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남남갈등 심각 수준 평균 점수는 6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남남갈등 심각 수준은 5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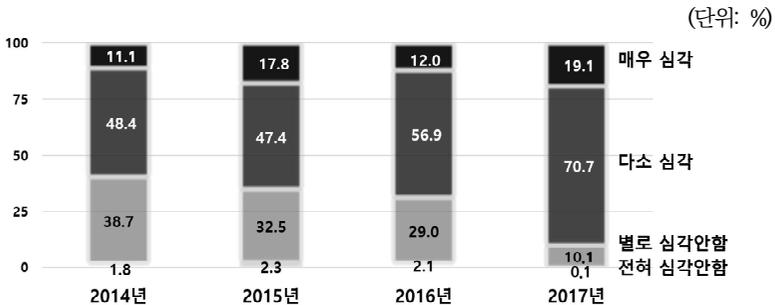
응답자가 느끼는 이념갈등의 심각 수준은 그들의 거주 지역 크기와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 심각 수준은 68.9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이념갈등의 심각 수준은 6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적 정치성향을 보유한 응답자가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심각 수준이 매우 높다(66.0점)고 느끼고 있으며, 중도적 정치성향을 보유한 응답자가 이념갈등 심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63.2점)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정치성향을 보유한 응답자의 이념갈등 심각 수준은 65.7점으로 진보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5 이념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느끼는 세대갈등의 심각 수준은 성별이나 연령, 학력, 정치이념성향,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속한 응답자가 나이든 연령층에 속한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의 심각 수준이 낮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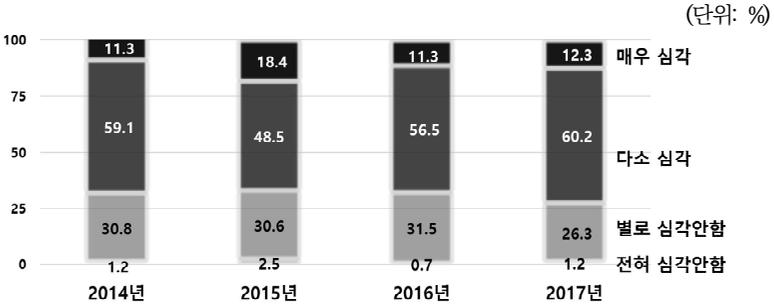
그림 II-56 세대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이번 조사에서 지역갈등의 심각 수준은 다른 네 가지 분야 갈등의 심각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갈등의 심각 수준은 다른 분야 갈등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조사 결과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갈등 심각 수준도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거주 지역 크기, 학력,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골고루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57 지역갈등의 심각 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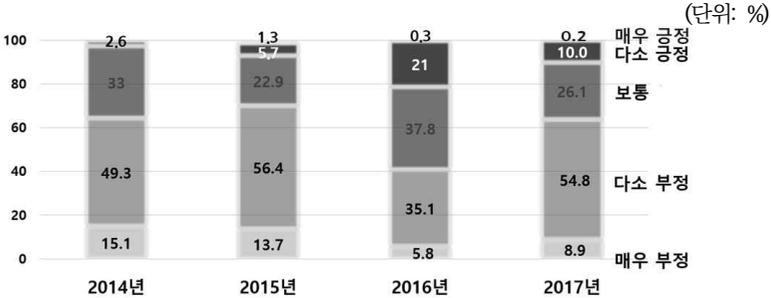


(5) 한국 사회 갈등의 장기적 영향력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0.2%(매우 긍정: 0.2% + 다소 긍정: 10.0%)로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사회 갈등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63.7%(매우 부정: 8.9% + 다소 부정: 54.8%)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중 다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갈등이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이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는 불가능하다. 모든 사회가 갈등이나 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나, 갈등의 존재가 사회의 역동성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심각 수준은 지나치게 높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갈등 상황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해결할 정부 제도나 사회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11-58 한국 사회 갈등의 장기적 영향력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21.3%)에 비해 반이 넘는 11.1%p가 하락했으며, 2015년(7.0%)과 2014년(2.6%)의 조사 결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40.9%)에 비해 22.8%p나 상승했으며, 2015년(70.1%)과 2014년(64.4%)의 조사 결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사회 갈등이 가져올 장기적 영향력에 대해 안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자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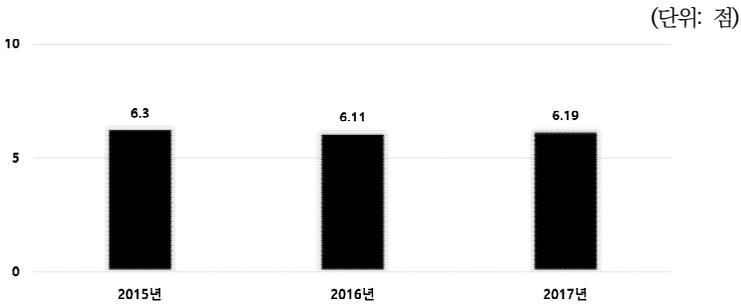
한국 사회 갈등이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주관적 가계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주관적 가계 상황이 악화될수록 다양한 사회 갈등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대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관적 가계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65.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대답했으며, 주관적 가계 상황이 상승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2.9%만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6) 한국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11점 척도(0점: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 10점: 매우 민주적이다)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7점'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10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6.2점으로 2016년(6.1점)보다 아주 조금 상승했으며, 2015년(6.3점)의 평균점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림 II-59 한국 사회의 민주성 평가



이번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 크기와 정치이념성향,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6.4점)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6.01점)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치이념성향이 보수적인 응답자일수록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6.30점)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민주주의 수준을 낮게(6.14점)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보수적인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충분히 만족해하지는 않지만, 진보적인 국민들에 비해 덜 비판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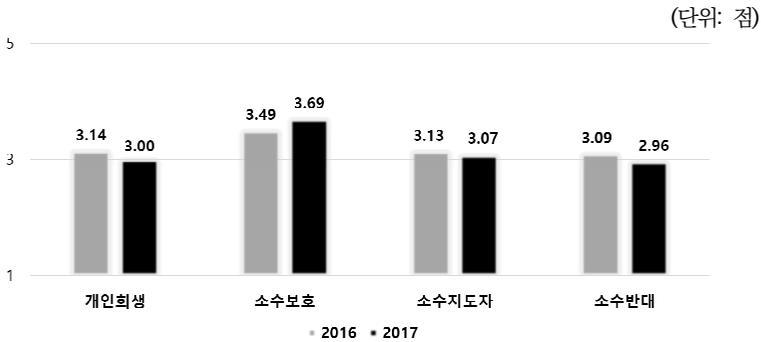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평가한 민주주의 수준의 평균점수는 6.41점으로 주관적 소득 수준이 ‘평균’인 응답자들의 평균점수인 6.30점보다 높았으며,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6.02점) 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실질소득 수준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시민성

이번 조사는 시민성을 사적 시민성과 공적 시민성이란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적 시민성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 네 가지 문장을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했다.

- 주장 1: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 주장 2: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 주장 3: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되는 법이다.
- 주장 4: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II-60 사적 시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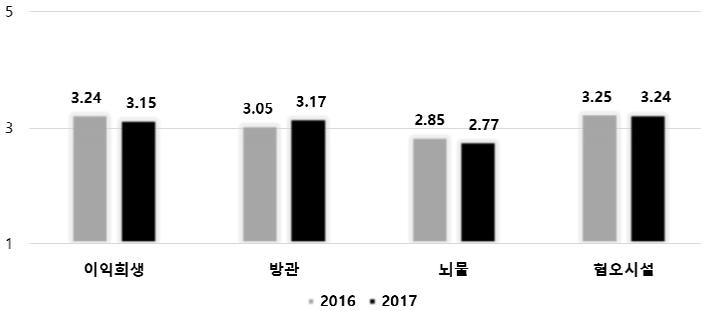


또한, 공공의 선을 위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공적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 네 가지 문장을 제시했다. 만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했다.

- 주장 5: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 주장 6: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다.
- 주장 7: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이다.
- 주장 8: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지역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

그림 II-61 공적 시민성 평가

(단위: 점)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는 주장은 ‘주장 2: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로 3.69점을 얻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의 공감을 얻은 주장은 ‘주장 8: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리면 반대할 것이다’(3.24점), ‘주장 6: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다’(3.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 가지 주장 중 가장 적은 응답자가 공감하는 주장은 ‘주장 7: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이다’(2.77점)이었다. 주장 2가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공감을 얻고 주장 7이 가장 적은 응답자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는 2016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 인권 문제와 뇌물(혹은 부정부패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점차적으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다수가 소수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초에 제정된 소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태도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3.0%가 ‘주장 7: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이다’라는 주장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23.7%는 ‘다소 동의한다’(22.3%)거나 ‘매우 동의한다’(1.4%)라고 대답했다.

사적 시민성을 측정하는 ‘주장 2: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 크기와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인권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또한, 실질소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소수자 인권 보호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이나 정치이념성향은 우리 사회 내 소수자의 인권 보호 주장에 대한 태도에 의미 있는 차이를 초래하지 않았다. 즉, 국민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정치이념성향과는 무관하게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하여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권위주의

우리 국민의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는 아래와 같이 일곱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했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했다.

주장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 및 사악함을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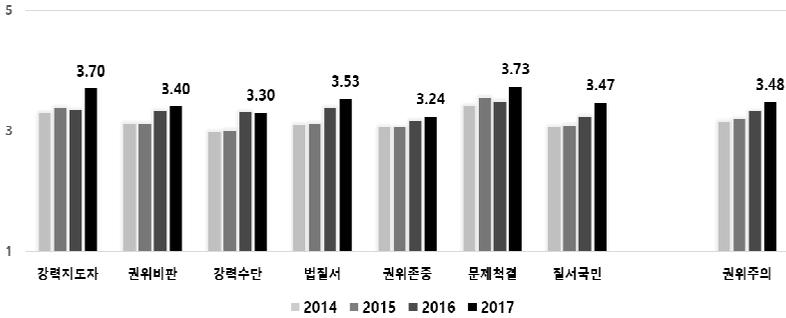
주장 2: 정부와 종교계의 적절한 권위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든다.

- 주장 3: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 주장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국민 권익)’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 주장 5: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 주장 6: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장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일치단결하여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2017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권위주의에 대한 공감도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일곱 가지 주장에 대한 공감도 평균점수는 62.04점이었으며, 2016년 조사에서는 평균점수가 57.97점이었다. 즉, 1년 사이에 국민의 권위주의에 대한 공감도는 평균 4.0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촛불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던 국민들이 좀 더 엄정한 법질서와 강력한 지도자, 질서정연한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이다. 나열된 일곱 가지 주장 중 여섯 가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2016년 대비 상승했지만, ‘주장 3: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에 대한 공감도는 2016년 57.8점에서 2017년 57.5점으로 0.3점 하락했다.

그림 11-62 권위주의에 대한 공감도(태도)

(단위: 점)



이상의 일곱 가지 주장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는 것은 ‘주장 6: 최근의 범죄, 성적 타락 및 사회적 혼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었으며, 공감하는 정도는 68.3점으로 가장 높았다. 2016년 조사에서도 주장 6에 대한 공감도가 61.9점으로 가장 높았었다. 그 다음으로, ‘주장 1: 우리나라를 망쳐 놓고 있는 극단주의 및 사악함을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67.4점), ‘주장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국민권익)’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6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적은 수의 응답자가 동의했던 것은 ‘주장 5: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로 공감하는 정도가 56.0점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도 이 주장 5에 대한 공감도가 54.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가지 주장 중 가장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주장 6: 최근의 범죄, 성적 타락 및 사회적 혼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성별이나

연령, 거주 지역의 크기, 학력,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비율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응답자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주장 6에 대한 동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정치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69.4점) 엄격한 법 집행에 동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응답자(66.2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국민일수록 우리 사회 내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성적 타락 문제들이 만연해지는 것에 대응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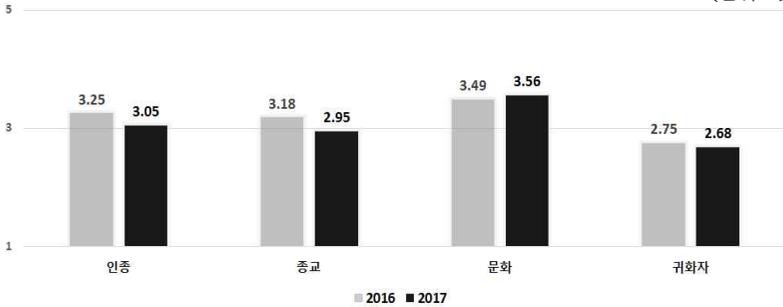
우리 국민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정치이념성향이었다. 제시된 일곱 가지 주장 중 '주장 2: 정부와 종교계의 적절한 권위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지 주장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차이에 일관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치이념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이들 여섯 가지 권위주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낮고, 보수적인 응답자일수록 이들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었다.

(9)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32.4%(매우: 2.6% + 다소: 29.8%)로 '반대' 27.7%(매우: 2.3% + 다소: 25.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39.9%), 5점 척도에서 평가했을 때 평균 3.05점으로 보통 정도의 지지를 보였다. 이는 2016년 평균 3.25점보다 떨어진 점수이다.

그림 II-63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단위: 점)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30.6%(매우:4.1% + 다소: 26.5%)로 '지지한다' 27.3%(매우: 2.2% + 다소: 25.1%)보다 높게 나타났다(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42.1%). 5점 척도 상에서 볼 때 평균 2.95점으로 2016년 평균 3.18점보다 떨어진 수치이다. 즉, 2016년도에 비해서 다양한 종교 공존에 대한 반대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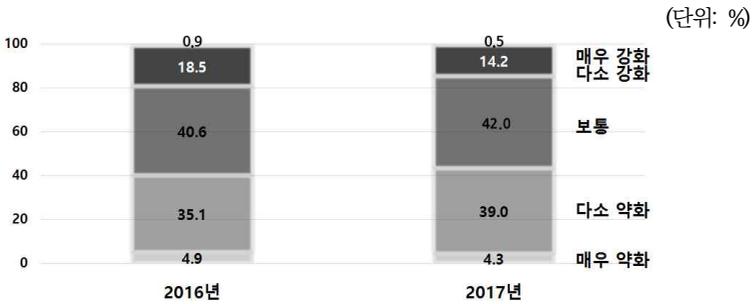
한국 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57.2%(매우: 7.1% + 다소: 50.1%)로 '반대' 8.2%(매우:0.5% + 다소: 7.7%)보다 높게 나타났다(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34.6%). 5점 척도 상에서 볼 때 평균 3.56점으로 2016년 평균 3.49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인종의 공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만 19~29세(54.4점), 대도시(53.3점), 대졸 이상(52.9점) 집단에서 높고, 다양한 종교의 공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대도시(52.1점), 대졸 이상(50.6점), 소득 수준 평균 이상(54.6점) 집단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연령별로

만 19~29세(67.3점), 대도시(65.4점), 대졸 이상(64.9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라는 응답이 14.7%(매우: 0.5% + 다소: 14.2%)로 '약화된다' 43.3%(매우: 4.3% + 다소: 39.0%)보다 낮게 나타났다(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는다: 42.0%).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2.68점으로 2016년 평균 2.75점에 비해서 떨어져 귀화자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림 II-64 귀화자 증가가 국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강화된다고 평가한 집단은 지역 크기별로 읍/면(43.0점), 권역별로 대전/충청, 대구/경북(50.2점)에서 결속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다. 사회적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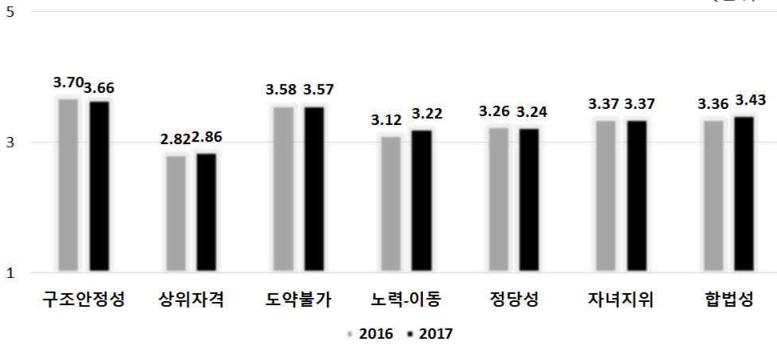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가를 위해 7가지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동의한다) 기준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 주장 1: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 주장 2: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
- 주장 3: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주장 4: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주장 5: 나(나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나(나의 가족)의 노력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
- 주장 6: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
- 주장 7: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항목이 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64.5점),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59.3점),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획득하였다’(59.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가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이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항목에서 비슷한 순위와 점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65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에 동의하는 응답은 권역별로 광주/호남(73.3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에 동의하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읍/면(69.9점), 권역별로 광주/호남(72.1점), 주관적 가계 상황별로 악화(66.6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3.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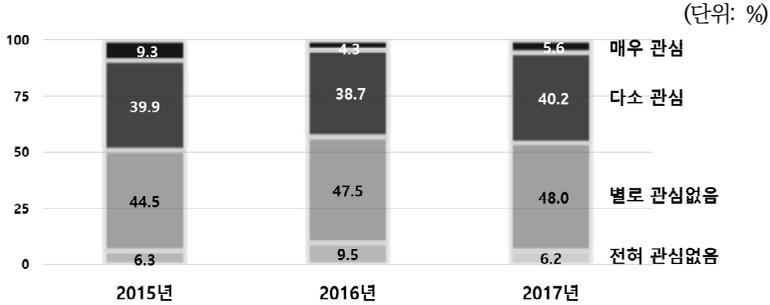
가. 북한에 대한 태도

(1)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먼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의 45.8%(매우: 5.6% + 다소: 40.2%)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4.2%(전혀: 6.2% + 별로: 48.0%)였다.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8%p 증가하였다.

그림 11-66 북한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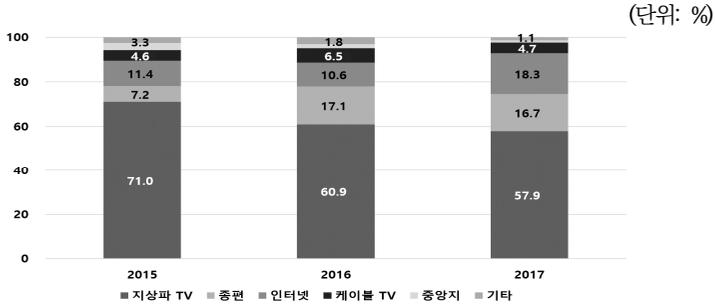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59.8%)이 가장 높았으며 20대(29.1%)가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57.4.0%), 대전/충청(53.8%) 순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강원(25.8%)이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에서는 보수(55.6%)가 진보(44.7%)나 중도(40.5%)보다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 정보 획득 경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지상파 TV’가 5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터넷’(18.3%), ‘종편 TV’(16.7%), ‘케이블 TV’(4.7%)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지상파 TV’는 3.0%p 하락한 반면, ‘인터넷’은 7.7%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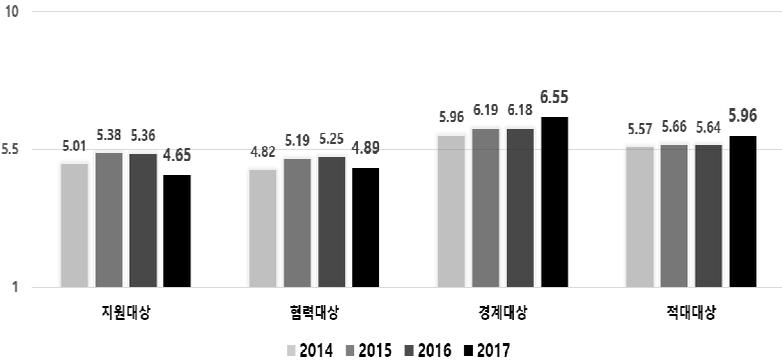
그림 11-67 북한 정보 획득 경로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지상파 TV'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상파 TV'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도시나 읍/면 지역, 대구/경북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일수록, 주관적 가계 상황 악화 그룹에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념성향이 진보일수록 '인터넷'으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3) 통합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

북한에 대한 다차원적 이미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단순히 대상 이미지 중 1순위/2순위를 선택하게 하는 조사 설계와 달리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답변 항목은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서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0점: 매우 동의한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6.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대대상’(5.96점), ‘협력대상’(4.8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계대상’ 응답은 2014년 이후 1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대비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원대상의 경우 2016년 대비 0.71점 하락하였으며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0.36점 하락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30대의 북한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다. 북한을 지원대상 그리고 협력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해 20대의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북한을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20대, 30대의 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념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대로 진보는 북한에 대한 협력요인(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이 강한 반면 보수는 북한에 대해 대결요인(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이 강하였다.

표 II-4 연령별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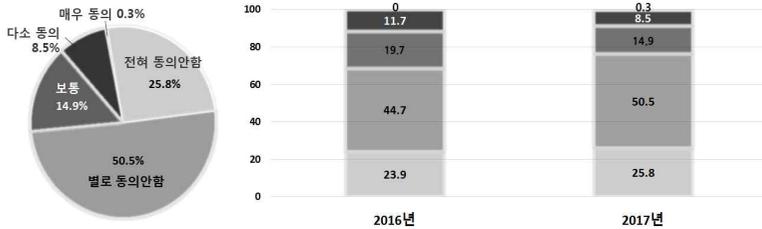
연령	자원	협력	경계	적대
20대	4.35	4.64	6.78	6.03
30대	4.79	4.82	6.78	6.06
40대	4.72	4.87	6.44	5.96
50대	4.51	4.92	6.46	6.01
60대 이상	4.82	5.10	6.37	5.82

(4)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다음으로는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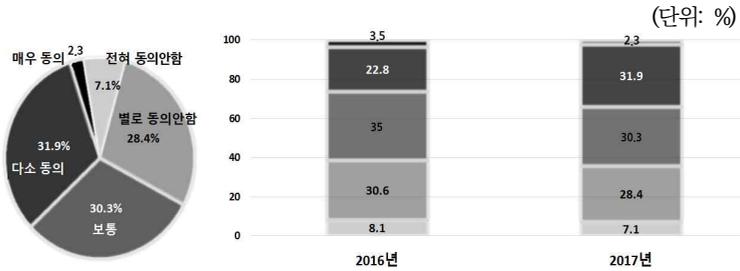
그림 II-69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

(단위: %)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 ‘긍정’ 응답은 8.8%(매우: 0.3% + 다소: 8.5%)로 ‘부정’ 응답 76.3%(전혀: 25.8% + 별로: 50.5%)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화와 타협 가능성의 긍정 응답은 2016년 (11.7%) 대비 2.9%p 하락하였으며 모든 계층에서 타협 가능성에 대해 ‘부정’ 응답은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0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추구 필요성 인식



이어 위 질문과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긍정’ 응답은 34.2%(매우: 2.3% + 다소: 31.9%)로 ‘부정’ 응답 35.5%(전혀: 7.1% + 별로: 28.4%)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2016년 대비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6년(26.3%) 대비 7.9%p 상승했다는 것이다.

(5)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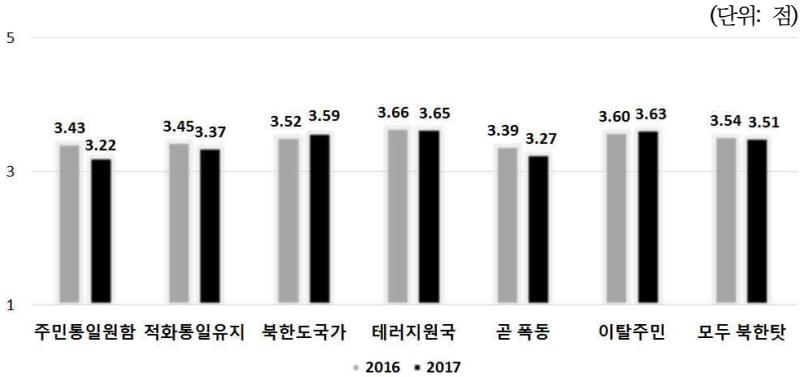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에게 북한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장 7개를 제시하고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 문항 1: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 문항 2: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 문항 3: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 문항 4: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 문항 5: 북한에서 조만간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문항 6: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보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할 것이다.

문항 7: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

그림 11-71 북한에 대한 항목별 인식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를 측정된 7개 문항 중 북한에 대한 항목별 인식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66.3점으로 가장 높으며,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보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할 것이다’(65.8점),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64.7점),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62.7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는 55.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이며, 2016년(60.8점)보다도 5.4점 하락하였다.

북한이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인지에 대해서 연령의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를 측정된 7개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념의 차이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된 갈등인 남남갈등의 주요 원

인, 또는 한국적 이념의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간주되는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해 추상성이 높은 질문에 대해서는 연령과 이념의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구체적 태도, 즉 추상성이 낮은 북한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없지만 대상으로서의 북한, 즉 상호작용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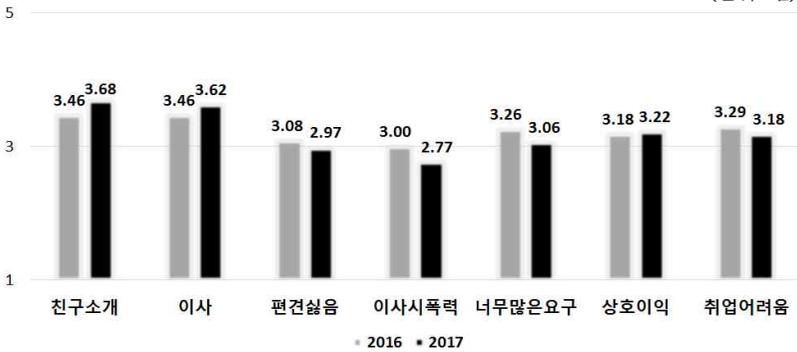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설명하는 문장 7개를 제시하고 동의 또는 반대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주장 1: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그녀를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 주장 2: 나와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이 내 옆집으로 이사오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 주장 3: 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표출하는 것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난다.
- 주장 4: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폭력 사건이 많이 생길 것이다.
- 주장 5: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 주장 6: 북한이탈주민이 학교, 사업, 주거 지역에서 남한 주민과 섞이는 것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 주장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남한 주민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림 11-7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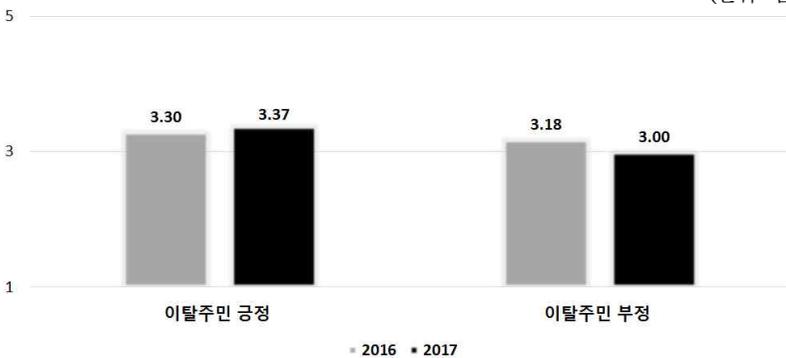
(단위: 점)



요인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구분되었다. 긍정적 태도는 주장 1, 주장 2, 주장 3, 주장 6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상호작용의 순기능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주장 4, 주장 5, 주장 7로 묶였다.

그림 11-7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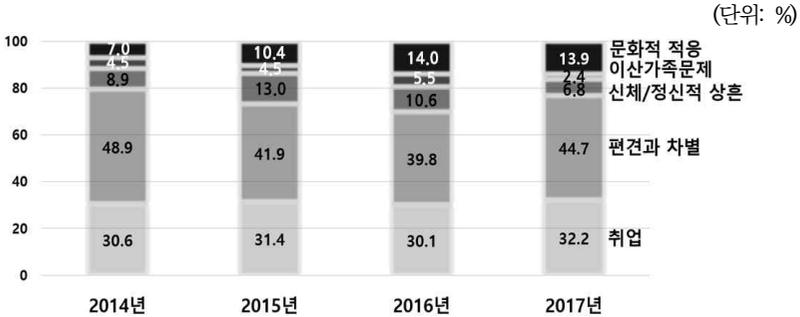
2016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향상되었고 부정적 태도는 감소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부정적으로 변화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는 본 조사 결과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서 연령과 이념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보여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는 3.34점으로 접촉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3.5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부정적 태도의 경우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02점, 접촉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94점으로 0.8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을 언급한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2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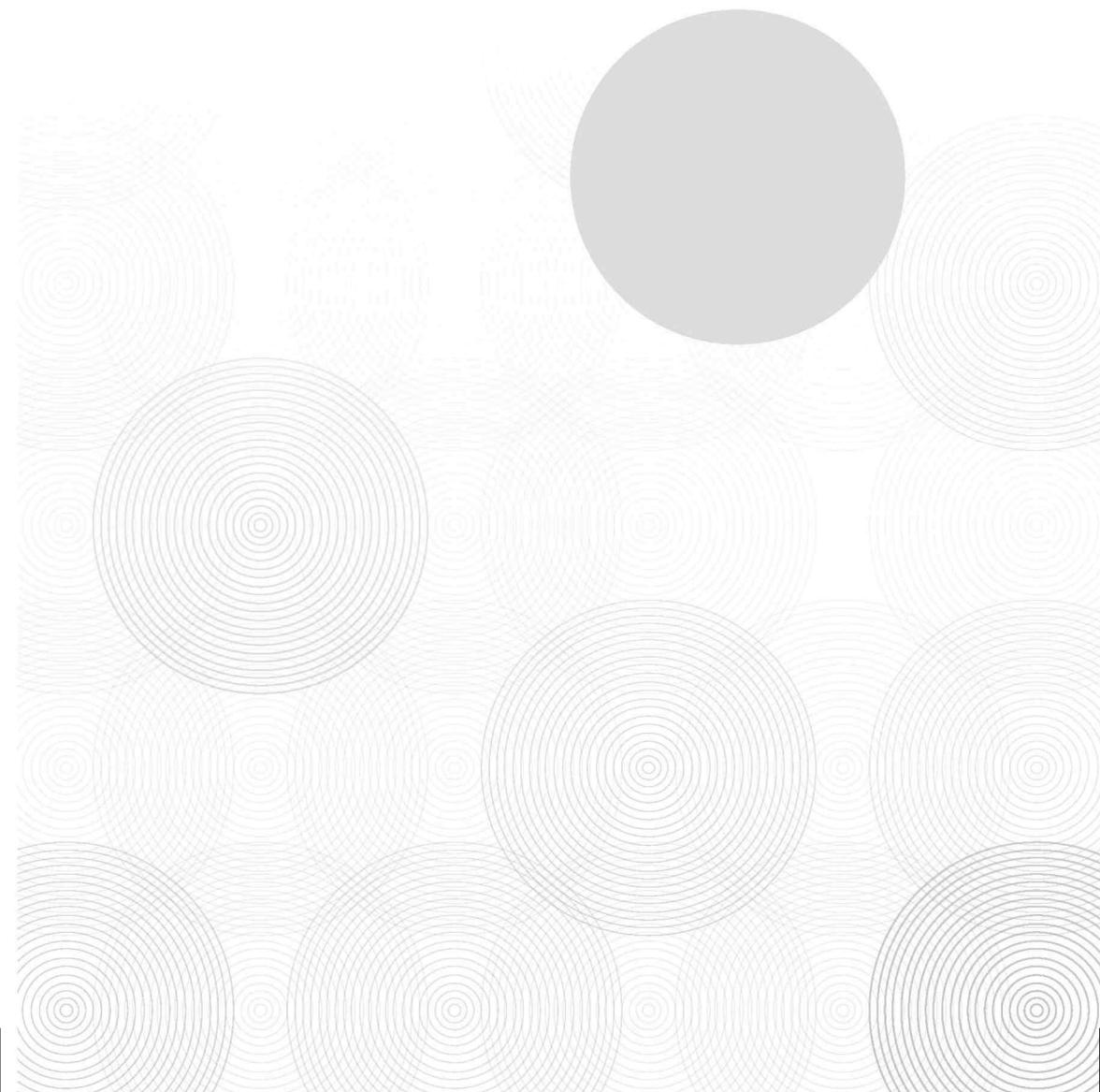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1순위는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가 4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문제 해결'(32.2%), '문화적응 어려움 해소'(13.9%), '신체 및 정신적 상흔 치료'(6.8%), '이산가족 문제 해결'(2.4%) 순이었다.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 응답은 2014년 이후 1순위를 유지하며, 2016년 대비 4.9%p 상승하였다.

그림 11-7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라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지역별로 광주/호남(57.8%), 국정운영 부정 평가(45.9%) 그룹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지역별로 서울(38.6%)과 대구/경북(54.5%), 이념성향 보수(40.7%)는 '취업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Ⅲ.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통일·대북정책

본 조사에서는 16개 구체적 통일·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11점 척도(0점: 전혀 지지하지 않음 - 10점: 매우 지지함)를 사용하여 지지도를 측정하였다. 16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4가지 정책 영역(압박정책,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정책, 대북사업 정책)으로 구분되었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추가적 분석은 심층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개별 문항 응답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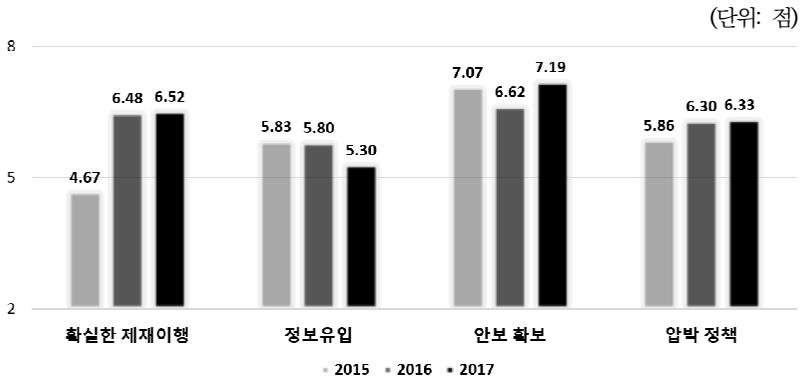
표 III-1 통일·대북정책 요인분석 결과

압박 정책	2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4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관여 정책	1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3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6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8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 경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11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동결)한다면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7	북한에 조건 없는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
	9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10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
사업 재개	13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다
	15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6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사드	1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배치되어야 한다

가. 압박정책 분석 결과와 함의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2016년에 급격히 상승한 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는 2016년 대비 0.57점 상승한 7.19점으로 압박정책의 세부 문항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북한에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6년 대비 0.50점 하락한 5.80점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6.52점으로 2016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III-1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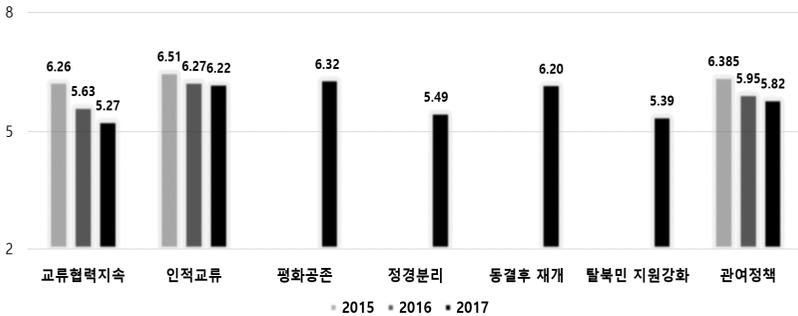
모든 연령대에서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압박정책을 구성하는 세 문항에 있어 연령별 편차는 크지 않지만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해 20대의 지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200만 원 미만 소득자에 비해 2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나. 관여정책 분석 결과와 함의

압박정책과는 대조적으로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2016년에 급격히 하락한 후 2017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여정책을 구성한 6개 세부 문항 중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 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가 6.3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가 5.26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는 2015년 대비 1점이 하락한 5.27점인 반면 인적·문화·스포츠 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6.22점으로 인적·문화·스포츠 교류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Ⅲ-2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

(단위: 점)



6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평화공존에 대한 지지가 다른 세부 문항에 대한 지지보다 높았으며, 200~400만 원 소득대의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상 소득대의 지지도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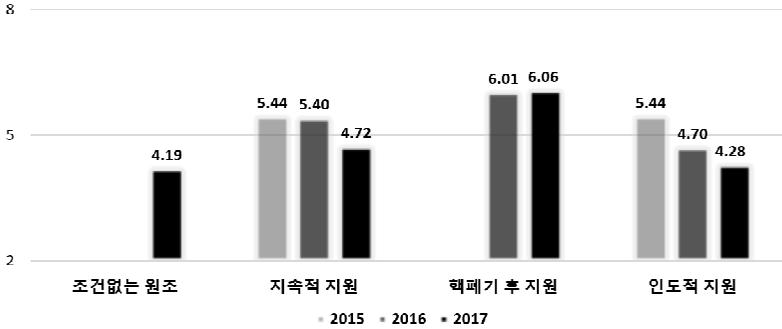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뿐만 아니라 압박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험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협력과 적대의 양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본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은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동시적 경험이 북한의 양가적 태도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만을 심어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배치되는 결과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다. 인도적 지원 정책 분석 결과와 함의

관여정책과 유사하게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실시한 2016년에 급격히 하락한 후 2017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에 조건 없는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는 4.19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4.72점,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는 6.06점으로 전반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낮은 편이다.

그림 Ⅲ-3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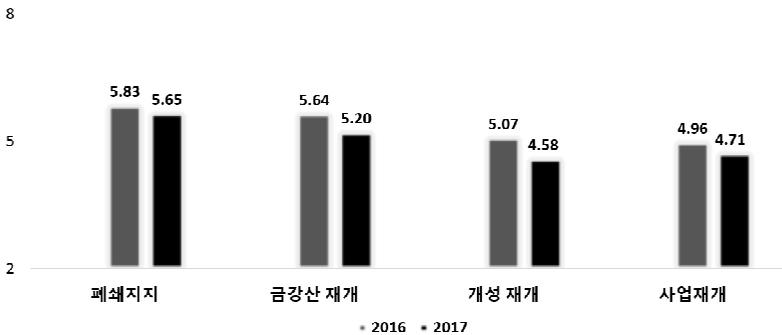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 지지도가 낮은 가운데 20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최저, 60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최고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라. 남북사업 정책 분석 결과와 함의

그림 Ⅲ-4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지지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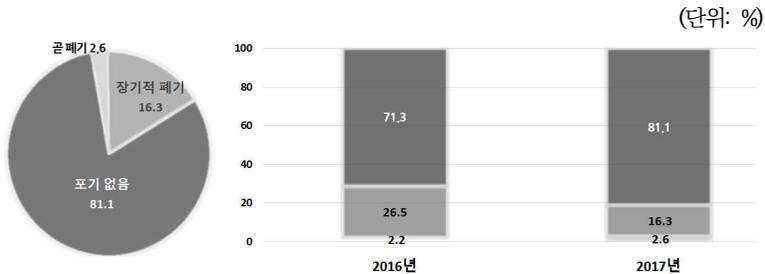
금강산 사업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2016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금강산 사업 재개에 대한 20대의 지지도가 가장 낮고 60대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연령별 지지도와 유사한 반응이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50대의 지지가 가장 낮고 40대의 지지가 가장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느낄수록 모든 세부 문항에서 대북 사업재개에 긍정적인 경향이 관찰되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대북사업 재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 핵위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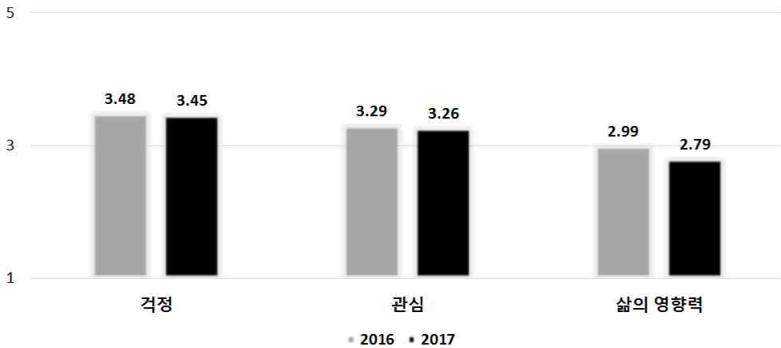
향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81.1%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71.3%) 대비 9.8%p 상승하였다.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16.3%로 나타났다. 모든 계층에서 60% 이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93.1%),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하(87.0%) 집단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III-5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평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한다’는 57.3%(매우: 10.3% + 다소: 47.0%)로 2016년(58.5%) 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하지 않는다’ 20.6%(전혀: 1.6% + 별로: 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핵위협을 걱정하는 비율은 만 60세 이상, 대전/충청, 국정운영 긍정 평가, 소득이 낮을수록, 이념성향 보수, 주관적 가계 상황 호전,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응답되었다. 반면, 광주/호남 지역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2.9%로 걱정하는 응답(30.4%)보다 높았다.

그림 III-6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관심도 및 북한 핵 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는 ‘생각한다’가 47.0%(매우: 3.4% + 다소: 43.6%)로 2016년(45.6%) 대비 1.4%p 상승하였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2.1%(전혀: 2.0% + 별로: 20.1%)였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은 연령이 높을수록, 제주와 대전/충청 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국정운영 긍정 평가, 월평균 소득

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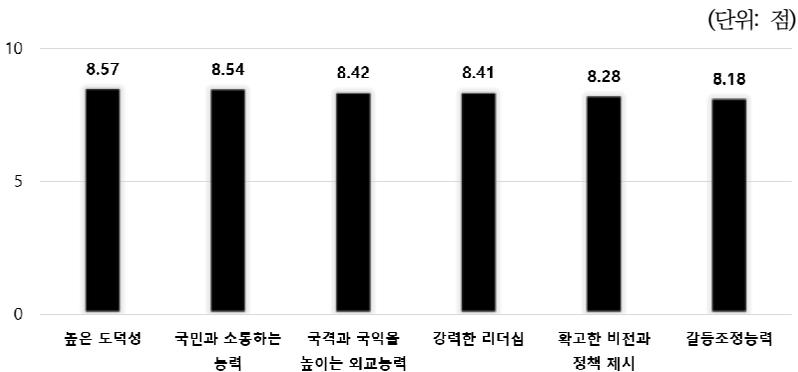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1.7%(매우: 4.1% + 별로: 37.6%)로 ‘영향을 미친다’ 23.0%(매우: 1.7% + 다소: 2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016년(32.4%) 대비 9.3%p 상승한 것은 핵위협에 대한 피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강원과 광주/호남, 국정운영 부정 평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평가였다.

3. 대통령 리더십

대통령이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높은 도덕성’이 8.57점으로 가장 높으며,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8.54점),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외교능력’(8.42점), ‘강력한 리더십’(8.4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대통령ی 갖추어야 할 리더십 덕목



대통령이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높은 도덕성’이라는 응답은 읍/면(8.71점), 대구/경북(8.94점), 국정운영 부정 평가(8.60점), 주관적 가계 상황 악화(8.70점), 주관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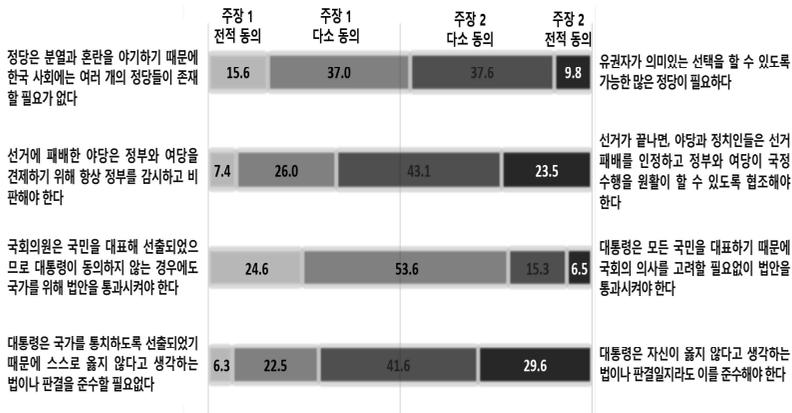
4.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

한국 정치구조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살피기 위해 두 개의 대립되는 주장을 묶어 모두 8개의 주장을 제시하고 동의 또는 반대 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 주장 1-1. 정당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 주장 1-2. 유권자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당이 필요하다.
- 주장 2-1.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항상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 주장 2-2. 선거가 끝나면, 야당과 정치인들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주장 3-1.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선출되었으므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주장 3-2.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주장 4-1.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도록 선출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을 준수할 필요 없다.
- 주장 4-2. 대통령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일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림 Ⅲ-8 한국 정치구조에 대한 평가

(단위: %)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52.6%로 ‘가능한 많은 정당이 필요하다’(47.4%)라는 의견 보다 5.2%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선거가 끝나면 패배를 인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6.6%로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항상 정부를 감시, 비판해야 한다’(33.4%)라는 의견보다 33.2%p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78.2%로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21.8%)라는 의견보다 56.4%p 높게 나타났으며, ‘대통령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1.2%로 ‘대통령은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28.8%)라는 의견보다 42.4%p 높았다.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만 60세 이상, 이념성향 보수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가 끝나면 패배를 인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야 한다'라는 의견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높았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은 광주/호남 지역, 소득이 높을수록, 이념성향 진보 그룹에서 높았으며, '대통령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중·소도시, 광주/호남 지역,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그룹에서 높았다.

IV. 심층분석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 배경

통일·대북정책은 정량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성과 역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동력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통일·대북정책과 관련된 국정목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국정과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에 반영되어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소통·참여와 교육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 목표가 아니라 분단 이후 모든 정부의 주요 과제였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단순히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의 합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즉 남남갈등은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태도 및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념성향이 좌우되는 서구³⁾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이념의 주요 결정요소⁴⁾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된 유일한 경우이며, 결과적으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은 정부의 전반적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확대되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갈등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3) J. T. Jost, C. M. Federico, and J.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pp. 307~337.

4) 김현정·박영옥·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pp. 103~132;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pp. 105~126.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단순히 남북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갈등 전반을 투영하는 문제이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갈등 구조, 즉 남남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일국민협약의 경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의 원인에 기반한 협약안이 요구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대표되는 통일 당위론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은 ‘통일강요협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의 축으로 알려진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남갈등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가설들을 검토한 후 발전적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1) 남남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선행 연구

남남갈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강원택은 남남갈등을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⁵⁾ 손호철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⁶⁾ 조민은 통일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궁극적 목표, 현실 인식, 접근방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이념적 갈등 양상,⁷⁾ 그리고 조한범은 남북관계 또는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갈등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이를 종합해 보면 남남갈등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통일·대북정책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5) 강원택,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p. 63.

6)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p. 13.

7) 조민,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보혁갈등을 넘어,”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p. 1.

8) 조한범,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9.

남남갈등의 근본 원인을 분단, 그리고 6.25 전쟁과 같은 역사적·구조적 변수들과 그 변수들의 상호작용에서 탐색하는 연구들은 남남갈등을 분단 초기 이념에 기반한 적대적 정책이 6.25 전쟁으로 인해 적대성을 넘어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가치관에 따른 갈등으로 보고 있다.⁹⁾ 또한, 북한·안보·통일 정책의 주체인 정부와 이에 호응하거나 대응하는 시민사회 또는 정치집단과의 갈등관계 혹은 시민사회(정치집단) 내에서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¹⁰⁾ 특히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이 통일·대북정책을 독점하면서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남남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¹¹⁾

통일·대북정책 선호에 지역, 연령, 학력, 경제 수준 등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남은 압박정책을, 호남은 관여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¹²⁾ 학력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관여정책을 선호하였다.¹³⁾ 연령이 높을수록 압박정책을 지지한다는 보고가 다수이지만,¹⁴⁾ 최근 이러한 경향의 역전

9)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pp. 31~59;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 평화』, 제3권 2호 (2011), pp. 3~32;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pp. 11~53; 손호철, “남남갈등의 남남갈등을 넘어서,” 『진보평론』, 제30호 (2006), pp. 216~230; 허태희·윤영미·윤황,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국제정치연구』, 제12권 2호 (2009), pp. 69~100.

10)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pp. 11~53;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pp. 3~32.

11) 변창구,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통일전략』, 제11권 3호 (2011), pp. 173~209; 허태희·윤영미·윤황,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pp. 69~100;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pp. 3~32.

12)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pp. 31~59;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101~131; 송정호,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합의의 민주적 제도,”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2009), pp. 203~223;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pp. 11~53.

13)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pp. 101~131.

14) 강원택,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pp. 55~110; 이우영, “북한관

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¹⁵⁾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통일·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 즉 남남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시계열적으로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른 변화는 과거 10년 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정책 선호 차이에 큰 관심이 없으며 심리·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이 남남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념을 꼽고 있다.¹⁶⁾ 이른바 보수는 압박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관여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 즉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강원택¹⁷⁾은 한국 국민의 이념은 반공 이데올로기, 즉 북한과 관련한 가치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정훈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념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⁸⁾ 또한 김현정, 박영옥, 그리고 박상희는 이념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후보 선택 예측력이 높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¹⁹⁾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의 측면에서는 이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심리적 구성개념(psychological construct)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⁰⁾

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pp. 101~131.

15) 김현정·박영옥·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pp. 103~132.

16) 변창구,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pp. 173~209; 강원택,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pp. 55~110; 이성우,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분쟁해결연구』, 제13권 3호 (2015), pp. 225~256.

17) 강원택,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pp. 55~110.

18)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pp. 105~126.

19) 김현정·박영옥·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pp. 103~132.

20)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pp. 101~131; 이성우,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pp. 225~256;

진보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보수는 북한을 위협과 대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다루는 역사적·기술적 연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통일·대북정책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하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들 역시 이러한 주장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²¹⁾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며,²²⁾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과 탈냉전적 인식의 공존이 남남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²³⁾ 결국 대북인식은 남남갈등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 전제인 것이다.²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집단과 북

하지만 최근 이념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결정에 영향을 없다는 연구도 역시 보고되고 있다(김태현·남궁곤·양유석,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3호 (2003), pp. 151~174;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pp. 187~215.). 예를 들어 이상신의 북한 이미지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이념은 지원/협력 대상으로서 북한, 그리고 경제/적대 대상으로서 북한을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1)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2012), pp. 51~69;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pp. 31~59; 김근식,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361~372; 김병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pp. 111~139; 김창희, “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15권 3호 (2010), pp. 53~76; 신윤, “육구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2호 (2010), pp. 69~92;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2호 (2014), pp. 30~58;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pp. 35~50;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권 2호 (2013), pp. 29~63; 이한수·박진수, “이익을 기반으로 한 통일인식과 남남갈등,” 『국가전략』, 제22권 4호 (2016), pp. 33~64;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pp. 101~131;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pp. 167~184.

22)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pp. 31~59.

23) 김근식,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pp. 361~372.

24)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pp. 30~58.

한을 타도와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집단의 통일·대북정책 선호가 다르다.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국민은 대북 포용정책을 선호하며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국민은 대북 강경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²⁵⁾ 행위자 차원에서 북한은 생존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이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북한은 정체성(형제, 동포적 요소 및 반공적 요소의 동시 존재) 형성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갈등적 인식이 정책 선호에 밑바탕이라는 것이다.²⁶⁾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인도적 지원, 국가 보안법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는 경험적 연구 역시 북한 인식이 남남갈등의 핵심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²⁷⁾ 북한 인식에 대한 시계열 연구는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따라 북한 인식이 급변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⁸⁾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남남갈등 및 통일·대북정책 선호의 차이에 결정적 요인이라면,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남갈등 관리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 및 권위주의, 보편주의와 같은 가치체계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이상신은 통일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을수록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일

25)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pp. 31~59.

26) 신울, “육구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pp. 69~92.

27) 이한수·박진수, “이익을 기반으로 한 통일인식과 남남갈등,” pp. 33~64.

28) 권수현,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 177~204; 김병로, “통일인식 변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33권 1호 (2009), pp. 154~172; 이성우,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pp. 225~256;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pp. 30~58;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아세아연구』, 제56권 1호 (2013), pp. 153~182.

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을수록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혜숙은 자기초월적이고 변화에 개방적인 가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고양(self-enhancement)적이며 변화에 보수적인 권력 지향적 가치는 북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현정, 박영옥, 박상희는 안전과 동조, 성취의 가치를 증시하는 개인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박애, 보편주의, 그리고 경제적 성취를 증시하는 개인은 북한 지원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²⁹⁾

북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류협력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 역시 보고되고 있다.³⁰⁾ 북한 주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및 동정심을 느끼는 국민일수록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및 통일준비 정책과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또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평화적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³¹⁾

일반적으로 민족정체성이 높으면 교류협력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추론이 있지만, 경험적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는 거리가 있다. 민족정체성은 인도적 지원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³²⁾ 보수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높을수록 단절과 압박정책, 그리고 조건부 지원정책을 선호하며,³³⁾ 민주화 선호 경향이 강할수록 대북지원과 교류협

29)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pp. 35~50; 이상신, “우리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론 조사 데이터로 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4호 (2013), pp. 113~133;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pp. 187~215; 김현정·박영옥·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pp. 103~132.

30)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pp. 29~63.

31)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pp. 167~184.

32) 이한수·박진수, “이익을 기반으로 한 통일인식과 남남갈등,” pp. 33~64.

33)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pp. 29~63.

력 정책에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었다.³⁴⁾ 통일이 국가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³⁵⁾ 통일의 필요성 역시 통일·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남남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를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선행 연구의 제언은 ① 관용적 태도, ② 국민 여론에 기초한 대북정책, ③ 통일·대북정책과 북한 인식에 대한 합의, ④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극복, ⑤ 통일교육 강화, ⑥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투명성 재고, ⑦ 언론의 균형적 시각 필요, ⑧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³⁷⁾

(2) 문제 제기

북한 인식(이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즉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긍정’의 한 극단과 ‘부정’의 다른 극단 사이의 하나의 점으로 측정하거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사지선다와 같은 명목적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위협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좌·우의 이념 문제를 1차원으로 연구하고 있는 정치심리학의 전통에 바탕을

34)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pp. 63~102.

35) 이한수·박진수, “이익을 기반으로 한 통일인식과 남남갈등,” pp. 33~64.

36)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pp. 153~182.

37) 김근식,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pp. 361~372; 김창희, “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pp. 53~76; 김병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pp. 111~139; 변창구,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pp. 173~209; 송정호,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합의의 민주적 제도,” pp. 203~223;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pp. 11~53; 박종철 외,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272; 조한범,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pp. 1~105.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이념(ideology)은 좌-우의 차원으로 설명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념에 대한 1차원적 가정은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된다.³⁸⁾

개념(concept), 범주(category) 등 인간의 지식표상(knowledge)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의 이념, 또는 스키마는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Jervis³⁹⁾는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양가적, 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지적 스키마에 기반한 Hurwitz & Peffely⁴⁰⁾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식구조 이론은 인간의 지식구조에 체계적 구조성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현대 인지심리학의 연구결과와 배치된다. 사실 인간의 지식구조에 대한 이론으로서 스키마 이론의 효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현대인지심리학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남남갈등의 맥락에서 북한 인식에 대한 단선적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다중적, 모순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측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은 북한을 지원대상이자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하기 힘들다.

³⁸⁾ John T. Jost, Alison Ledgerwood, and Curtis D. Hardin, "Shared reality,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relational basis of ideological belief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vol. 2, no. 1 (2008), pp. 171~186; John T. Jos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pp. 307~337.

³⁹⁾ Robert Jervis, "Understanding beliefs,"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5 (2006) pp. 641~663.

⁴⁰⁾ Jon Hurwitz and Mark Peffley, "How are foreign policy attitudes structured? A hierarchical mod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 4 (1987), pp. 1099~1120.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이 통일·대북정책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인식에 대한 부정확한 측정은 통일·대북정책 선호 역시 부정확하게 추론될 수밖에 없다. 단선적 북한 인식에 근거하면 우리 국민은 관여정책을 선호하거나 압박정책을 선호하는 두 집단으로만 구분될 수 있다. 즉 남남갈등은 두 집단 간의 갈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 인식의 다중성을 가정한다면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선호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북한 인식이 다중적이라면 통일·대북정책 선호 역시 다중적일 것이며 이는 남남갈등의 양상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 이중적, 양가(兩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⁴¹⁾ 북한은 적인 동시에 동포이며,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고 경제적인 차원과 안보적 차원에서도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인식의 다중성은 2015~2016년 본 과제의 1~2년 차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본 과제의 1~2년 차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실용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의 4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⁴²⁾ 실용주의 집단은 북한과의 협력과 대결을 모두 긍정하

41) 신율, “육구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pp. 69~92; 김태현·남궁곤·양유석,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pp. 151~174;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제3권 1호(2011), pp. 129~173; 이성우,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pp. 225~256;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pp. 30~58;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pp. 167~184;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pp. 3~32; 김현정·박영옥·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pp. 103~132; 장민수·김준식,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인식에의 영향: 순차적 로짓분석과 이분산 프로빗분석의 적용,” 『한국정치연구』, 제24권 1호(2015), pp. 111~139.

42) 2015년, 2016년, 2017년 조사에서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0-10점으로 측정하였다(각 조사당 1,000명). 본 보고서에서는 3,000명의 응답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며, 현실주의 집단은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이고 대결적 정책을 선호하며, 자유주의 집단은 북한과의 협력 및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고 대결적 정책에 부정적이며, 마지막으로 고립주의 집단은 북한과의 협력과 대결을 모두 부정한다.

북한에 대한 대립적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양가적 신념은 개인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다. 이른바 인지일관성 이론, 또는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태도의 충돌로 인한 불편감은 북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두 신념이 상충하면 부조화와 갈등이 발생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인지부조화 이론은 상충되는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⁴³⁾한다.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이유(군사적 위협)와 관여해야 하는 이유(같은 민족)가 각각 뚜렷하며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연구 가설과 연구개요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 선호가 대북인식에 의해 좌우되고, 대북인식 이 양가적이라면 통일·대북정책 선호 역시 양가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양상을 파악하고,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 대북인식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의 대응 정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대북정책 선호와 관련된 남남갈등에

⁴³⁾ Ziva Kunda,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1990), pp. 480~498.

대해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여 선호집단’과 ‘압박 선호집단’의 이분법적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나. 심층분석 결과

(1)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는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내용 중 통일·대북정책에 16개 문항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보통 - 10점: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였다. 먼저 16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6개 문항의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2>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통일·대북정책에 국민의 지향은 크게 4개 요인 - 압박정책,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북사업 재개 - 으로 구분되었다. 인도적 지원 문제와 대북사업 재개 문제를 각각 관여정책 또는 압박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정책, 관여정책과 구분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압박정책 대 관여정책의 이분법적 정책 구분의 분화를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 재개를 지지할수록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경향 <표 IV-1>은 압박정책과 관여정책 중심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한 의견 역시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사드 배치가 압박정책의 하위요인 또는 관여정책의 하위요인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반하는 결과이다.

표 IV-1 통일·대북정책의 4요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압박정책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관여정책	.19***		
인도적 지원	-.21***	.46***	
사업 재개	-.18***	.37***	.48***

주: ***: $p < .001$

표 IV-2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측정한 16개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구분	번호	문항	평균 (표준오차)
압박정책	2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6.33(.04)
	4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관여정책	1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5.82(.04)
	3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6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8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 경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11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동결)한다면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	
	1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7	북한에 조건없는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	4.28(.05)
	9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10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	
사업재개	13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다*	4.71(.06)
	15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6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사드	1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배치되어야 한다	6.12(.06)

주: * 역채점하여 평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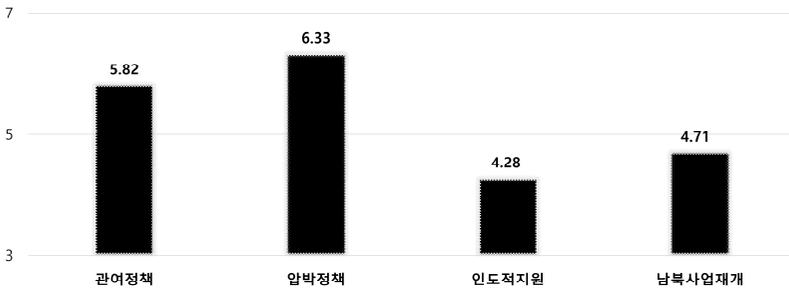
(2) 정책 영역별 지지도 분석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6.33점)가 가장 높은 가운데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5.82점) 역시 높은 수준이며, 남북사업 재개(4.71점)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4.28점)을 지지하는 정도는 중앙치 5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압박정책-관여정책-남북사업 재개-인도적 지원 순의 정책 선호도는 성별, 연령대, 학력, 경제적 수준, 이념, 북한이탈주민 접촉 경험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 지역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광주 및 호남 지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남북사업 재개에 대한 지지도 보다 높았으며 강원 지역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상회하였다.

연령별로 네 정책 영역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압박정책,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에 대한 20대의 지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으며, 이는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20대의 무관심으로 해석 가능하다.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6.40점)와 60대(6.37점)이며 20대의 압박정책 지지도가 최저(6.25점)였다.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90점)와 50대(5.88점)이며 20대의 관여정책 지지도가 최저(5.75점)였다. 남북사업 재개에 대해 40대(4.84점)가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50대(4.58점)는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20대(4.09점) 지지도가 가장 낮은 가운데 60대 이상(4.40점)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 IV-1 통일·대북정책의 4영역의 지지도 평균

(단위: 점)



소득이 높을수록 관여정책, 대북사업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향이 있다. 압박정책의 경우 200~400만 원 소득대의 지지도(6.36점)가 400만 원 이상 소득대의 지지도(6.34점)와 유사하였다. 관여정책의 경우 400만 원 이상 소득대의 지지도(5.89점)가 200만 원 미만(5.78점), 200~400만 원 소득대(5.74점)보다 높았다. 대북사업 재개(200만 원 미만: 4.36점, 200~400만 원: 4.64점, 400만 원 이상: 4.85점)와 인도적 지원(200만 원 미만: 4.27점, 200~400만 원: 4.23점, 400만 원 이상: 4.32점)역시 4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접촉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압박정책(유: 6.50점 vs. 무: 6.30점), 관여정책(유: 6.01점 vs. 무: 5.70점), 인도적 지원(유: 4.50점 vs. 무: 4.23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이념성향에 따른 정책 선호 차이는 대북사업 재개 및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대북사업 재개(4.15점)와 인도적 지원(3.97점)에 있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부정적(대북사업 재개: 5.12점, 인도적 지원: 4.63점)이었다. 또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압박정책에 대한

선호가 뚜렷(압박정책: 6.56점 vs. 관여정책: 5.65점)한 반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 대한 선호(압박정책: 6.21점 vs. 관여정책: 6.05점)가 유사하였다.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의 지지도가 동시에 높은 본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첫 번째 가능성은 북한에 대해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남남갈등 심화로 국민 여론이 압박정책만을 지지하는 집단과 관여정책만을 지지하는 집단으로 양분되어서 나온 선택적 지지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두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3)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만일 첫 번째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즉 북한에 대해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면 군집분석 결과 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집단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즉 국민 여론이 압박정책만을 지지하는 집단과 관여정책만을 지지하는 집단으로 양분되어서 나온 선택적 지지의 결과라면 군집분석 결과 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집단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압박정책만을 지지하는 집단과 관여정책만을 지지하는 집단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군집분석⁴⁴⁾ 결과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4개 군집-압박-관여 병행집단, 관여중심 집단, 압박중심 집단, 무관심 집단-이 확인되었다(〈그림 IV-2〉, 〈표 IV-3〉).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6.69점)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7.09점)가 모두 높은 집단인 압박-관여 병행집단의 비율은 39.3%이며, 인도적 지원(4.57점)보다 대북사업 재개(5.12점)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압박정책에는 긍정적이지만(7.50점), 인도적 지원(3.08점),

⁴⁴⁾ 요인분석 결과 밝혀진 통일·대북정책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북사업 재개(3.45점)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압박중심 집단의 비율은 17.8%였다. 압박중심 집단은 관여정책(5.71점)에 대해서도 중양치 이상의 선호를 보이고 있다. 관여정책(6.62점), 인도적 지원(5.53점), 대북사업 재개(5.12점)에는 긍정적이지만 압박정책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관여중심 집단의 비율은 11.7%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북정책 4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응답을 보인 집단인 무관심 집단의 비율은 31.2%였다.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동시에 높은 이유가 ‘남남갈등’에 의한 선택적 지지, 즉 우리 사회가 압박정책을 지지하는 집단과 관여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관여와 압박의 병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IV-2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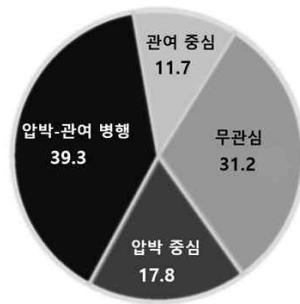


표 IV-3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군집별 4영역에 대한 평균(표준오차)
(단위: 점)

군집 대북정책	압박-관여 병행 집단	관여중심 집단	압박중심 집단	무관심 집단
관여정책	6.69(.03)	6.62(.07)	4.71(.05)	5.04(.04)
압박정책	7.09(.04)	4.81(.08)	7.50(.06)	5.29(.05)
대북사업 재개	5.12(.08)	5.43(.18)	3.45(.12)	4.65(.09)
인도적 지원	4.57(.07)	5.53(.14)	3.08(.08)	4.14(.07)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병행추진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압박중심, 관여중심, 무관심 집단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력, 소득 수준의 효과는 전반적 결과와 유사하였다. 20대의 경우 무관심 집단(36.6%)의 비율과 병행추진 집단의 비율(36.0%)이 비슷하였지만 30대 이상의 경우 병행추진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공통적(30대: 38.8%, 40대: 37.7%, 50대: 43.2%, 60대 이상: 40.25%)이다. 경북 지역(65.4%)과 서울 지역(51.8%)에서 병행추진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압박중심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8.4%), 관여중심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지역(22.2%)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의 43.2%는 병행추진, 16.6%는 관여중심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접촉 경험이 없는 집단의 38.4%는 병행추진 정책, 10.6%는 관여중심 정책을 선호하였다. 이념에 관계없이 병행추진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은 공통적(보수: 37.3%, 중도: 35.3%, 진보: 44.2%)이지만, 진보의 병행추진 집단의 비율이 보수나 중도의 병행추진 집단의 비율보다 높은 것은 차별적이다. 진보는 압박중심 정책(11.9%)보다 관여중심 정책(14.9%)을 선호하지만, 보수와 중도는 관여중심 정책(보수: 12.9%, 중도: 7.4%)보다 압박중심 정책(보수 22.8%, 중도: 20.9%)을 선호하였다.

(4) 압박-관여 병행정책과 북한에 대한 인식 간 대응분석 결과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 대한 동시 지지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적대와 협력의 상충적·양가(兩價)적 관계임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압박-관여 병행집단은 소위 ‘진보 10년, 보수 9년’의 반성 또는 최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태도라기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모순적·양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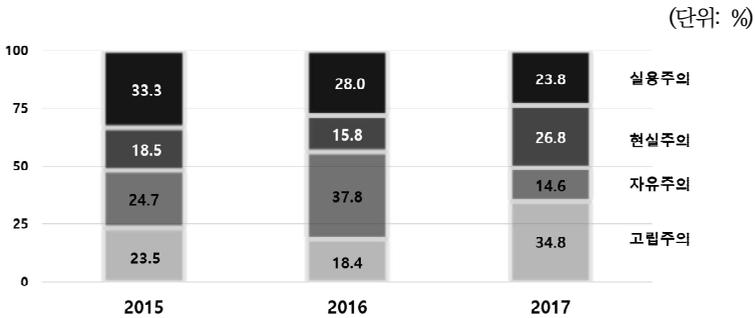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는 통일·대북정책과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양가적 접근이 아닌 긍정-부정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였기에 압박-관여 병행집단을 관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과거 모든 정부가 취했던 대북정책의 기초이며 이는 북한에 대한 상충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의 주장대로 통일·대북정책의 선호가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네 집단의 대북인식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과제의 1~2년 차 연구에 따르면 북한 인식 역시 4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그렇다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4군집은 북한 인식에 대한 4군집과 대응되어야 한다. 즉 ① 북한을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대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실용주의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동시에 관여를 해야 한다는 압박-관여 동시집단에 대응되어야 하며, ②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이며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주의는 압박중심 집단에 대응되어야 하며, ③ 자유주의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대결에 대해 부정적인 점에서 관여중심 집단에 대응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④ 고립주의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도 대결의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북한에 무관심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 중 무관심 집단에 대응되어야 한다.

먼저 2017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실용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의 4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실용주의(북한과의 협력과 대결을 모두 긍정)는 23.8%, 현실주의(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이며, 대결적 정책을 선호)는 26.8%, 자유주의(북한과의 협력 및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며 대결적 정책에 부정적)는 14.6%, 고립주의(북한과의 협력과 대결을 모두 부정)는 34.8%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대북정책의 선호 간 대응 여부에 있기 때문에 대북인식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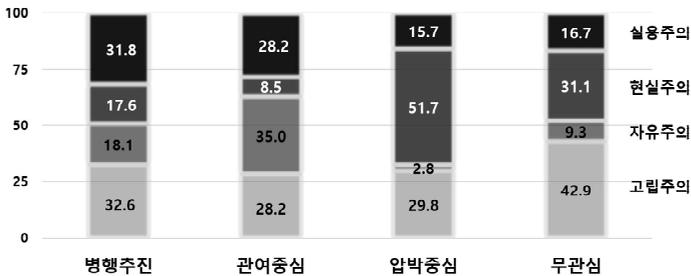
그림 IV-3 북한 인식에 대한 4군집과 비율



먼저 통일·대북정책 4군집별 북한 인식 4군집 모형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북한 인식 4군집 모형과 통일·대북정책 4군집 모형은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4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별 북한 인식 4군집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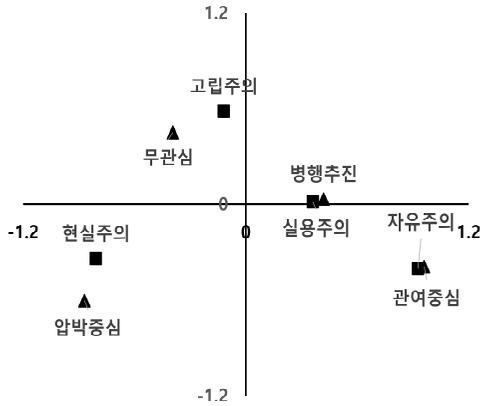
(단위: %)



병행추진 집단의 경우 실용주의(31.8%)와 고립주의(32.6%) 인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실용주의와 고립주의는 협력인식과 대결인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병행추진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관여중심 집단에서는 자유주의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35.0%), 압박중심 집단에서는 현실주의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51.7%), 무관심 집단에서는 고립주의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42.9%)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통일·대북정책 선호와 북한 인식이 대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 간 대응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일·대북정책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IV-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① 병행추진 집단-실용주의 대응, ② 관여중심 집단-자유주의 대응, ③ 압박중심 집단-현실주의 대응, ④ 무관심 집단-고립주의의 대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대응강도(<그림 IV-5>에서는 대북인식과 통일·대북정책 선호의 거리)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병행추진 집단-실용주의의 대응강도와 관여중심 집단-자유주의의 대응강도가 압박중심 집단-현실주의의 대응강도와 무관심 집단-고립주의의 대응강도보다 강력하였다.

그림 IV-5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



20대를 제외한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20대는 관여중심 집단-자유주의 간 대응정도는 약하지만 병행추진 집단-실용주의의 대응은 강력하였다. 30대는 관여중심 집단-자유주의 간 대응보다 병행추진 집단-실용주의의 대응이 강력하였으며, 40대와 50대는 통일·대북정책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 간에 균질적으로 대응되었다. 60대는 압박중심 집단-현실주의의 대응이 강력하였다(〈그림 IV-6〉). 보수집단의 경우 압박중심 집단-현실주의의 대응만 강력한 반면, 중도 집단과 진보집단은 균질적인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그림 IV-7〉 상단). 북한이탈주민 접촉 경험은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강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IV-7〉 하단).

그림 IV-6 연령별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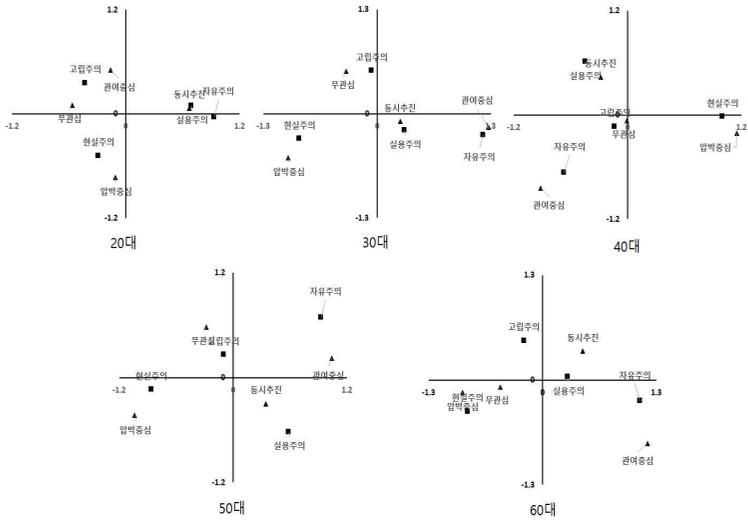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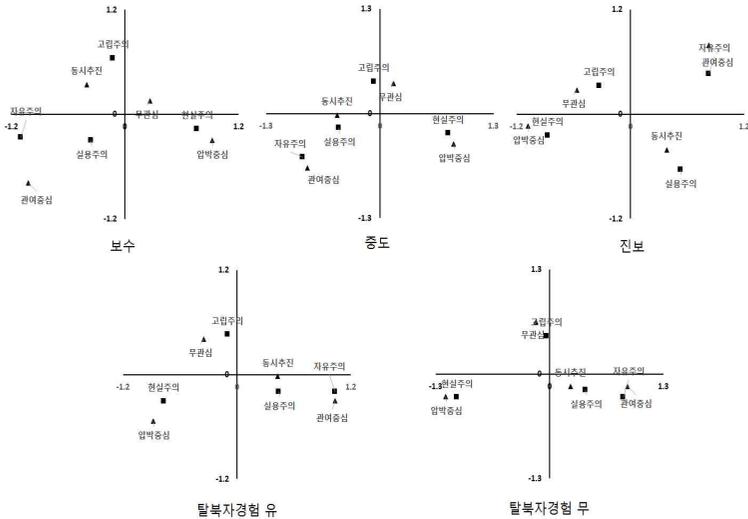


그림 IV-7 이념 및 북한이탈주민 접촉 경험에 따른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



다. 정책적 함의

통일·대북정책의 네 영역에 대한 전반적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4개 요인-압박정책,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북사업 재개-으로 구분된 것은 통일·대북정책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 문제를 한반도 정세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으로 해석 가능하다.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을 압박정책 또는 관여정책의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화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 추진의 자율성 확보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대북사업 재개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현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 재개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관여정책)과 대결적 정책(압박정책)의 지지도를 모두 상승시킨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접촉 경험이 북한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보다 면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압박정책을 지지하는 집단이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 재개에 부정적인 것은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한 결과이지만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 관여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압박정책을 지지할수록 관여정책을 반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교류·협력에 긍정적이지만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에 부정적인 이유는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을 소위 ‘퍼주기’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이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군집 분석 결과와 인구통계학적 분석의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관여와 압박의 병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압박 일변도와 관여 일변도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갈등적·대립적 양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의

병행이라는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국민의 눈높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압박정책을 지지하는 강도가 관여정책을 지지하는 강도보다 다소 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계적인 50:50의 압박과 관여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 수단에 대한 동시 선호는 압박과 관여의 이유 역시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⁴⁵⁾ 다시 말해서, 관여정책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면 압박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에서 상대적 불안감이 발생 가능하며, 역으로 압박정책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면 관여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에서 상대적 불안감이 발생 가능하다. 넷째, 외부에서 압박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나 관여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 경우 정책 선호가 개인 내에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조하는 경우 압박정책 선호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주민의 비참한 실상을 강조하는 경우 관여정책 선호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책 선호의 변화는 국민의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압박의 이유와 관여의 이유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두 이유를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대북정책의 관여적 측면과 압박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동시에 설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관여 없는 압박정책의 한계, 압박 없는 관여정책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통일·대북정책의 양가적 특성을 고려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은 소위 진보적 개인(집단)과 보수적 개인(집단) 간 갈등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갈등 관리 방안 역시 집

⁴⁵⁾ Eldar Shafir, Itamar Simonson, and Amos Tversky, "Reason-based choice," *Cognition*, vol. 49, no. 1 (1993), pp. 11~36.

단 간 갈등 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개인 내에서 보수적 특성과 진보적 특성, 즉 압박과 관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개인 내 갈등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일·대북정책의 새로운 도전요소를 던지고 있다.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 또는 통일·대북정책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정책 홍보나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수준이 아닌 대북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은 통일·대북정책 선호의 근원이 북한에 대한 인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인식은 북한이 적대적 대상인 동시에 협력과 지원의 대상이라는 대북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어떠한 대북인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정복대상, 경쟁의 대상, 그리고 흡수의 대상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서 대북인식의 변화 역시 감지되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는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완전한 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본 연구 조사에서 관찰되고 있다. 즉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다. 올바른 대북관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북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지향성을 담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회통합 역량 결정요인

가. 연구 배경

남북한은 70년에 가까운 분단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두 체제 간의 차이 못지않게 각 체제 내부에도 균열과 갈등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복합적 균열과 갈등구조를 고려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은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 혹은 그 내부에 존재하

는 갈등의 해결을 제도화하고, 오랜 분단으로 초래된 남북 간의 이질화와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더욱이,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그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집단의 대응인 ‘태극기 집회’ 모습 등은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지지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는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다가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총 유효 투표수의 41.1%를 획득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홍준표 대통령후보를 내세웠으나 24% 득표율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예정보다 일찍 개최된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와 ‘공정’의 방향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행동 가능성 언급 등으로 초래된 한반도 긴장 상황은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안보문제를 강조하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이끌었다. 이번 19대 대선을 통해 국민들은 각 후보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통합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우선 국민들이 한국의 사회통합 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여러 측면 중 사회 응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

의 신뢰도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국민들이 사회통합 역량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본 장에서 살펴보는 주요 요인에는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에 대한 평가와 중요한 대통령 리더십, 현재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평가, 정치제도 개혁 방향,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사회통합 역량

사회통합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선, 좁은 의미에서 사회통합이란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갈등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이것이 항상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⁴⁶⁾ 갈등은 특정 사회의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집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갈등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 갈등을 관리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사회의 자체적 능력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영훈은 ‘갈등관리 및 갈등해소 역량’을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주요 범주의 하나라고 주장한다.⁴⁷⁾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사회 다수의 구성원이 스스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회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열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을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⁸⁾ 그에 따르

46)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제19권 1호 (2016), p. 221.

47) 송영훈, “남북통합의 세 가지 범주: 가치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수용,”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144~180.

48) 이재열, “사회통합과 사회의 질,” 『보건복지포럼』, 제221호 (2015), p. 2.

면, “사회통합이 지향하는 가치는 ‘기계적 균형’이나 ‘결과의 평등’ 혹은 ‘평준화’가 아니라, 다양한 개인이나 지역들이 고유한 개성과 능력, 그리고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울려 ‘역동적인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성숙함”⁴⁹⁾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감정이나 가치관 등이 사회 체계의 효율성 논리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내 갈등이나 개인들이 정치참여 혹은 사회적 승인을 통해 사회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개인이나 한 개인의 발달과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평등이나 포용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호받기 어렵다. 이처럼 사회의 가치나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의 선택과 행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발현되지만, 반대로 이들 사회적 규범이 개인들의 행위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 혹은 개인과 집단 간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통합은 다면적인 개념이다. 송영훈은 ‘남북한 사회통합’을 ‘공유된 미래가치 지향성’, ‘갈등관리 및 갈등해소 역량’, ‘사회적 포용성과 수용성’의 세 가지 범주로 개념화 한다.⁵⁰⁾ 물론, 이들 세 가지 범주가 상호 완전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서로 일정 부분 중첩되기도 한다. ‘공유된 미래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응집성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공통의 가치규범과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는가가 그 사회의 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재열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네 가지⁵¹⁾ 중 하나인 ‘사회적 응집성’과 유

49) 위의 글, p. 3.

50) 송영훈, “남북통합의 세 가지 범주: 가치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수용,” p. 154.

51) 이재열은 “사회통합과 사회의 질”에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조건으로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제시한다.

사한 개념이다.

사회적 포용성과 수용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유한 자신의 가치와 신념과는 관계없이 그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임금격차나 공직 진출률의 차이가 확연한지 또는 비자발적으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비율, 공적연금 가입률 등이 사회적 포용성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가) 국가기관 신뢰도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여러 측면 중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 중 본 연구는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살펴본다. 1987년 민주주의 이행과 더불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며 다수의 국민이 현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현 민주주의 체제를 소위 '87년 체제'라 명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이러한 개헌 지지세력도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개별 제도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국가기관(대통령, 행정부, 국회, 사법부, 정당,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살펴본다.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높은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⁵²⁾ 이들 주요 국가기관들에 대한 국민

⁵²⁾ Peter Evans,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vol. 24, no. 6 (1996), pp. 1119~1132.

의 높은 신뢰는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에 시민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로 빚어진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거나 해소하는 데 신뢰도 높은 국가기관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정부 관료의 경쟁력 강화나 낮은 부패율, 효과적인 사법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다.⁵³⁾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도는 가치관 갈등뿐 아니라 이익갈등을 관리하거나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이익갈등으로는 계층갈등이나 노사갈등, 지역갈등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 기관의 공정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덜한 국가기관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노사갈등이 첨예한 사회에서 이 갈등을 중재하는 국가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경우, 이 갈등의 주체인 노조나 사업주 모두 이 국가기관의 중재를 이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국가기관들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이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져 그 국가에 대한 투자가치 하락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⁵⁴⁾ 이러한 국가의 투자가치 하락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계층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IV-8〉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섯 가지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해 2017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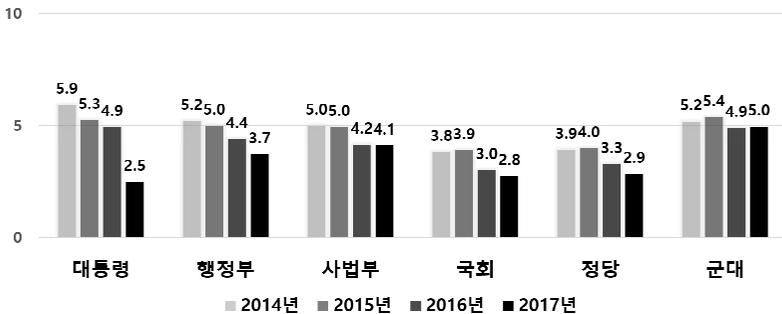
⁵³⁾ Rafael La Porta *et al.*,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pp. 333~338.

⁵⁴⁾ Paul J. Zak and Stephen Knack,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2001), pp. 295~321.

는 이들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4.9점에서 2.5점으로 2.4점이나 하락했다. 2017년 조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리 헌법과 일치하는 결정이라고 판결한 이후였다. 이미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도, 군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아주 조금(0.1점) 상승했으나,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0.7점 하락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0.1점, 정당에 대한 신뢰도도 0.4점,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0.2점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국가기관들에 대한 불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그림 IV-8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단위: 점)



□ 설문 문항: 귀하는 한국 사회의 다음 각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각 기관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다'(0점) - '매우 신뢰할 수 있다'(10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여주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높은 불신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행정부와 국회, 각 정당, 사법부의 과거 행태와 이 사건에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결과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지난 12월 21일 출범해 올해 2월 28일까지 90일 간 활동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와 그 특검팀은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개입’,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수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정부의 장·차관과 고위 관료들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심각해지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각 정당과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도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1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가 ‘촛불집회’ 형태로 매주 열리기 시작했다. 그 정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월 3일 제6차 촛불집회였다. 주최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추산에 따르면 이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약 232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대 시위 참여 기록이라고 발표되었다. 당시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국민이 81%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다음날 9일 표결했다. 그 결과 투표자 299명 중 찬성 234명(78%),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으로, 탄핵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재 자

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얼마나 동참할지가 탄핵안 가결에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128명 국회의원 중 적어도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탄핵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가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이 탄핵 가결 요구에 부응하지는 못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4.1점으로 군대를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한 신뢰도처럼 2017년 조사에서 다소 하락했다. 사법부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최순실이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다수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적은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등장한 ‘법원 길들이기’나 ‘법원 지도층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표현들은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초래했다. 더욱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원행정처 차장의 빈번한 연락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나) 사회갈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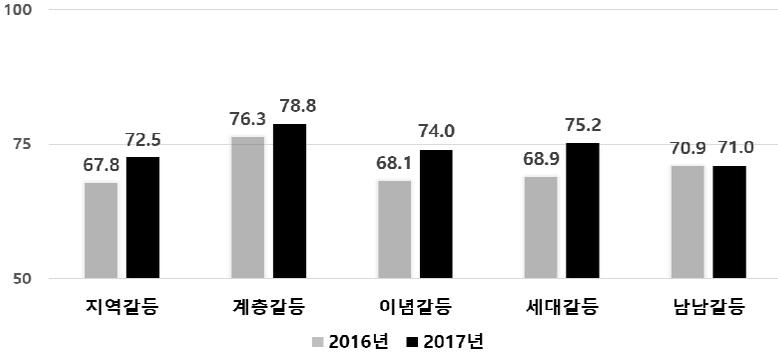
한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회 내 사회적 갈등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이 갈등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갈등이 없는 사회가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갈등이 항상 그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

다. 특정 사회에서 갈등이 주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갈등을 관리해 그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능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사회갈등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체제 내로 흡수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합 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측면의 갈등(계층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남남갈등)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적 평가를 이용한다. 이들 다양한 갈등의 수준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의 사회통합 역량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V-9〉는 한국 사회 내 주요 사회갈등 다섯 개 영역에 대해 응답자가 ‘매우 심각하다’거나 ‘약간 심각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도 조사에 비해 2017년 조사 결과는 다섯 가지 사회갈등 영역 모두에서 심각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확연히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대갈등의 심각성이 2016년 68.9%에서 2017년 75.2%로 6.3%p 증가해 그 심각성 정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이념갈등으로 2017년에 5.9%p 상승했다. 세 번째로 증가폭이 컸던 것은 지역갈등으로 4.7%p 상승했다. 네 번째로 증가폭이 컸던 것은 계층갈등으로 2016년 76.3%에서 2017년 78.8%로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북·통일관련 남남갈등은 단지 0.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 정도의 심화는 지난 해 10월부터 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해 사회를 지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림 IV-9 주요 사회갈등의 심각성

(단위: %)



□ 설문 문항: 귀하는 한국 사회의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갈등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 - ‘매우 심각하다’(4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역사·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강한 연대의식을 보유하며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라 정의된다.⁵⁵⁾ 우리 사회는 1945년 해방을 시작으로 1950년 6.25 전쟁, 1960~1980 년대의 경제성장, 1997년 외환위기, 21세기 들어 IT붐 등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변해왔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는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현재의 20대와 과거의 20대가 직접 경험했던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인식과 가치관에서 서로 차이가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가 종종 언급 하는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말을

⁵⁵⁾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p. 216.

듣는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기성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저런 꼴대’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정치적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세대갈등은 확연히 나타난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탄핵을 반대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대부분 나이든 세대였다.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은 1945년 해방 정국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좌익’과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우익’ 간의 갈등 양상이 심각했었다.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한 사회에서 좌익이 표방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배격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말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경험하고 세계는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념적 자유가 제한적이거나 확대되었다. 이처럼 제한적으로 확대된 이념적 자유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념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전의 이념논쟁 주체가 정치 엘리트나 언론이 중심이었다면, 최근 탄핵 정국에서는 이념논쟁의 주체가 일반인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이번 조사에서도 이념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74%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갈등은 민주화 이후에 투표행태와 정당체계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갈등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 유력 정치 지도자(김대중과 김영삼, 김종필)가 자신의 출신 지역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표면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고 영남 출신의 노무현이 호남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영남 지역 출신인 안철수나 문재인도 호남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지역 중심의 갈등이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5%가 한국 사회의 지역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계층갈등이 나머지 유형의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8%가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조사결과 자신의 주관적 소득 수준이 낮다고 대답한 응답자일수록 계층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가정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대답한 응답자 중 81.4%가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평균과 비슷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78.1%가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으며, 가정의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65.3%가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이들 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내에 계층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수적인 정부이든 진보적인 정부이든 모두가 도입했던 경제성장 우선 정책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이러한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표 IV-4 다섯 가지 사회갈등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구분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남남갈등
지역갈등	1.00				
계층갈등	0.214**	1.00			
이념갈등	0.260**	0.387**	1.00		
세대갈등	0.291**	0.321**	0.293**	1.00	
남남갈등	0.202**	0.296**	0.337**	0.230**	1.00

주: ** p < 0.01

〈표 IV-4〉는 한국 사회의 다섯 가지 주요 사회갈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갈등의 심각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다섯 가지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다섯 가지 주요 사회갈등 중 어느 한 유형에 대하여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다른 유형의 사회갈등 수준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상관관계 계수의 절대값이 모두 4.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했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계층갈등의 심각성과 이념갈등의 심각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0.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갈등의 심각성과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가 0.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사회통합 역량 결정 요인

(가) 법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국민은 우리 사회 내 법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정부는 국민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권력을 남용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는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었다. 본 연구는 법치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법치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국민들이 한국 사회의 법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정부패 연루 정도를 이용했다. 국회의원과 행정공무원, 검찰/경찰, 언론인, 사업가 등에 대해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어느 정도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물

어보았다. 이들 다섯 가지 직업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사업가, 검찰/경찰, 행정공무원, 언론인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1.3%가 국회의원 중 ‘대부분’ 혹은 ‘모두가 부패하다’라고 대답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응답자 중 55.0%가 사업가 중 ‘대부분’ 혹은 ‘모두가 부패하다’라고 대답했다. 이밖에 검찰/경찰 중 ‘대부분’ 혹은 ‘모두가 부패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7.1%, 행정공무원에 대해서는 34.9%, 언론인에 대해서는 32.4%의 응답자가 ‘대부분’ 혹은 ‘모두 부패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법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71.2%가 ‘주장 2: 대통령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일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에 ‘다소’ 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28.8%의 응답자는 ‘주장 1: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도록 선출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정치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대통령은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대통령 리더십

한국의 민주주의 심화, 특히 사회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정당은 소위 ‘대통령 선거용 정당’으로 변모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국회의 주된 영역 중 하나인 입법의제를 포괄적으로 지배해왔다.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데에는 대통령이 여

당 지도부를 통해 자신의 공약사항을 입법 추진하도록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은 검토나 대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입법화 과정을 연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에 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

본 연구는 대통령이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는 각 덕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부터 ‘매우 중요하다’(10점) 사이에서 점수를 정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갈등조정능력’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8.2점이었다.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8.5점이었으며,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외교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8.4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높은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8.6점으로 네 가지 덕목 중 가장 높은 점수였다. 이번 조사 기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 대다수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가져야 할 덕목으로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사회경제구조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성장을 경험해왔다. 더욱이 인구 구성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구직난 등은 한국 사회 내부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일반 국민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경유착은 정부와 재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변화된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과연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출 주도적 경제성장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성장 정책을 여전히 지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의 경제정책을 선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사회경제구조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35.9%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1%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의 1/4 정도는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나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나(나의 가족)의 노력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38.4%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단지 14.0%에 지나지 않았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공평한 성공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덜 공정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유한 국민들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47.6%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라) 정치제도 개혁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이 한국 사회가 통합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집단과 정당,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본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헌 논의에 포함되는 다양한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새로운 정치 제도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살펴본다.

정치제도와 관련된 통합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합의제이다. 합의제는 가능한 다양한 세력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representation)을 강조한다. 합의제는 정치제도의 조합이 포용적(inclusive)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다수제이다. 다수제는 권력이 다수를 구성하는 집단에 집중되도록 정치제도를 구성한다. 다수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권력을 보유한 집단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정당체제와 야당의 역할, 국회의 대 행정부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당체제에 대해서 국민은 둘로 나뉘었다. 응답자의 52.6%는 ‘주장 1: 정당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47.4%의 응답자는 ‘주장 2: 유권자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장 2인 다당제를 선호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정치이념이 보수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장 1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 국민 중 다수는 야당이 정부나 여당을 감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6.6%가 ‘주장 2:

선거가 끝나면, 야당과 정치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33.4%의 응답자가 '주장 1: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항상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에 동의했다.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8.2%가 '주장 1: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선출되었으므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단지 21.8%의 응답자만이 '주장 2: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에 동의했다. 즉, 소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대북정책

본 연구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내용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가 장기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사회통합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다양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왔지만, 이들 정책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보다 부분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심지어는 폐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은 사회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열을 초래해 왔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집단과 정책에 비판적인 집단으로 나뉘어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에, 19대 대선 과정을 통해 국민

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내용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사회통합 방향을 예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네 가지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평균 6.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 경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평균 5.4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평균 4.7점으로 중간 점수인 5.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 폐기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심층분석 결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다. 사회통합 역량을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얼마나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가와 그들이 느끼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갈등 수준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은 대통령과 군대, 행정부, 사법부, 정당, 국회 등 여섯 가지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를 합산한 평균값을 이용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크론바크 알파(Cronbach's α) 값은 0.85였다. 이는 여섯 개의 변수로 구성된 국가기관 신뢰도가 충분한 내적 일관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

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섯 가지 주요 사회갈등 영역의 심각성을 측정한 변수들을 이용했다. 사회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들 다섯 가지 변수를 합산한 평균값을 이용해 척도를 만들었다. 사회갈등 심각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크론바크 알파값은 0.66이었다. <표 IV-5>는 사회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두 가지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표 IV-5 사회통합 역량 척도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명)
국가기관 신뢰도	3.49	1.33	0	7.67	1000
사회갈등 심각성	2.93	0.45	1.6	4	1000

<표 IV-5>가 보여주듯이, 국가기관 신뢰도의 평균값은 10점 만점에 3.49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갈등 심각성도 평균값이 2.93점으로 3점인 ‘다소 심각함’에 매우 가까운 점수이다. 이 결과도 역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두 가지 척도 모두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통합 역량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사회통합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① 법치, ② 대북정책 방향, ③ 사회경제구조 평가, ④ 정치제도 개혁, ⑤ 대통령 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표 IV-6>은 국가기관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신뢰도 수준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들이 느끼는 국가기관 신뢰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행정공무원, 검찰/경찰, 언론인, 사업가 등의 부정부패에 연루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합산하여 부정부패 개입 척도를 만들었다. 통계분석 결과 부정부패 개입 변수는 국가기관 신뢰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응답자 중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개입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국가기관 신뢰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합 역량을 구성하는 국가기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을 낮춰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국민들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연루 정도는 행정공무원이나 검찰/경찰 등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이었다.

표 IV-6 국가기관 신뢰도 결정요인 회귀분석

구분	국가기관 신뢰도	
	비표준 계수	표준오차
법치		
부정부패 개입	-0.777*	0.089
대통령의 법 준수	-0.066	0.047
대북정책		
대북제재 이행	0.143*	0.023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협력	0.022	0.025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0.102*	0.027
핵 폐기까지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중지	0.042*	0.024
사회경제구조 평가		
노력에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 가능	0.175*	0.049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당성	0.071	0.055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0.191*	0.053

구분	국가기관 신뢰도	
	비표준 계수	표준오차
정치제도 개혁		
양당제 vs. 다당제	0.027	0.046
비판적 야당 vs. 협조적 야당	-0.137*	0.046
국회 권한 강화 vs. 대통령 권한 강화	0.050	0.049
대통령의 리더십		
갈등조정능력	-0.105*	0.040
국민과 소통능력	0.016	0.046
높은 도덕성	-0.014	0.046
외교능력	0.008	0.048
성별(여성 +)	0.182	0.077
나이	0.001	0.003
학력수준	0.058	0.042
정치이념(진보 +)	-0.098*	0.035
소득 수준	-0.273*	0.073
상수	3.666	0.689
N	996	
R-squared	0.218	

주: * $p < 0.05$

둘째,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국가기관 신뢰도 수준도 다르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그들이 바라는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와 유화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 모두 국가기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북 강경책의 하나인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록 상대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북 유화정책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국민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구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구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중 우리 사회가 최소한 경직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스스로 바라는 결실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우리의 사회경제구조가 공정하고 모두가 발전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치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도 그들의 국가기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체제와 야당의 역할,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중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회 내 야당의 대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역할에 관한 국민의 생각이었다. ‘선거에 패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항상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나 여당이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찰되는 여당과 야당 간의 첨예한 갈등을 강조하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협조적인 야당보다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 역량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당구조가 다당제이든 양당제이든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나 대통령의 입법기능 강화도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도에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국민들은 현재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는 헌법 개정 내용이나 그 방향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다섯째,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도 그들이 느끼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네 가지 리더십 유형 중 갈등조정능력 변수만이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갈등조정능력을 좀 더 강조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관리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수준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밖에 대통령의 리더십으로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나 높은 도덕성, 외교능력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중요도는 그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의 회귀분석 모델은 통제변수로 성별과 나이, 학력 수준, 정

차이념, 소득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이들 통제변수 중 정치이념과 소득 수준만이 종속변수인 국가기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국가기관 신뢰도에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내 사회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주요 사회갈등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했듯이, 이번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갈등인 지역갈등과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등에 대하여 응답자의 70% 이상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표 IV-7>은 이들 다섯 가지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합산한 평균값인 사회갈등 심각성 척도의 변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IV-6>의 회귀분석과 동일한 모델이며,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사회갈등 심각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통계분석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슨 이유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우선, 법치의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들이 느끼는 사회갈등 심각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 중 다수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사회갈등의 수준도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준법 태도도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도록 선출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한국 사회의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반대로, ‘대통령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일

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사회
 갈등은 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법치가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내 주요 행위자와 사
 업가, 언론 등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도 그 심각성이 완화될 수 있다.

표 IV-7 사회갈등 수준 결정요인 회귀분석

구분	사회갈등 심각성	
	비표준 계수	표준오차
법치		
부정부패 개입	0.236*	0.031
대통령의 법 준수	-0.036*	0.017
대북정책		
대북제재 이행	0.003	0.008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협력	0.021*	0.009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0.003	0.010
핵 폐기까지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중지	0.021*	0.008
사회경제구조 평가		
노력에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 가능	-0.025	0.017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당함	0.084*	0.019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0.023	0.019
정치제도 개혁		
양당제 vs. 다당제	0.010	0.016
비판적 야당 vs. 협조적 야당	-0.015	0.016
국회 권한 강화 vs. 대통령 권한 강화	0.032	0.017
대통령의 리더십		
갈등조정능력	0.015	0.014
국민과 소통능력	-0.053*	0.016
높은 도덕성	0.030	0.016
외교능력	0.073*	0.017
성별(여성 +)	-0.013	0.027
나이	0.002	0.001
학력수준	0.002	0.015

구분	사회갈등 심각성	
	비표준 계수	표준오차
정치이념(진보 +)	0.013	0.012
소득 수준	0.023	0.026
상수	1.203*	0.243
N	996	
R-squared	0.149	

주: * $p < 0.05$

둘째,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의 차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 심각성을 느끼는 수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결과는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유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모두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변수 중 종속변수인 사회갈등 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협력이며, 다른 하나는 핵 폐기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 증지였다. 응답자 중 ‘대북정책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남북 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할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심각성 수준도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증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구조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 지도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나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나(나의 가족)의 노력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관관

계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개인들의 노력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는 메커니즘이 갖추어져야 사회갈등의 심각성 수준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사회통합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정치제도 개혁의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체제나 야당의 역할, 국회와 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그들이 느끼는 사회갈등의 심각성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정치제도 개혁의 중요성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정치제도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제도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도 그들이 느끼는 사회갈등의 심각성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리더십 네 가지 유형 중 두 가지 유형이 종속변수인 사회갈등 심각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다만, 그 방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 변수의 회귀분석 계수는 음의 부호를 가졌으며, ‘외교능력’ 변수의 회귀분석 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소통하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능력 부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통령 리더십 덕목으로 외교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응답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기대하는 바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대외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그를 수행하는 이들은 대통령의 외교역량을 강조해 언론에 자주 노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 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정부의 대 북한관계 설정이나 이와 연결된 대 미국관계, 대 중국관계 또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로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대 일본관계 등이 단순히 대외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대외관계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강조하게 이끌지만, 그러한 능력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IV-7>에 포함된 회귀분석 모델이 포함하는 통제변수 중에는 종속변수인 사회갈등 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다.

다.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이러한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두 가지 척도로 국민이 보여주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이 느끼는 다양한 사회갈등 심각 수준을 이용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이 두 가지 사회통합 역량 지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눈에 띄는 것은 지난 해 연구와 비교해서 그 수준이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물론, 이번 조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연구는 국민들이 사회통합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

셋 가지(법치와 사회경제구조, 정치제도 개혁, 대통령의 리더십,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법치와 사회경제구조, 대통령의 리더십, 대북정책 등에 대한 태도는 두 개의 종속변수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갈등 심각 수준 모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태도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와 그 결과가 의미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 한다. 우선, 국민들 중 우리 사회의 주요 공직자들 다수가 부정 부패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역량을 구성하는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을 낮춰 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준법 태도가 사회갈등의 심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법이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도 그 심각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 역량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났다. 다만, 국민들이 평가하는 사회통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와 유화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 모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갈등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국민들 중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구조에 대하여 공정하고 발전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최소한 경직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스스로 바라는 결실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사회통합 역량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갈등조정능력을 좀 더 강조하는 국민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관리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능력 향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그들이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역량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그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갈등의 심각성 수준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 협조적인 야당보다 그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을 강조할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의 이유로 국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첨예한 갈등을 강조하는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국민들은 정치개혁 내용과 사회갈등 심화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정치제도 개혁의 중요성과는 달리 일반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정치제도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

사회통합은 권력이나 이해관계를 계층이나 지역, 세대별, 이념집단 간에 단순히 분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을 제도적으로 끌고루 섞는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사회는 단순히 이해관계의 총합이라기보다 가치공동체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책임과 도덕적 유대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의 구성원이 특정 가치에 동의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은 강한 결집력과 귀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사회통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3.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 탐색

가. 연구 배경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담론은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런 담론에 내재된 전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적 신념이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과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비율⁵⁶⁾은 2014년 69.3%:30.7%, 2015년 68.5%:31.5%, 2016년 62.1%:37.9%, 2017년 57.8%:42.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또한 김상돈과 서운석⁵⁷⁾은 한국 사회에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약 70%, 남북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약 30%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대 주류인 것 같으나 속내는 보기와는 달리 취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말을 무색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박균열⁵⁸⁾ 등은 2000년대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56) 원 설문 문항 응답지의 ‘매우 필요’와 ‘필요’를 합쳐 ‘필요하다’로 계산하고, ‘전혀 필요 없음’과 ‘필요없음’을 합쳐 ‘필요없다’로 계산하였다.

57) 김상돈·서운석, “북한 및 동북아국가 인식과 남북통일 인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6권 4호 (2016), pp. 324~353.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 주장하며, 그 이유를 과거에는 통일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과 정체성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점차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중요성과 북한의 정치적 변화, 군사정책에 따른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될 때 통일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통일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되었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가정 하에서 통일에 필요한 비용이나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에서 대해서 논의해 왔다. 조동호⁵⁹⁾는 통일편익은 통일비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그 이유는 통일비용의 경우 그 규모가 얼마이든 유한한 반면, 통일편익은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편익이 무한한데, 2017년 국민의식조사에서 42.3%의 국민은 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관계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포함된 조사 영역별로 변인을 선정하여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관계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통합에 대한 의지 영역에서,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남북한 통일을 이룸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통일문제에서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합의사항, 통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였다. ②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삶의 질,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정치이념성향 변인을 선택하였고, ③ 통합역량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의 갈등, 한국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의 공존성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을 선정하였다.

58) 박균열·조흥제·박동준, “통일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1호 (2016), pp. 33~58.

59)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 편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83.

④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 영역에서 통일 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장애요인에 대한 지각을 선정하였고, ⑤ 북한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지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는 정도를 선정하였다. ⑥ 핵위협 지각 영역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가정의 소득 수준 변인을 포함시켰다.

먼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위에 언급한 변인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후,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의 조합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 심층분석 결과

(1) 교차분석 결과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남북통일의 필요성 정도는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2점), ‘다소 필요하다’(3점), ‘매우 필요하다’(4점)의 4점 척도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계층, 일반적 가정과 비교한 가정의 소득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른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의 비율을 보면, ‘전혀 필

요하지 않다'(1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2점), '다소 필요하다'(3점), '매우 필요하다'(4점)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 61.7%(다소 필요하다: 46.0% + 매우 필요하다: 15.7%)이고 여성의 경우 54%(다소 필요하다: 42.1% + 매우 필요하다: 11.9%)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 = 7.62, df = 3, p = .055$).

표 IV-8 성별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성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남성	23(4.6)	167(33.7)	228(46.0)	78(15.7)
여성	34(6.7)	198(39.3)	212(42.1)	60(11.9)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연령대에 따라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5.37, df = 12, p = .000$).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 비율을 살펴보면, 만 19~29세의 경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8.8%(다소 필요하다: 33.1% + 매우 필요하다: 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 70.9%(다소 필요하다: 51.0% + 매우 필요하다: 19.9%)이고, 다음으로 높은 연령대는 만 50~59세로 65.3%(다소 필요하다: 48.2% + 매우 필요하다: 17.1%)였다. 만 30대와 만 40대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표 IV-9 연령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연령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만 19~29세	21(12.0)	86(49.1)	58(33.1)	10(5.7)
만 30~39세	11(6.2)	75(42.1)	75(42.1)	17(9.6)
만 40~49세	6(2.9)	84(40.6)	88(42.5)	29(14.0)
만 50~59세	8(4.0)	61(30.7)	96(48.2)	34(17.1)
만 60세 이상	11(4.6)	59(24.5)	123(51.0)	48(19.9)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19.99$, $df = 6$, $p = .003$). 구체적으로, 중졸 이하의 경우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 47.2% + 매우 필요하다: 23.2%)고 반응한 비율이 70.4%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4.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25.4%)고 반응한 비율 29.6%보다 높았다. 반면, 고졸의 경우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 42.3% + 매우 필요하다: 11.6%)고 생각하는 비율이 53.9%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5.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40.9%)고 생각하는 비율 46.1%와 비슷하였고, 대졸 이상의 경우 필요하다(다소 필요하다: 44.6% + 매우 필요하다: 12.8%)고 생각하는 비율이 57.4%이고,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6.6% +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9%)고 생각하는 비율이 42.5%였다.

표 IV-10 학력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학력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중졸 이하	6(4.2)	36(25.4)	67(47.2)	33(23.2)
고졸	22(5.2)	172(40.9)	178(42.3)	49(11.6)
대졸 이상	29(6.6)	157(35.9)	195(44.6)	56(12.8)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라 반응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 = 6.62, df = 6, p = .357$). 주관적 사회계층에서 중, 하층 모두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높았다.

표 IV-11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사회계층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하층	19(6.5)	98(33.3)	134(45.6)	43(14.6)
중층	37(5.3)	266(37.8)	305(43.4)	95(13.5)
상층	1(33.3)	1(33.3)	1(33.3)	0(0.0)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일반적 가정과 비교했을 때,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 = 11.88, df = 12, p = .456$). 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평균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낮거나 높다고 반응한 사람들 모두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12 가정 소득 수준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소득 수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보다 훨씬 낮다	3(11.1)	7(25.9)	13(48.1)	4(14.8)
평균보다 약간 낮다	25(6.8)	122(33.3)	166(45.4)	53(14.5)
평균과 비슷하다	24(4.3)	219(39.2)	239(42.8)	76(13.6)
평균보다 약간 높다	5(10.4)	16(33.3)	2(45.8)	76(13.6)
평균보다 훨씬 높다	0(0.0)	1(100.0)	0(0.0)	0(0.0)

(나)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51.13, df = 21, p = .000$). 구체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같은 민족이니까'인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6.4%,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60.0%,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55.8%,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 남북통일 이유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이유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같은 민족이니까	12(4.0)	88(29.3)	136(45.3)	64(21.3)
남북 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26(6.3)	182(43.8)	173(41.6)	35(8.4)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4.3)	41(29.3)	70(50.0)	23(16.4)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9(8.1)	40(36.0)	51(45.9)	11(9.9)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13.8)	12(41.4)	9(31.0)	4(13.8)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0(0.0)	1(50.0)	0(0.0)	1(50.0)
정치권에서 북풍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싫어서	0(0.0)	0(0.0)	1(100.0)	0(0.0)
우파, 좌파로 싸우는 것이 싫어서	0(0.0)	1(100.0)	0(0.0)	0(0.0)

(다)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따라 반응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 = 13.97, df = 18, p = .731$).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 '언론의 민족 화합 지향적 보도' 등 모든 경우에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반응보다 높았다.

표 IV-14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시되는 것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	22(4.8)	174(38.3)	191(42.1)	67(14.8)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	15(6.9)	75(34.4)	101(46.3)	27(12.4)
언론의 민족 화합 지향적 보도	7(7.0)	34(34.0)	47(47.0)	12(12.0)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	8(5.3)	51(34.0)	67(44.7)	24(16.0)
통일교육 확대	5(6.6)	31(40.8)	33(43.4)	7(9.2)
남북교류	0(0.0)	0(0.0)	0(0.0)	1(100.0)
제3국의 영향	0(0.0)	0(0.0)	1(100.0)	0(0.0)

(라)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이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의 순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 = 16.13, df = 15, p = .373$). ‘북한의 경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등 모두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반응보다 높아 통일의 우선 필요사항에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을 차별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표 IV-15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따른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교차분석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간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9(4.0)	73(32.2)	102(44.9)	43(18.9)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9(4.3)	85(40.5)	91(43.3)	25(11.9)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19(6.1)	117(37.3)	141(44.9)	37(11.8)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3(9.6)	51(37.8)	55(40.7)	16(11.9)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9.1)	19(30.3)	16(48.5)	4(12.1)
남한의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4.9)	29(35.8)	35(43.2)	13(16.0)

(마) 요약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과의 교차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연령, 학력,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따라 반응 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 비율에서, 만 19~29세의 경우 '필요하다(다소+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8.9%로 다른 연령대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 70.9%이고, 다음으로 높은 연령대는 만 50~59세로 65.3%였다. 만 30대와 만 4대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의 경우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다소+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0.4%로 ‘필요하지 않다(전혀+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반응한 비율 29.6%보다 높았다. 반면, 고졸의 경우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9%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46.1%와 비슷하였고, 대졸 이상의 경우 ‘필요하다’가 57.4%이고, ‘필요하지 않다’가 42.5%였다.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중졸에서 가장 높고 다음 대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같은 민족이니까’인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6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6.4%,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50.0%,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55.8%,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8% 순으로 나타났다.

(2)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차이 검증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서 통일이익에 대한 지각, 다양성의 공존에 대한 태도(인종, 종교, 문화), 북한에 대한 태도(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북핵 위협에 대한 걱정,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들(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삶의 질,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의 갈등(전반적 심각도,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한국 사회의 민주성,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 정치적 이념성향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통일 후 사회적 갈등 변화에 대한 지각(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남북 지역 간 갈등),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 장애 요인들(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분석(ANOVA)으로 알아보았다.

(가)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통일이익에 대한 지각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통일이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를 <표 IV-16>에 제시하였다. ANOVA 결과,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서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F=76.23$, $p<.0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다소 필요하다’ 간에 차이가 없었고, ‘매우 필요하다’와 ‘다소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1.38$, $p<.0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에게 이익 되는 정도는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ANOVA 결과,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71$, $p<.0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고, ‘매우 필요하다’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ANOVA를 통해 통일이익 영역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평균=3.27),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도(평균=2.74),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평균=2.15)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94.44$, $p<.001$). 이는 남북한 통일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 필요성과 통일이익 영역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15.84$, $p<.001$). 상호작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집단에서는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 이익, 자신의 개인 이익, 북한 주민의 이익 간 차이가 적지만,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인 경우,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가장 높다고 지각하고 국가와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표 IV-16〉).

표 IV-16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일 이익에 대한 ANOVA 결과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	2.21 (.62)	2.53 (.66)	3.02 (.58)	3.18 (.64)	76.23	.000	4=3)2)1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1.70 (.57)	1.97 (.51)	2.31 (.59)	2.62 (.73)	61.38	.000	4)3)2)1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3.09 (.61)	3.22 (.59)	3.31 (.59)	3.46 (.58)	7.71	.000	4)2, 4)1

(): 표준편차

(나)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다양성 공존에 대한 태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따른 다양성 공존에 대한 태도를 인종, 종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를 〈표 IV-17〉에 제시하였다.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길수록 다양한 인종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동의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7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다양성 공존에 대한 태도의 ANOVA 결과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인종 공존	2.93 (.82)	3.00 (.88)	3.05 (.85)	3.23 (.87)	2.79	.04	-
종교 공존	2.91 (.81)	2.93 (.88)	2.93 (.87)	3.09 (.91)	1.35	.26	
문화 공존	3.56 (.68)	3.53 (.81)	3.55 (.73)	3.66 (.72)	1.05	.37	

(): 표준편차

(다)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북한에 대한 태도와 핵위협 걱정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북한에 대한 태도와 핵위협에 대한 걱정 정도의 평균, 표준편차를 <표 IV-18>에 제시하였다. ANOVA 결과,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 북한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 감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 추구, 북한 핵위협에 대한 걱정 모두 남북한의 통일 필요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는 남북한 통일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과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과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이 ‘다소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보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 남북한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보다,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보다,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걱정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남북한 통일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보다,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북한에 대한 태도와 핵위협 걱정의 ANOVA 결과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i>M(SD)</i>				<i>F</i>	<i>p</i>	post hoc Scheffe (<i>p</i>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지원/협력 대상	8.05 (3.24)	8.69 (3.11)	10.05 (3.03)	10.77 (3.51)	24.09	.000	3=4>1=2
경계/적대 대상	13.32 (2.43)	13.08 (2.66)	12.15 (3.10)	11.83 (3.12)	10.88	.000	1>3, 1>4, 2>3, 2>4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 추구	2.68 (.99)	2.76 (1.00)	3.06 (.94)	3.12 (1.04)	9.47	.000	4>1, 4>2, 3>2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걱정 정도	3.28 (1.25)	3.33 (.97)	3.53 (.88)	3.62 (1.02)	4.63	.003	3>2, 4>2

(): 표준편차

(리)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삶의 질,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의 갈등, 한국 사회의 민주성,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ANOVA 결과를 <표 IV-19>에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라서 각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ANOVA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 지역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갈등, 한국 사회의 민주성, 삶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변인에 대해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점수는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계층 경직성 평가에서 남북한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갈등의 경우,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반응한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지역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들의 ANOVA 결과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한 자부심	2.72 (.68)	2.79 (.59)	2.90 (.56)	3.04 (.68)	7.95	.000	4)1, 4)2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4.79 (1.66)	4.70 (1.59)	5.00 (1.47)	4.69 (1.84)	2.93	.033	-
한국 사회의 민주성	6.02 (1.42)	6.19 (1.47)	6.23 (1.51)	6.13 (1.58)	0.43	.734	
삶의 질	18.58 (5.65)	18.45 (4.79)	19.21 (4.70)	19.47 (4.67)	2.40	.066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	7.74 (1.11)	7.39 (1.16)	7.18 (1.19)	7.12 (1.29)	5.70	.001	1)3, 1)4
한국 사회의 전반적 사회갈등의 심각성	3.05 (.55)	3.09 (.55)	3.09 (.54)	3.09 (.51)	.09	.964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i>M(SD)</i>				<i>F</i>	<i>p</i>	post hoc Scheffe (<i>p</i>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정치 이념 집단	지역갈등	2.82 (.74)	2.83 (.62)	2.79 (.62)	3.00 (.68)	3.76	.011	4>3
	계층갈등	3.09 (.81)	2.99 (.63)	2.98 (.71)	3.14 (.69)	2.47	.061	
	이념갈등	2.91 (.69)	2.90 (.73)	2.96 (.70)	3.04 (.69)	1.59	.189	
	세대갈등	2.88 (.71)	2.96 (.69)	2.91 (.69)	2.99 (.67)	.73	.535	
	남남갈등	2.88 (.78)	2.88 (.70)	2.88 (.70)	3.04 (.64)	2.16	.091	

(): 표준편차

(마)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정치이념성향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정치적 이념성향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ANOVA 결과를 <표 IV-20>에 제시하였다. ANOVA 결과, 정치적 이념성향에 대한 응답 간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북한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남북한 통일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0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정치이념성향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의 ANOVA 결과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정치적 이념성향	4.07 (1.29)	4.36 (1.15)	4.09 (1.18)	4.10 (1.38)	3.74	.011	2/3
한국의 경제 상황	2.00 (.60)	2.07 (.56)	2.05 (.58)	2.03 (.59)	.33	.803	

(): 표준편차

(바)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통일 후 사회적 갈등의 변화 지각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통일 후 사회적 갈등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ANOVA 결과를 <표 IV-21>에 제시하였다. ANOVA 결과, 남북한 통일 필요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통일 후 사회적 갈등의 변화에 대한 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1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일 후 갈등에 대한 ANOVA 결과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의 변화	계층갈등	2.67 (.83)	2.59 (.83)	2.69 (.82)	2.59 (.88)	1.21	.304
	이념갈등	2.68 (.89)	2.59 (.82)	2.67 (.89)	2.64 (.94)	.51	.677
	세대갈등	2.70 (.78)	2.71 (.78)	2.76 (.76)	2.73 (.83)	.31	.822
	남북갈등	2.51 (.81)	2.62 (.85)	2.75 (.84)	2.64 (.90)	2.51	.058

(): 표준편차

(사)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 장애요인들

남북한 통일 필요성의 인식 정도에 따른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 장애요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ANOVA 결과를 <표 IV-22>에 제시하였다. ANOVA 결과,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에 따른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요인 중에서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남북한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더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따른 통합 장애요인에 대한 ANOVA 결과

구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M(SD)$				F	p	post hoc Scheffe ($p < .05$)	
	(1)	(2)	(3)	(4)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남북한 주민 통합의 장애 요인	의사소통	2.68 (.66)	2.78 (.78)	2.64 (.75)	2.75 (.81)	2.51	.057	
	이념	3.28 (.65)	3.27 (.66)	3.23 (.66)	3.12 (.77)	1.89	.130	
	소득 수준	3.40 (.68)	3.36 (.63)	3.27 (.69)	3.32 (.60)	1.65	.177	
	문화/생활	3.33 (.66)	3.40 (.63)	3.22 (.69)	3.43 (.64)	6.34	.000	2)3, 4)3

(): 표준편차

다. 정책적 함의

남북한 통일 필요성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통일이익에 대한 지각, 다양성의 공존에 대한 태도(인종, 종교, 문화), 북한에 대한 태도(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북핵 위협에 대한 걱정, 한국 사회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들(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삶의 질,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의 갈등(전반적 심각도,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한국 사회의 민주성,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 정치적 이념성향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통일 후 사회적 갈등 변화에 대한 지각(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남북 지역 간 갈등),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 장애 요인들(의사소통의 어려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소득 수준의 차이,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일이익에 대한 지각, 다양한 인종의 공존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북한에 대한 경계/적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북핵 위협에 대한 걱정,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 지역갈등, 정치적 이념성향,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변인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통일이 국가, 개인,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서 북한 주민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국가, 개인 순으로 이익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북한 통일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국가, 개인, 북한 주민 간 차이가 적지만,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인 경우,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가장 높은 이익을 주고 국가와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길수록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동의하였다.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더 점수가 높아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걱정 정도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은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한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이 더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갈등의 경우,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지역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한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남북한 통일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차이에서 남북한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더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가. 연구 배경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개별 변인 단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변인들은 서로 연관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만 60세 이상이고,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라면 이 결과는 만 60세 이상에서 중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개별 변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 변인과 다른 변인 간의 공통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고유하게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변인들 사이에 숨어 있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요구된다. 방대한 자료에서 이전에 가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찾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 가운데 독립변인(입력변인, 설명변인, 예측변인)으로부터 목표변인(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의 대표적 예측모형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기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SPSS의 Classification Tree 21.0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구간 별 조합으로 연속형 종속변인의 평균차는 F 값으로 다시 분리를 하였다. 채택한 알고리즘은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로 설정하고 독립변인들의 분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5수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집단 내의 구간(또는 범주 수)을 변경한 것을 감안해 p 값에 대해 Bonferroni조정을 거쳤다. 결측치는 특정 마디에서 예측이 일치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체규칙(surrogate rule)을

설정하고 정치규칙으로 최대한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는 3수준으로,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d node)의 경우 좀 더 세밀한 나무분석과 본 연구의 사례수를 고려하여 하위집단 모두 각각 100과 50으로 설정하였다.^{60) 61) 62)}

나. 심층분석 결과

(1) 의사결정나무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위해 목표변인으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투입하고, 독립변인에는 앞선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표 IV-23>에 의사결정 나무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남북한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최종 포함된 변인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에 대한 지원/협력, 연령대,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대한 예측모형의 의사결정나무는 <그림 IV-10>과 같고, 이를 각 노드별로 예측 변인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2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노드 9번은 전체 68명의 6.8%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3.28점이다. 노드 9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3점 이상이면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상이다. 즉,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면서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느끼면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함을 알

60) 문승태,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예측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8권 2호 (2006), pp. 33~58.

61) 이주리,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兒童學會誌』, 제30권 1호 (2009), pp. 11~25.

62) 이해주정의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사애착에 대한 예측변인에서의 남녀 차이,” 『한국교육연구』, 제29권 1호 (2012), pp. 419~440.

수 있다. 노드 7번은 전체 158명의 15.8%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3.12점이다. 노드 7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3점이면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상이다. 즉,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중간 정도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드 3번은 전체 146명의 14.6%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3.12점이다. 노드 3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3점 이상이다. 즉, 다른 변인의 고려 없이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드 8번은 전체 78명의 7.8%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97점이다. 노드 8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3점 이상이면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크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작다 할지라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드 2번은 전체 542명의 54.2%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80점이다. 노드 2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3점이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중간 정도의 이익만 가져다줘도 통일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노드 13번은 전체 240명의 24.0%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80점이다.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3점이면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고, 연령이 만 40~60세 이상이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중간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자신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지라도 만 40세 이상의 연령층은 통일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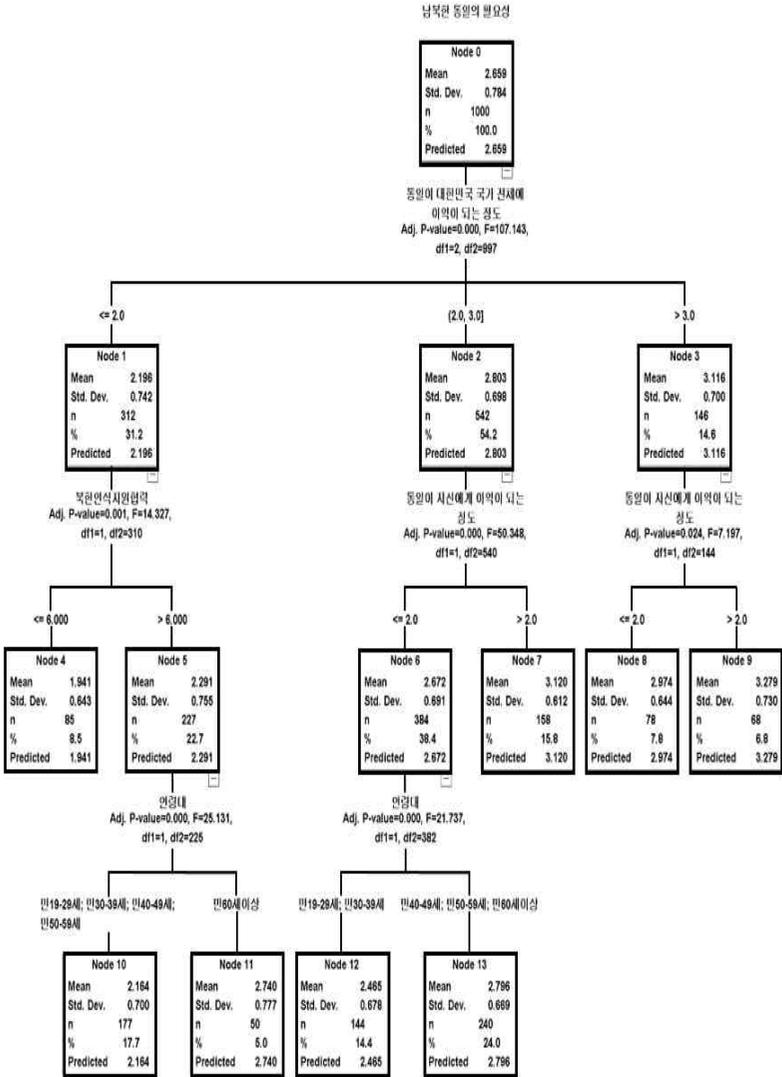
표 IV-23 의사결정나무분석 목표변인과 독립변인

구분	갯수	변수명
목표 변인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독립 변인	35	<p>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p> <p>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p> <p>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p> <p>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p> <p>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1순위</p> <p>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1순위</p> <p>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한 생각</p> <p>삶의 질 총합</p> <p>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평가</p> <p>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p> <p>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적이라 생각하는지 평가</p> <p>사회계층 이동 고정</p> <p>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견해</p> <p>한 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견해</p> <p>한 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견해</p> <p>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변화- 1)계층갈등</p> <p>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변화- 2)이념갈등</p> <p>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변화- 3)세대갈등</p> <p>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변화- 4)남북 지역 간 갈등</p> <p>남북한 주민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장애- 1)의사소통의 어려움</p> <p>남북한 주민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장애- 2)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p> <p>남북한 주민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장애- 3)소득 수준의 차이</p> <p>남북한 주민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장애- 4)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p> <p>북한 인식- 1)북한 인식 지원/협력</p> <p>북한 인식- 2)북한 인식 경계/적대</p> <p>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p> <p>향후 북한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의견</p> <p>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걱정 정도</p> <p>정치적 상황</p> <p>월평균 가구소득</p> <p>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p> <p>일반적 가정과 비교했을 때 가정의 소득 수준</p> <p>성별</p> <p>연령대</p> <p>학력</p>

표 IV-24 의사결정나무분석 노드별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Node	조건		M	SD
9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3점 이상	3.28	0.73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상		
7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3점	3.12	0.61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상		
3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3점 이상	3.12	0.7
8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3점 이상	2.97	0.64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2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3점	2.80	0.70
13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3점	2.80	0.67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연령	만 40세 이상		
11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2.74	0.78
	북한 인식 지원/협력	6점 이상		
	연령	만 60세 이상		
6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3점	2.67	0.69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12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3점	2.47	0.6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연령	만 19~39세		
5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2.29	0.80
	북한 인식 지원/협력	6점 이상		
1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2.20	0.74
10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2.16	0.70
	북한 인식 지원/협력	6점 이상		
	연령	만 19~59세		
4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	2점 이하	1.94	0.64
	북한 인식 지원/협력	6점 이하		

그림 IV-10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의사결정나무



노드 11번은 전체 50명의 5.0%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74점이다. 노드 11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면서, 북한 인식 지원/협력이 6점 이상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다. 즉,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작을지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통일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노드 6번은 전체 384명의 38.4%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67점이다. 노드 6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3점이면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중간 정도의 이익을 지닌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는 이익이 적다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중간 정도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드 12번은 전체 144명의 14.4%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47점이다. 노드 12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3점이면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고 연령이 만 19~39세이다. 노드 13번과 다른 조건은 일치하지만 만 19~39세 이하의 연령 즉,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중간 정도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드 5번은 전체 227명의 27.7%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29점이다.

노드 5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면서, 북한 인식 지원/협력이 6점 이상이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적은 이익을 준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높지 않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드 1번은 전체 312명의 31.2%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20점이다. 노드 1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적은 이익이라고 인식하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노드 10번은 전체

177명의 17.7%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2.16점이다. 노드 10번의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면서, 북한 인식 지원/협력이 6점 이상이고 연령이 만 19~59세이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적은 이익이라고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만 19~59세 인구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드 4번은 전체 85명의 8.5%가 포함되어있으며,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평균은 1.94점으로 조건은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2점 이하이면서, 북한 인식지원협력 6점 이하이다. 통일이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적다고 생각하며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덜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면 가장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2) 요약 및 유형 분류

현재 국민들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먼저,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가장 먼저 고려하며,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또,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함을 알 수 있으며, 낮은 연령에 비해 높은 연령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나무 예측모형으로 남북한의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한 정도를 분류하여 유형화하면 <표 IV-25>과 같다.

표 IV-25 남북한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한 정도 분류 및 유형화

유형	Node	명칭	설명
양적 유형	9	합리적 통일지지형	통일이 국가와 자신에게 주는 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여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사람
	7	개인적 실리주의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중간 정도이지만 자신에게 주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사람
	3	국가실리주의 -필요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사람
	8	국가우선형 (애국주의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통일을 지지하는 유형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사람
	2	국가우선 중간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보통 이상인 사람
	13	합리적 향수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중간 정도이며, 개인에게 주는 이익은 적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비교적 연령대가 높으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보통 이상인 사람
양적 유형	11	향수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낮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중 연령대가 가장 높은 만 60세 이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보통인 사람
	6	애매모호형	통일이 국가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중간 정도이지만,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적다고 인식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보통인 사람
	12	개인우선형	통일이 국가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중간 정도이지만,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적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비교적 젊은 연령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보통인 사람

유형	Node	명칭	설명
통일 필요성에 의견이 유형	5	이기주의형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은 사람
	1	국가실리주의-불필요형	다른 조건의 고려 없이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은 사람
	10	부담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가 높은 사람들 중, 주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만 19~59세까지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은 사람
	4	국수주의형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도 낮은 유형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은 사람

먼저, 총 13개의 노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통일 필요 유형’, 통일의 필요성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통일 중립 유형’,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통일 불필요 유형’이 그것이다. 첫 번째 유형인 ‘통일 필요 유형’에는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노드 9번부터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순서대로 노드 7, 노드 3, 노드 8, 노드 2번까지 5개의 노드가 포함된다. 노드 9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와 자신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한다. 통일이 국가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사결정 방식의 합리성과 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통일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노드 7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한다. 개인적인 이익이 이 유형의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

에 ‘개인적 실리주의형’으로 명명하였다. 노드 3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기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토대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에 ‘국가실리주의-필요형’으로 명명하였다. 노드 8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크지만, 자신에게 오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함에도 통일을 지지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개인에게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지지하므로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우선형’이라 명명하였다. 노드 2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에 가져다주는 이익의 정도를 중간 정도라고 인식하면서 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할 수도 더 낮게 인식할 수도 있는 유형이기에 ‘중도주의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통일 중립 유형’은 전체 집단의 평균 통일 필요성 인식 정도인 2.66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노드 13번부터 순서대로 노드 11, 노드 6, 노드 12번까지가 포함된다. 노드 13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중간 정도이며, 개인에게 주는 이익은 작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군집이다. 통일이 국가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인식하기에 통일의 필요성 역시 중간 정도로 인식함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작다고 인식하면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기에 비교적 높은 연령층에서의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통일이 가져다주는 중간 정도의 국가 전체의 이익과 함께 고려되어 통일의 필요성을 중간 정도로 유지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향수형’이라 명명하였다. 노드 11번에는 통일이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낮은 정도로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분류된다. 국가 전체

의 이익을 고려하면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여야 함이 맞지만,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결과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두드러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인구는 조사대상 중 가장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크고,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수형’이라 명명하였다. 노드 6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중간 정도로,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낮은 정도로 인식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 역시 중간 정도로 인식한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애매보호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노드 12번은 통일이 국가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중간 정도로,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은 낮은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 중 비교적 젊은 연령의 사람들이 분류된다. 젊은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았던 노드 13번과는 달리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중간 정도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통일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로 ‘개인우선형’이라 명명한다.

세 번째 유형인 ‘통일 불필요 유형’은 세 유형 중 통일 필요성 인식 수준의 정도가 가장 낮은 유형으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노드 5, 노드 1, 노드 10, 마지막으로 가장 통일 필요성 인식 수준이 낮은 노드 4번을 포함한다. 노드 5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낮은 정도라고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통일이 국가에 주는 이익은 적고 북한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느껴 통일을 손해로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유형을 ‘이기주의형’이라 명명하였다. 노드 1번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낮게 인식하기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국익의 손해를 막기 위해 통일을 불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

서 ‘국가실리주의-불필요형’이라 명명하였다. 노드 10번은 통일이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적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중 주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만 19~59세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통일이 국가에 이득은 가져오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느껴 통일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노드 4번은 통일이 국가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적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북한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국수주의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렇듯 각 노드를 통일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노드별로 조건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고려해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각 노드의 특징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통일연구원의 2017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포함된 조사 영역별로 변인을 선정하여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관계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1) 통합에 대한 의지 영역에서,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남북한 통일을 이룸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통일문제에서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합의사항, 통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였다. 2)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삶의 질,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정치이념성향 변인을 선택하였고, 3) 통합역량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의 갈등, 한국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의 공존성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을 선정하였다. 4)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 영역에서 통일 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 통

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장애요인에 대한 지각을 선정하였고, 5) 북한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지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는 정도를 선정하였다. 6) 핵위협 지각 영역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를 선정하였고 각 요인에 맞게 교차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들의 연관성을 고려해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에 대한 의지 영역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와 '남북한 통일을 이룸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두 가지 요인이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반응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같은 민족이니까'인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6.4%,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50.0%,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55.8%,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8%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을 이룸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통일 필요성의 인식에 주는 영향을 알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통일이 국가, 개인,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서 북한 주민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국가, 개인 순으로 이익이 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북한 통일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국가, 개인, 북한 주민 간 차이가 적지만,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인 경우,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가장 높은 이익을 주고 국가와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둘째,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정치이념성향’ 변인이 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변인의 변량분석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은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 변인의 변량분석 결과 남북한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단이 남북한 통일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역량 영역에서는 총 4가지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의 갈등 중 지역갈등’, ‘다양성의 공존성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 변인이 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변인의 변량분석 결과는 유의했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 사회의 갈등’ 변인 중 ‘지역갈등’만이 유의했고, 남북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지역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의 공존성에 대한 태도’ 변인의 분석 결과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길수록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동의하였다.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의 분석결과는 남북한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이 더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 영역에서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장애요인에 대한 지각변인’ 중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남북한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집

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집단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집단보다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더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 변인의 두 가지 유형 모두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는 정도’ 변인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보였다.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더 점수가 높아서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경제와 적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여섯째, 핵위협 지각 영역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 변인이 분석 결과 유의미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걱정 정도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투입된 독립변수 35개 중 최종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총 4가지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국민들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먼저,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를 가장 먼저 고려하며, 통일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또,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함을 알 수 있으며, 낮은 연령에 비해 높은 연령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 4가지 독립변인을 기준으로 총 13가지의 노드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통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추세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다양한 변인들의 숨은 관계를 찾아내는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도,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정도, 그리고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조합하여 통일 필요성의 인식 유형을 13개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정책적 목표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위에서 제시한 13개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인 통일인식 교육 또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예: 군사력, 경제력, 지정학적 이점, 무역)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일자리 창출, 징병제 폐지·모병제 전환 가능 등 통일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오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

통일교육 혹은 홍보의 타깃을 어떤 유형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차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들을 근거로 교육 혹은 홍보 대상을 분류하여 해당 유형에 효과적인 교육 혹은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동일한 통일인식은 비효율적이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당위적 신념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 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후 통일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과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직면할 수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로 남북통합 의식을 ‘통합의지’, ‘통합역량’ 그리고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측정하였다. 동시에 남북통합의식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통일·대북정책’, ‘북한의 핵위협,’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통합의식의 지속성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통합의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의 남북통합의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으며 평화적 공존, 즉 평화적 분단고착을 선호하는 비율이 39.8%로 작년 대비 6.3%p 상승하였다. 또한 민족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담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단일민족국가론에 찬성하는 20대의 비율은 20.5%에 불과하였다.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라는 국민의 비율(47.6%)은 통일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22.2%)의 두 배가 넘는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한 국민의 비율은 70%,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이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을 위해서 다소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것에 대해 11.1%만 동의하였으며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8.5%였다. 통일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비율은 24.3%로 2014년 이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역량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그리고 민족정체성에서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는 2016년 대비

0.38점 감소한 3.79점으로 하락하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는 하락하였다. 특히 기관별 신뢰도 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행정부, 국회, 정당에 대한 신뢰도 역시 작년 대비 하락하였다. 대조적으로 대인관계 신뢰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의 비율이 작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권위적인 성향 역시 작년 대비 상승한 것이다. 조사 시점인 3월은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참여 민주주의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서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 경제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북한을 지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10점 기준 4.65점으로 2016년 대비 0.71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정도 역시 2016년 대비 0.36점 감소한 4.89점이었다. 반면 북한에 대한 경제성은 6.55점,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역시 5.99점으로 2016년 대비 상승하였다.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20~30대가 보이는 북한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다. 북한을 지원대상 또는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20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제대상,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서 20대, 30대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16년 대비 부정적으로 변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2016년 대비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2016년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향상되었고 부정적 태도는 감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는 주요 인구 통계학적 변수의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

한에 대한 태도와 더욱 대비된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긍정적 태도는 접촉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긍정적 태도보다 높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은 부정적 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의 두 번째 문제인식은 통일 및 남북통합과 관련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갈등, 남남갈등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먼저 남남갈등에 대한 역사적, 정치학적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통일·대북정책 선호의 직접적 원인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꼽고 있었다. 북한을 지원/협력의 대상으로 보는지 또는 경제/적대의 대상으로 보는지에 따라 통일·대북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선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부정의 단선적이라기보다는 양가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북인식이 단선적인지 다차원적인지의 문제는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이해에 핵심적 부분이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이 관여정책 지지집단과 압박정책 지지집단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인지에 따라 갈등 해결의 방향과 갈등 해결 주체와 시스템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16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16개 정책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우리 국민들은 통일·대북정책을 압박정책의 관점, 관여정책의 관점, 인도적 지원의 관점, 대북사업의 관점 등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4개 군집은 압박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도

가 모두 높은 집단인 압박-관여 병행집단(39.3%), 압박정책에는 긍정적이지만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 재개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압박중심 집단(17.8%), 관여정책, 인도적 지원, 대북사업 재개에는 긍정적이지만 압박정책에는 부정적인 집단인 관여중심 집단(11.7%), 통일·대북정책 4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응답을 보인 무관심 집단(31.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은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2년 차 연구에서 밝힌 대북인식의 4군집과 정확하게 대응되었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대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실용주의는 압박-관여 동시집단에 대응,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부정적이며 대결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주의는 압박중심 집단에 대응,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면서 대결에 대해 부정적인 자유주의는 관여중심 집단에 대응, 그리고 북한을 협력의 대상도 대결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는 고립주의는 무관심 집단에 대응되었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의 세 번째 문제 인식은 남북통합과 관련한 갈등 완화 방향의 모색이었다. 특히 본 연구는 남북통합 역량의 다양한 측면 중 사회 응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들이 사회통합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섯 가지(법치와 사회경제구조, 정치제도 개혁, 대통령의 리더십,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법치와 사회경제구조, 대통령의 리더십, 대북정책 등에 대한 태도는 두 개의 종속변수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사회갈등 심각 수준 모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태도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법이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도 그 심각성이 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의 차이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 역량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와 유화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 모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가 최소한 경직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스스로 바라는 결실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관리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갈등 완화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정치제도 개혁의 중요성과는 달리 일반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정치제도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통합은 권력이나 이해관계를 계층이나 지역, 세대별, 이념집단 간에 단순히 분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을 제도적으로 골고루 섞는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사회는 단순히 이해관계의 총합이라기보다 가치공동체이기도 하다.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책임과 도덕적 유대에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의 구성원이 특정 가치에 동의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은 강한 결집력과 귀속감으로 보유하게 되고, 이는 사회통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통일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합의지 영역에서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남북한 통일을 이룸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통일문제에서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합의사항, 통일을 위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경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통합역량 영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삶의 질,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정치이념성향,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한국 사회의 갈등, 한국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의 공존성에 대한 태도,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경직성, 통일 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각과 통일 후 남북한 주민 통합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는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지와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는 정도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추가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 역시 고려하였다. 다양한 변인들의 숨은 관계를 찾아내는 의사결정나무분석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도,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북한을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정도, 그리고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조합하여 통일 필요성의 인식 유형을 13개(합리적 통일지향형, 개인적 실리주의형, 국가실리주의-필요형, 국가우선형(애국주의형), 국가우선 중간형, 합리적 향수형, 향수형, 애매모호형, 개인우선형, 이기주의형, 국가실리주의-불필요형, 부담형, 국수주의형)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함의를 위한 정책은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한 왜곡된 진단과 분석은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은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필요함(원함)’ 또는 ‘필요하지 않음(원하지 않음)’의 단선적인 구분에 근거해 조사였다. 이러한 단선적 구분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1~2년 차 및 3년 차 연구는 통일, 남북통합, 그리고 통일과 남북 통합을 추구하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일 정도로 다층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에서 밝힌 통일, 남북통합, 그리고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다층성은 ① 통일에 대한 이중적 태도,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 ③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0%를 넘었지만 통일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통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이 현안이 아니며 통일보다 경제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며, 통일을 위한 작은 희생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즉 정서적, 도덕적으로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편익을 포함하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이다. 또한 심층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13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다. 선행 연구나 통일에 대한 통념이 가정하는 ‘필요-불필요’의 유형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관여정책만을 지지하거나 압박정책만을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보다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더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통일에 대해 도덕적, 정서적, 더 나아가 당위적인 가치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편익, 현실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통일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강요는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 관여정책만을 강조하거나 압박정책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국민들의 인식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한의 특수한 환경은 전통적 서구 사회의 ‘매파-비둘기파’ 정책의 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적대의 대상인 동시에 하나의 민족, 즉 협력의 대상이라는 두 모순되는 인식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국민협약’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통일·대북정책의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통일국민협약’에 대한 최근 논의는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합의체 구성, 합의체 참여 주체, 제도화의 방식 등 하드웨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일국민협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타협이 필요한지,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대북정책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 즉 통일·대북정책에 따른 갈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우선이다.

본 연구는 통일과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복잡한 양상의 근본 원인 역시 탐색하였다. 통일·대북정책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것이다. 즉 ‘통일국민협약’과 같은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내용의 합의가 되어서는 안되며, 통일·대북정책의 방향과 같은 표면적 지향성의 합의 역시 지양해야 한다. 통일·대북정책 갈등의 핵심인 대북인식,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은 국민공감대 강요로 그칠 수밖에 없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3년 차 연구의 두 번째 정책적 함의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대북정책의 스펙트럼의 넓어졌다는 것이다. 통일·대북정책은 일반적으로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의 틀에서 이해되어 왔다. 반면 본 조사의 연구 결과 우리 국민은 인도적 지원 정책과 대북 사업 정책을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을 압박정책 또는 관여정책의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에 비교적 독립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즉 인도적 지원 문제와 대북사업을 한반도 정세와는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정책과 대북사업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대북사업 재개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분화는 정책 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는 압박 일변도 또는 관여 일변도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한 갈등적·대립적 양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의 병행이라는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국민의 눈높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기계적인 50:50의 압박과 관여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이한 두 정책에 대한 동시 선호는 국민들이 느끼는 압박과 관여의 균형 정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관여정책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면 압박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에서 상대적 불안감 발생이 가능하며 역으로 압박정책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면 관여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에서 상대적 불안감 발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압박의 이유와 관여의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간의 균형이 아닌 한반도 상황과 정책의 균형을 추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시한다면 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여정책과 압박정책을 동시에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본 조사 결과는 통일·대북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외부에서 압박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나 관여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 경우 정책 선호가 개인 내에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조하는 경우 압박정책 선호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주민의

비참한 실상을 강조하는 경우 관여정책 선호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책 선호의 변화는 국민의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압박이나 관여의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 통일·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현 한반도 상황 속에서 통일·대북정책의 관여적 측면과 압박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동시에 설명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관여 없는 압박정책의 한계, 압박 없는 관여정책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 또는 통일·대북정책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정책 홍보나 통일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수준이 아닌 대북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통일·대북정책의 4군집과 북한 인식 4군집의 대응은 통일·대북정책 선호의 근원은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압박정책과 관여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인식은 북한이 적대적 대상인 동시에 협력과 지원의 대상이라는 대북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어떠한 대북인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정복의 대상, 경쟁의 대상, 그리고 흡수의 대상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서 대북인식의 변화 역시 감지되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는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완전한 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본 연구 조사에서 관찰되고 있다. 즉 통일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다. 올바른 대북관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북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지향성을 담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와 사회갈등 수준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규칙에 따른 국정운영,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준, 지도자

의 갈등조정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본 조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통일·대북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위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지도자 개인의 역량보다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소위 ‘진보 10년, 보수 9년’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남북관계 정립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입 지점들을 밝히고 있다. 통일에 대한 13개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인 통일인식 교육 또는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통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예: 군사력, 경제력, 지정학적 이점, 무역)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거나,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적다고 생각한 경우 일자리 창출, 징병제 폐지·모병제 전환 가능 등 통일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오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 혹은 홍보의 타깃을 어떤 유형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차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들을 근거로 교육 혹은 홍보 대상을 분류하여 해당 유형에 효과적인 교육 혹은 홍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동일한 통일인식은 비효율적이고 실패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당위적 신념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런 후 통일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과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직면할 수 있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종철 외.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 편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조한범.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6.

2. 논문

- 강원택.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 권수현.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 권속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2012.
-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 김근식. “남남갈등을 넘어: 진단과 해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 김병로.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 _____. “통일의식 변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33권 1호, 2009.
-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과 평화』. 제1권 2호, 2009.
- 김상돈·서운석. “북한 및 동북아국가 인식과 남북통일 인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6권 4호, 2016.
- 김창희. “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 제15권 3호, 2010.
- 김태현·남궁곤·양유석.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3호, 2003.
- 김현정·박영옥·박상희.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4호, 2015.
-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6권 1호, 2002.
- 문승태.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예측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8권 2호, 2006.
- 박균열·조홍제·박동준. “통일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학중앙연구원원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1호, 2016.
- 박명규·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제3권 1호, 2011.
- 변창구.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남갈등의 요인.” 『통일전략』. 제11권 3호, 2011.
-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 _____. “남남갈등의 남남갈등을 넘어서.” 『진보평론』. 제30호, 2006.
-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아세아연구』. 제56권 1호, 2013.
- _____. “남북통합의 세 가지 범주: 가치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수용.”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송정호.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합의의 민주적 제도.”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2009.
- 신 율. “육구이론을 통해서 본 남남갈등.” 『한국정치학회보』. 제44권 2호, 2010.
-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권 2호, 2013.
- 이상신. “우리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론조사 데이터로 본 한반도

- 신뢰프로세스.” 『한국정치학회보』. 제47권 4호, 2013.
- _____.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 이성우. “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분쟁해결연구』. 제13권 3호, 2015.
- 이우영. “북한관과 남남갈등: 여론조사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 이주리.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兒童學會誌』. 제30권 1호, 2009.
- 이재열. “사회통합과 사회의 질.” 『보건복지포럼』. 제221호, 2015.
- 이한수·박진수. “이익을 기반으로 한 통일인식과 남남갈등.” 『국가전략』. 제22권 4호, 2016.
- 이혜주·정의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교사애착에 대한 예측변인에서의 남녀 차이.”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1호, 2012.
- 장민수·김준석.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인식에의 영향: 순차적 로짓분석과 이분산 프로빗분석의 적용.” 『한국정치연구』. 제24권 1호, 2015.
-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 정세영·김용호. “대북인식의 변화와 연속성: 스테레오타입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2호, 2014.
- 조 민.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보혁갈등을 넘어.”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제19권 1호, 2016.
-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 황지환. “북한문제 인식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통일과 평화』. 제3권 2호, 2011.
- 허태희·윤영미·윤황.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분석과 대북정책의 안정성 확보방안.” 『국제정치연구』. 제12권 2호, 2009.
- Evans, Peter.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 vol. 24, no. 6. 1996.
- Hurwitz, Jon and Mark Peffley. "How are foreign policy attitudes structured? A hierarchical mod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 4. 1987.
- Jervis, Robert. "Understanding beliefs."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5. 2006.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 Jost, John T., Alison Ledgerwood, and Curtis D. Hardin. "Shared reality,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relational basis of ideological belief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vol. 2, no. 1. 2007.
- Kunda, Ziva.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1990.
- La Porta, Rafael *et al.*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 Shafir, Eldar, Itamar Simonson, and Amos Tversky. "Reason-based choice." *Cognition*. vol. 49, no. 1. 1993.
- Zak, Paul J. and Stephen Knack.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2001.

부 록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ID	
---	------------------------	-----------	--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은 통일 후 남북한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를 포인트맥리서치(주)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남북 통합 과정과 통일 후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학술적 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표집절차에 따라 선정되었기에 저희 면접원이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조사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면접원의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집계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통계 처리됩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3.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연구주관기관: 통일연구원

조사대행기관: 포인트맥리서치(주)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 통일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주화 부연구위원 연락처 : 00-0000-0000

대행기관 : 포인트맥리서치 담당연구원: 김민경 연구원 연락처 : 00-0000-0000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지역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지역 크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만()세	1) 만19~29세	2) 만30~39세	3) 만40~49세	4) 만50~59세	5) 만60세 이상

응답자		연락처	() - () - ()
주소		면접일시	월일 / (오전 / 오후)
면접원			시분 ~ 시 분 까지 (분간)

※ 조사원은 <보기카드>를 제시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지침사항이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피면접자에게 질문과 선택지를 읽어주고, 피면접자의 응답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대한 의지

문1.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문2.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13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2)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4)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5) 좌우기간 통일에 관계되는 일을 떠올리면 나의 기분은 편안하다.	
6) 나는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	
7) 미래의 통일 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부정적이다.	
8) 통일이 되던 안 되던 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9)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할 비용보다 크다. (분단 손해 > 통일비용)	
10) 평화적 남북관계 없이도 통일은 가능하다.	
11)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12)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13)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못살아도 된다.	

문3.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입니다. 귀하는 헌법에 이 조항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 1) 알고 있었다 2) 모르고 있었다

문4.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문4.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같은 민족이니까 2)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3)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4)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5)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5.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자신,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1점)’ - ‘매우 이익이 된다(4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다소 이익이 될 것	매우 이익이 될 것
	1	2	3	4

	응답칸		응답칸
1) 대한민국 국가 전체		3) 북한 주민	
2) 자기 자신			

문6. 통일시기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2)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3)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문7. 통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 2)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
3) 기타(구체적으로)

문8.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2) 정부와 시민 단체 간 협력 강화
3) 언론의 민족 화합 지향적 보도 4)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
5) 통일교육 확대 6) 기타 (구체적으로)

문9. 귀하가 생각할 때 다음 중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북한의 경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중국과 미국의 협力が 이루어져야 한다
6) 남한의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

문10.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보 기	전혀 자랑스럽지 않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음	다소 자랑스러움	매우 자랑스러움
	1	2	3	4

문11. 귀하는 다음의 각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에 대해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점)' - '매우 자랑스럽다 (4)'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자랑스럽지 않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음	다소 자랑스러움	매우 자랑스러움
	1	2	3	4

	응답칸		응답칸
01) 민주주의 발전		06) 스포츠	
02) 국제사회에서 위상		07) 예술과 문화	
03) 경제성장		08) 군사력	
04) 사회보장		09) 역사	
05) 과학기술의 발전		10) 공정한 사회적 대우	

문12.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5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나는 정부의 결정에 때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나의 헌신은 언제나 강하다.	
2) 나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3) 나는 태극기가 필력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4)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정체성(나는 누구인가?)에 중요한 부분이다.	
5) 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강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	

문13.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5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나는 내가 한민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	
2) 나는 훌륭한 한민족이 되고 싶다.	
3) 나는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 누군가 한민족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5)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	

문14.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5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통합 역량

문15. 귀하는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다(0점)' - '매우 신뢰할 수 있다(10점)' 사이에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보통■■■■■■■■■■▶	매우 신뢰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16. 귀하는 한국 사회의 다음 각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각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전혀 신뢰할 수 없다(0점)' - '매우 신뢰할 수 있다(10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보통■■■■■■■■■■▶	매우 신뢰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응답칸		응답칸
01) 대통령		07) 언론	
02) 행정부		08) 시민단체	
03) 사법부		09) 군대	
04) 국회		10) 종교단체	
05) 정당		11) 노동조합	
06) 대기업			

문17.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5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2)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	
4) 이타주의, 즉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	
5)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	

문18. 아래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 단체에 소속되어 얼마나 활동하고 계십니까?

각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정도를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소속된 적이 없음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음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함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함
	1	2	3	4

	응답칸		응답칸
01) 정당 등 정치단체		06) 봉사단체	
02) 시민단체		07) 친목단체 (향우회, 동창회 등)	
03) 노조		08) 예술, 스포츠 또는 교양 교육 단 체	
04) 경영자 단체		09) 기타 모임이나 단체	
05) 종교단체			

문19. 귀하는 매월 어느 정도 기부(종교적 기부, 현금 등 제외)를 하고 계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부를 하고 있지 않다
- 2) 1만원 이하(1원-10,000원)
- 3) 1만원 초과~3만원 이하(10,001원-30,000원)
- 4) 3만원 초과~6만원 이하(30,001원-60,000원)
- 5) 6만원 초과~9만원 이하(60,001원-90,000원)
- 6) 9만원 초과(90,001 이상)

문20. 귀하는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지난 한 해 동안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졌거나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 기	부패 수준이 매우 낮아짐	부패 수준이 다소 낮아짐	변함없이 그대로임	부패 수준이 다소 높아짐	부패 수준이 매우 높아짐
	1	2	3	4	5

문21. 귀하는 한국 사회의 다음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어느 정도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직업에 대해 '부패한 사람이 전혀 없다(1점)' - '모두 부패하다(4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없다	소수이다	대부분이다	모두이다
	1	2	3	4

문26. 현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0점) - ‘매우 민주적이다 (10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보통-----→	매우 민주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7.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8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2)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3)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되는 법이다.	
4)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6)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다.	
7)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이다.	
8)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	

문28.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7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 및 사악함을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정부와 종교계의 적절한 권위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든다.	
3)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국민권익)'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5)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6)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일치단결하여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문29. 귀하는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1점)' - '매우 찬성한다(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반대한다	약간 반대한다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다소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1	2	3	4	5

	응답 칸		응답 칸
1) 다양한 인종의 공존		3) 다양한 문화의 공존	
2) 다양한 종교의 공존			

문30. 귀하는 여러 민족 출신 귀화자가 증가한다면 국가의 결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약화된다	약간 약화된다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는다	다소 강화된다	매우 강화된다
1	2	3	4	5

문31.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7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	
2)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	
3)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4)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5) 나(나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나(나의 가족)의 노력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	
6)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	
7)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획득하였다.	

통일 국가에 대한 비전

문32. 귀하는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체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2	3	4

문33.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갈등에 대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1점)' - '지금보다 매우 더 나아질 것이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지금보다 매우 더 심각해질 것임	지금보다 약간 더 심각해질 것임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임	지금보다 약간 더 나아질 것임	지금보다 매우 더 나아질 것임
	1	2	3	4	5

	응답칸		응답칸
1) 계층갈등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	3) 세대갈등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
2) 이념갈등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	4) 남북 지역 간 갈등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

문34. 귀하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음 사안들이 얼마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안에 대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1점)' - '매우 장애가 된다(4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음	별로 장애가 되지 않음	다소 장애가 됨	매우 장애가 됨
	1	2	3	4

	응답칸		응답칸
1) 의사소통의 어려움		3) 소득 수준의 차이	
2)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		4)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	

문35. 귀하는 통일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 1) 경제성장 | 2) 안보 | 3) 복지 |
| 4) 지역 균형 발전 | 5) 사회 안정 | 6) 민주주의 발전 |
| 7) 국민 화합 | 8) 과거 청산 | 9) 기타 (구체적으로) |

문36.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문36-1. 1) 높은 경제성장 2) 직장/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사원/시민 참여 확대
3) 국방 강화 4)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보호/아름답게 하는 일

1순위		2순위	
-----	--	-----	--

- 문36-2. 1) 언론 자유 확대 2) 물가 상승 억제
3) 정부정책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4) 사회 질서 유지

1순위		2순위	
-----	--	-----	--

- 문36-3. 1) 경제안정 2) 더욱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3) 범죄 소탕 4) 돈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로의 발전

문37. 통일된 후 국가/국민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지침이 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가치에 대해 0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가치, 7점은 가장 중요한 가치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가치	←-----보통-----→	가장 중요한 가치
0	1	2
3	4	5
6	7	

	응답 칸		응답 칸
1) 국가 안보(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	<input type="text"/>	8) 정직한 (거짓없는, 진실한)	<input type="text"/>
2)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input type="text"/>	9) 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input type="text"/>
3) 해를 끼치지 않는 (남에게 피해 안주기)	<input type="text"/>	10)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input type="text"/>
4) 평등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input type="text"/>	11) 삶을 즐기기 (먹거리나 성생활, 레저생활을 즐기기)	<input type="text"/>
5) 마음이 넓은 (나와는 다른 사상 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input type="text"/>	12) 변화 있는 생활 (도전적인 생 활, 새로운, 변화)	<input type="text"/>
6) 사회정의 (불의를 바로잡음, 약 자를 보살핌)	<input type="text"/>	13. 소속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 는 느낌)	<input type="text"/>
7) 도움이 되는 (타인의 복지를 위 해 일하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문38. 귀하는 만약 통일이 될 경우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절대 이사하지 않는다 2) 가급적이면 이사하지 않는다
3) 불가피한 경우 이사한다 4) 기꺼이 이사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

문39.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2	3	4

문40. 귀하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다음 중 어느 매체에 가장 많이 의존하십니까? 1순위와 2순위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1) 지상파 TV(KBS, MBC, SBS, EBS 등) | 2) 종편 TV(JTBC, TV조선, 채널A, MBN) |
| 3) 케이블 TV(연합뉴스, YTN 등) | 4) 신문(중앙지) |
| 5) 지역신문(지방지) | 6) 잡지 |
| 7) 인터넷(포털, 블로그) | 8) 라디오 |
| 9) SNS(트위터, 페이스북) | 10)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 |
| 11) 팟캐스트 |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문41.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10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동의한다
012345678910		

	응답간		응답간
1) 지원대상		3) 경제대상	
2) 협력대상		4) 적대대상	

문42. 귀하는 현재 감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43. 귀하는 위 질문과 관계없이 현재 감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44.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7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2)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3)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4)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5) 북한에서 조만간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6)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보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할 것이다.	
7)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	

문 45. 아래에는 귀하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7개 문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 (5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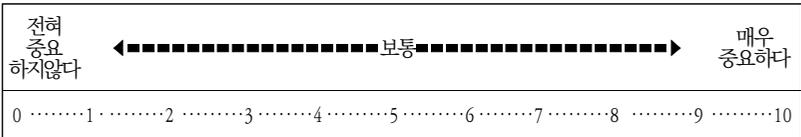
보기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다소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항 목	응답 칸
1)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그녀를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2) 나와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이 내 옆집으로 이사 오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3) 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표출하는 것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난다.	
4)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폭력사건이 많이 생길 것이다.	
5)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6) 북한이탈주민이 학교, 사업, 주거지역에서 남한 주민과 섞이는 것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남한 주민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48. 향후 북한에 대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 2)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제재는 지속해야 한다.
- 3)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한다고 약속하면 제재를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 4)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한다고 약속하면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제재는 지속해야 한다.
- 5)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 남북대화는 의미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문49. 다음 대통령이 국정운영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덕목으로 아래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항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 - '매우 중요하다 (10점)' 사이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응답 칸
1) 확고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input type="text"/>
2) 갈등조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input type="text"/>
3)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input type="text"/>
4)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input type="text"/>
5)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외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input type="text"/>
6)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input type="text"/>

문50. 다음 두 주장 중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둘 중 한 주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보기	주장 1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장 1에 다소 동의한다	주장 2에 다소 동의한다	주장 2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 2 3 4

항 목	응답 칸
1) 주장 1. 정당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주장 2. 유권자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당이 필요하다.	
2) 주장 1.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항상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주장 2. 선거가 끝나면, 야당과 정치인들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3) 주장 1.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선출되었으므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 2.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4) 주장 1.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도록 선출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을 준수할 필요 없다. 주장 2. 대통령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판결일지라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핵위협 지각

문51. 귀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1) 조만간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2)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3)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52. 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걱정한다	매우 걱정한다
보기	1	2	3	4	5

문53.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관심(이야기, 기사나 책읽기, TV 시청하기 등)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생각한다	매우 생각한다
보기	1	2	3	4	5

DQ11. 귀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부부합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_____만원

DQ12. 귀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 기	매우 불만족한다	약간 불만족한다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DQ13.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 가정의 소득 수준은 평균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보다 훨씬 낮다	평균보다 약간 낮다	평균과 비슷하다	평균보다 약간 높다	평균보다 훨씬 높다
1	2	3	4	5

DQ14.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가정 경제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년 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1년 전보다 약간 나빠졌다	1년 전과 비슷하다	1년 전보다 약간 좋아졌다	1년 전보다 매우 좋아졌다
1	2	3	4	5

DQ15.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년 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1년 전보다 약간 나빠졌다	1년 전과 비슷하다	1년 전보다 약간 좋아졌다	1년 전보다 매우 좋아졌다
1	2	3	4	5

DQ16.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고 해당번호를 골라주세요)

- 01) 농업/수산업/축산업
- 02)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택시 운전사 등)
- 0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04) 기능/숙련공(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 05)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기술직, 교사, 회사소속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06)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 07)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 08) 전업주부
- 09)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10) 군인/경찰
- 11) 무직, 정년, 휴직
-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DQ17. 한국 사회의 계층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나눈다면, 귀하의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하층의 하 2) 하층의 상 3) 중간층의 하
- 4) 중간층의 상 5) 상류층의 하 6) 상류층의 상

DQ18.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동안 사셨던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 16) 제주 17) 북한 18) 외국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론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는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안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5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규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합의(1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합의(2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3/3년차)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일연구원

